

체제전환 비용 ·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 박형중 · 성원용
이은구 · 최우익

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11-02

체제전환 비용 ·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 박형중 · 성원용
이은구 · 최우익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ISBN 978-89-8479-639-3 93340

가 격 ₩10,5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
I. 서론	1
II.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 헝가리 사례	7
1. 정치민주화 과정	10
2. 정치민주화 평가	17
3. 다당제 및 의회민주주의의 평가	22
4. 국가의 탈정치화	32
5. 지방자치의 발전	40
6. 시민사회의 발전	45
7. 일반국민의 정치의식	49
8.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 평가	59
III. 러시아 시장경제화의 비용·편익	69
1. L-S-P 체제전환 프로그램과 J-curve	71
2. 체제전환의 성과에 대한 평가 -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74
3. 시장개혁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침식	100
4. 비용·편익 분석의 제문제	112
5. 체제전환시기 비용의 발생과 시사점	120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IV. 러시아 사회체제전환의 비용·편익	125
1.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과 비용·편익 개념의 문제	128
2.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과정과 단계	131
3.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양상과 결과	144
4. 비용·편익 범주 고찰	169
V. 결론	173
참고문헌	18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9



표 목 차

<표 II-1>	체제전환 국가의 민주화 지수 비교(2009년 현재) ……	18
<표 II-2>	헝가리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수준에 대한 평가 ……	21
<표 II-3>	헝가리 정치민주화 초기 주요 정당의 성향 비교 ……	23
<표 II-4>	1990년 이후 동유럽 국가의 정당 난립 현황 ……	24
<표 II-5>	헝가리의회의 의석 분포 변화(1990~2002년) ……	26
<표 II-6>	헝가리의회의의 연평균 통과법안 수 ……	28
<표 II-7>	체제전환 전·후 헝가리의회의 의원의 출신배경 비교 ……	31
<표 II-8>	헝가리의회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변화(%) ……	31
<표 II-9>	체제전환 직전 Nemeth내각·1990년 Antall 내각· 1994년 Hohn 내각의 각료사항 비교 ……	33
<표 II-10>	체제전환국가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 비교 ……	41
<표 II-11>	폴란드와 체코의 지방선거 결과 ……	43
<표 II-12>	헝가리 지방선거 결과(1990년) ……	44
<표 II-13>	폴란드·체코·헝가리 지방자치제 도입의 특징 비교 ……	45
<표 II-14>	체제전환국가의 시민사회 발전 수준 비교 ……	47
<표 II-15>	NGO 재정 수입 구성 비교(%) (1995/96) ……	48
<표 II-16>	NGO 상임활동가의 출신배경 구성 비교(%) (1995/96) ……	49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표 II-17> 사회주의 당시 당의 역할에 대한 헝가리 국민의 인식(1974년)	51
<표 II-18> 자유·평등·공정선거의 비용·편익	61
<표 II-19> 국가의 탈정치화의 비용·편익	64
<표 II-20> 지방자치제의 비용·편익	65
<표 II-21> 시민사회의 비용·편익	66
<표 II-22> 국민 정치의식의 비용·편익	67
<표 III-1> 기업 간 거래에서 바터거래의 비중	81
<표 III-2> 1992~2000년간 러시아산업에서의 결제 구조	85
<표 III-3> 러시아의 對원외국가 수출의 상품구조 (전체대비 %)	87
<표 III-4> 경영형태별 농업생산구조 (실제가격 기준, 전체대비 비중 %)	93
<표 III-5> 전체 대비 주민농의 품목별 농업생산 비중(%)	94
<표 III-6> 전체 대비 주민농의 가축 보유 비중(%)	95
<표 III-7> 국가기관의 행정적 장벽·일상적 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러시아 업계의 지출 비용(2000년)	99
<표 III-8> 기업 형태별 러시아의 노동력 배분 구조	102
<표 III-9> 고용지위 및 사회그룹별 고용인구 구조(%)	103
<표 III-10> 러시아의 실업률(%)	104
<표 III-11> 러시아인의 화폐소득 구조(%)	106



표 목 차

<표 III-12>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인구 변화 추이	110
<표 IV- 1> 2000년대 매년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	147
<표 IV- 2> 소득순위 20% 집단별 소득총액 비율(%)	156
<표 IV- 3> 러시아 주민들의 일인당 월평균 소득 및 최저생계비	157
<표 IV- 4> 각 사회계층 비율 및 월 소득 규모에 대한 연구사례	163
<표 IV- 5> ‘작년에 비해 당신과 가족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	167

그림 목 차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그림 II-1> 정치민주화의 설명 틀	10
<그림 II-2> 정치민주화 4가지 경로 시나리오	20
<그림 II-3> 동유럽 정당정치 특성 변화	27
<그림 II-4> 헝가리 상공 관련 정부부처의 변천과정	37
<그림 II-5> 헝가리 당·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	40
<그림 II-6> 사회주의체제 포기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52
<그림 II-7>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53
<그림 II-8>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54
<그림 II-9> 시민단체 활동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55
<그림 II-10>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56
<그림 II-11> 향후 정치민주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57
<그림 II-12> 지향하여야 할 국가체제의 성격	58
<그림 II-13> 향후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핵심 기관	58
<그림 III-1> 체제전환-구조개혁-생산변동의 연관관계	72
<그림 III-2> J-curve	73
<그림 III-3> 1990년 대비 러시아의 실질GDP 비중의 변화 (1991~2004년)	76




그림 목 차

<그림 III-4> 러시아경제의 GDP 증가율	76
<그림 III-5> 1990~1998년 GDP 감소 요인에 대한 평가	77
<그림 III-6> 1990년 대비 러시아의 실질 총투자 비중의 변화 (1991~2004년)	78
<그림 III-7> 권역별 기계·연료·금속의 수출비중(1999년)	88
<그림 III-8> 러시아의 석유·석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 비중	89
<그림 III-9> 1990~2001년간 산업별 자본투자 비중 (경상가격 기준, %)	90
<그림 III-10> 월평균 소비재가격 인상률(1991~1995년)	107
<그림 III-11> 러시아의 1990년 대비 월평균 임금변화 추이 (1992~2004년)	108
<그림 III-12> 러시아인의 주요 화폐소득의 변화 추이 (1992년 기준)	109
<그림 III-13> 러시아의 인구 증감(1994~2004년)	111
<그림 III-14> EBRD의 TPI 지표	113
<그림 IV-1> 1990~2000년대 국제이주민의 유입과 유출	148
<그림 IV-2>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비용·편익 범주	170

요 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에 해당하며, 사회주의독재체제에서 시장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전환의 핵심영역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이다. 이를 위해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획일적 전체주의에서 자유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의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의 효율성에 의존하게 된다.

정치분야 체제전환 비용·편익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영역은 다당제 영역이며, 이는 선거제도, 정치적 다원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을 포함한다.

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편익으로는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

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편익으로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의회의 원이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의회의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당내 주요 인물이나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당내 민주화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의 영역에서도 편익이 발생한다. 사법부가 집권당이나 여타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평등한 법의 적용에 의해 평등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테러, 불법적 감금, 추방, 고문 등으로부터 일반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문화적 표현이 자유로워지며, 언론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감시 기능과 정보의 확산이 강화된다. 또한 학문과 교육의 자유가 확대되어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 반면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여행, 주거지, 직업선택 등에 있어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양성 평등, 동성결혼, 출산 등 개인의 사회적 자유가 높아진다.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은 국가의 탈정치화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의 편익으로는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정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향상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미루게 되어 행정권한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원의 전문성은 낮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

국가의 탈정치화는 국가관리능력의 향상을 수반하며, 이의 편익으로는 행정관료가 정치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정부조직이나 인력으로 인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행정조직이 간소화되고 의사결정과정도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반면 정치변혁에 의해 새로 구성된 정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집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조직 내에 신·구 공무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공백상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주의식 중앙·지방 관계의 폐지를 가져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

방자치제의 편익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선거의 실시로 새로운 지방정치 엘리트 집단이 육성된다. 셋째, 지역의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넷째, 지역의 주요 공직자 및 권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방지될 수 있다. 반면 독립성을 보장받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개혁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구 공산당계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구 공산당 세력의 잔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가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 각 영역에 잠재해 있는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여 국가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가행정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가 분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성 정치엘리트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사회의 비용으로는 첫째, 동유럽 NGO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NGO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 NGO활동가들이 NGO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NGO들은 시민사회의 대리자로서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적 감시

를 대리해야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NGO들은 정치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국민적 내면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정치의식은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견고성과 발전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민 정치의식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폐기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도 정치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동유럽 정치민주화는 향후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체제 당시 일반국민들은 국가의 온정주의를 용인하고 오히려 국가의 온정주의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온정주의는 매우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형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가치 체계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민 정치의식의 비용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당시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일반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의식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선호체계를 갖게 되어 선호체계가 다른 집단 간에 정치적 분열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배외주의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에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제분야 체제전환 비용·편익

경제체제전환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체제 ‘전

환' 이후 시장개혁을 진행하기에 앞서 뒤따르는 전환 비용·편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사유화와 같은 법률적 시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자연발생적인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불균형적인 초기조건 하에서 선진국 경제에 맞추어진 거시경제정책은 비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행동규범의 형성, 즉 제도적 뒷받침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으로 제도를 이식하는 것은 제도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특히나 사려깊은 행동을 요구한다. 다섯째, 전환 개혁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국가의 구축이다. 국가는 단지 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중앙보다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대리자들에게 자신의 전권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전환의 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GDP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생산감소 현상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가들마다 생산감소의 폭은 천차만별인데, 특히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생산감소 현상이 가장 적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15%에 불과했다. 체제전환 개혁의 급진성이 클수록 생산감소의 폭이 크다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곧바로 침체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후 가파른 성장속도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 감소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은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에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37.7%까지 급증했다. 물론 IMF 위기와 함께 찾아온 모라토리엄의 여파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해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하락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투자부문에서 새로운 제도 구축으로 자원의 이전 발생, 전통적인 경제메커니즘의 해체, 기업사유화, 새로운 은행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과세체계의 도입 등은 자원 배분의 전환을 동반하고,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구체제의 해체가 먼저 가속화되고, 또한 균형점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간 행동의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행의 기간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균형을 찾으려는 탐색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만, 상품 수요 및 가격 등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행기의 지대(rent)는 재분배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에서 지대소득은 도매-소매 가격차, 국내-대외교역 가격차에서 발생했고, 이것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중앙집중적으로 재분배되었다. 문제는 가격자유화로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있었다. 체제전환기에는 국가 대신 기업이 지대소득을 취하게 되고, 참여한 지대 추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비용의 현저한 증가를 낳게 된다. 소득 분화의 급격한 증가세와 거대한 지대소득의 발생은 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부채질한다.

체제전환의 비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의 문제이다. 흔히 시장관계로의 전환과 관

런해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이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것처럼 사
고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행동규범이 장기간에 걸쳐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체제전환이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하
게 되는 자유화는 국가가 이행기의 지대 수취를 박탈하는 특별한 조치
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이
거대한 전환 비용을 구성하게 된다. 흔히 체제전환기에는 시장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효과적
인 시장제도의 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폭넓게 채택되는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들이 제도적 목표와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연체 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파산법의 적용이
무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사유화
가 효율성을 증대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가 지
분을 소유한 개방형 주식회사제도로의 변화는 과잉노동력의 해고나
경영자의 교체를 곤란하게 하고, 수직적 연계가 강한 기업들의 사유화
는 오히려 독점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체제전환과 같은 거대한 시장개혁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그 시장개혁의 목표가 과거와는 전
혀 다른 차원으로 관리의 탈중앙집권화를 지향하거나, 따라서 원론적
으로는 국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부닥치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가 ‘강한’ 국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효율
적인’ 국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분야 체제전환 비용과 편익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구학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규모는 약 680만 명이 축소되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또한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인구의 30%가 2003년 당시 최저생활비 800루블 미만의 소득수준을 지냈다. 러시아 인구의 10%는 소비품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80%는 굶주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렸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수많은 산업체의 폐쇄와 대량 실업 현상이 나타났으며, 월급과 연금의 지불이 중단되곤 하였으며,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시스템이 매우 악화되었다. 특히 젊은세대에서 출생률이 저하하였고, 영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아이들의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있고, 건강한 징병검사 합격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대중적 저항운동이 발생하지만 당국의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가 부재하였다.

체제전환기 사회부문의 중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부패 및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한 관료의 부패 및 경제와 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이슈는 대중매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경제영역의 범죄화는 지하시장 및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40~50%가 지하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실상 경제에 대한 느슨하고 허술한 국가의 통제력에 있다. 국가적 부패 현상은 단지 널리 확산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체계로 유기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국민 다수의 급속한 영락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다수 기업의 파산, 실업자 발생, 병적인, 투기적인 경제행위 등의 출현에 기인하여 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경우 가장 부유한 층 10%와 가장 빈곤한 층 10%의 총소득을 비교하면 1:15.5로 평가된다. EU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3이다. 국민의 1/3이 사실상 빈곤한 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연금생활자, 다자녀가정, 실업자뿐 아니라, 낮은 봉급을 받는 고등교육자(선생님, 의사 등)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사회 발전의 지표상에서 지역 간의 차별적 현상이 나타났다.

체제전환의 사회적 비용과 아울러 몇 가지 점에서 의미있는 편익의 범주들이 나타났다. 우선 시장경제의 적응과 중간계층의 형성을 주목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하층은 60.2%, 중간계층은 33.9%, 상층은 5.9%로 나타나면서 중간계층의 성장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2007년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주변적인’

중간계층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층만도 25%를 넘으면서 모두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내면적인 연구 결과 이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까지 기대되는 평가가 나왔고, 게다가 이들은 모스크바뿐이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다. 사회계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선두 역할을 하는 찌호노바 역시 2007년 시점에서 하층은 38~40%, 상층은 5~7%, 나머지 중하층을 포함하여 중간층은 약 55%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들어와 중간계층은 일정한 형성 단계를 넘어서서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의 중요한 집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계에서 다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중간계층의 존재는 향후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장경제하 러시아인의 보편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원천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현실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소련시대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와해된 상태이다.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사회보장 제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현실성이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분야에서 유효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는 세금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는데, 2001년부터 통일된 13%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기업체의 세금인하 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누적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이 마련되었다. 2001~2003년에는 토지매매법이 채택되었으며, 새로운 세관법과 노동법도 채택되었다.

20세기 말 가속화된 지구화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이주를 포함하여 대규모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부’ 국가의 빈

곤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주변부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묘한 이주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다. 그것은 ‘주변부’ 국가에 특징적인 ‘두뇌 유출’ 현상과 독립국가연합, 중국, 베트남, 몽고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미숙련 노동력의 이주 흐름이다.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문맹 및 미숙련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지출로 인해 아직 경제성장이 보장되기보다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미 러시아는 지구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고립되거나 차원이 다른 나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 비용·편익과 남북통일 비용·편익은 유사성과 아울러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주주의·시장경제형 통일을 지향하는 바, 민주화·시장화·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민주화·시장화·자유화 과정의 비용·편익을 계산하지만 남북통일의 경우 북한지역 자체의 체제전환 효율성 이외에 통합과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측정지표가 되며, 남한경제에 대한 영향 및 통합국가의 발전 전략상 효율성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북통일의 경우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와 달리 통합효과 및 만족도 평가에 있어 남북한이라는 상이한 주체에 의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체제진환 비용 · 편익 사례연구

20세기 말 진행된 공산권사회의 전반적 붕괴는 스탈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전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소수의 국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사실상 시장경제체제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북한은 시장과 계획이 혼합된 생존 경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류가 실험했던 현실 사회주의는 더 이상 전망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기존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남북통일은 방식 여부를 떠나 시장화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며, 경제영역의 시장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 역시 스탈린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소련·동유럽에서 진행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은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소련·동유럽체제 역시 스탈린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해체하고 시장체제를 형성하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사회주의독재체제에서 시장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 영역은 경제적 시장화를 필두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포함한다. 경제분야에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

I
II
III
IV
V

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체제로 전환이 주요한 체제전환의 목표가 된다. 사회적으로는 획일적 전체주의에서 다원주의적 문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산이 주요한 과제가 해당한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비용·편익의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의 진전 정도와 효율적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시장화·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주요한 통합과제도 북한지역의 시장화·민주화·자유화이며, 이는 북한체제의 탈사회주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통일 비용·편익 역시 상당 부분 북한지역의 탈사회주의적 체제전환의 효율적 추진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의 사례는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 개념과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은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자유화의 달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경우 북한지역 자체의 체제전환 효율성 이외에 통합과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측정지표가 되며, 남한경제에 대한 영향 및 통합국가의 발전 전략상 효율성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북통일의 경우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와 달리 통합 효과 및 만족도 평가에 있어 남북한이라는 상이한 주체에 의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경험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소련·동유럽 체제와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들에 처

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체제개혁의 과정과 경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경험은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 및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수준, 발전 정도는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의 선택 및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적 발전단계에 도달해있던 소련·동유럽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경험들은 북한체제에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개념이해를 위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수행한 각 국가들은 여러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적 차이와 아울러 각 국가가 도달한 사회주의적 발전의 정도도 달랐다는 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경험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및 남북통일과정의 비용·편익 개념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체제전환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가 어려운 한계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러시아의 사례를 참조했으며, 정치분야의 경우 헝가리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련·동유럽은 북한과 스탈린주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II.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 헝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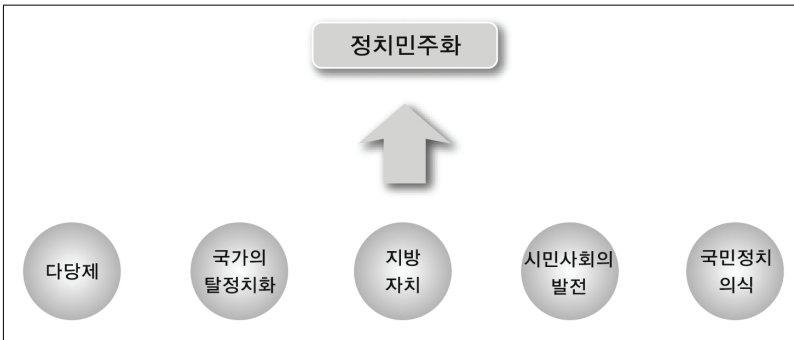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민주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치민주화의 개념 자체가 복합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영역 자체가 여타 영역과 상호연관성이 강함에 따라 정치민주화의 범위가 동유럽에 있어서는 특히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민주화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그 비용·편익을 진단한다는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한 채 본 연구에서는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평등선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다당제의 정착과 의회민주주의의 실현 여부, 둘째, 사회주의체제에서 당에 종속된 국가가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당으로부터 독립하여 탈정치화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셋째, 지방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의 도입 및 발전에 대한 평가, 넷째, 정당과 국가를 견제하고 이들과 긴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 여부, 다섯째, 이상과 같은 외형적, 제도적 측면과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로 성숙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물론 이상의 5가지 측면에서 동유럽 정치민주화를 평가하고 그 비용·편익을 추출해 낸다는 것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민주화의 일부에 한정된 연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향후 진행될 후속 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한편,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추출해 내는 작업 역시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즉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정치적 문제에 대입하여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편익으로 보고 무엇을 비용으

I
II
III
IV
V

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유럽 정치민주화를 평가하고 그 성과는 편익으로 삼으며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비용으로 삼으려 한다.

●그림 II -1 정치민주화의 설명 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 가운데 정치민주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정치민주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정치민주화의 5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정치민주화 과정

가. 반체제운동의 조직화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가 스탈린(Joseph Stalin)을 격하하는 연

설을 한 것은 예기치 않게도 헝가리의 반체제운동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모스크바의 탈스탈린화에 고무된 헝가리 반체제 지식인과 학생들은 1956년 10월 23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체제시위를 주도하면서, 개혁정책을 주장한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임레 나지(Imre Nagy)의 복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의 무력 침공으로 반체제시위는 진압되었으며, 모스크바의 압력에 의해 헝가리 공산당을 대체하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agyar Szocialista Munkáspárt: 이하 MSzMP)이 창당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야노슈 카다르(Janos Kádár)가 당서기가 되었다.

소련에 의해 지명된 지도자라는 정통성의 문제를 인식한 카다르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독점을 국민들이 묵인해 준다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양보하겠다는 타협을 하였고, 1968년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신경제메커니즘(New Economic Mechanism: 이하 NEM)을 도입하여 시장경제 요소를 대거 도입하였다. 이후 신경제메커니즘(NEM)의 성과로 실질임금은 상승하였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서구로부터 수입되어 정부의 가격 지원 하에 저렴하면서도 풍부하게 제공되었다. 특히 계획경제체제 속의 시장경제체제라 할 수 있는 소위 제2경제(the second economy)영역에서의 활동이 용인되면서 일반국민들은 제1경제영역인 공식부문보다 오히려 제2경제영역에서의 돈벌이에 몰두하였고 실제 일반 가계 총수입에서 제2경제영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갔다.

이러한 소위 ‘카다리즘(Kádárism)’은 일반국민의 정치적 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헝가리 일반국민들은 누가 정치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헝가리에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정치적

I
II
III
IV
V

무관심은 높아가는 ‘룸펜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nization) 현상’이 심화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1970년대 후반 들어 인접국가에서 반체제운동이 표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표된 77헌장에 동조하는 34인 지식인들이 그들 스스로 민주적 반대파(democratic opposition)임을 표명하고, 시민권의 확대와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중심이 된 반정부 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체코나 폴란드와 달리 헝가리 일반국민들은 반체제운동을 위해 조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일부 민족-민주주의적 지식인 그룹이 문학잡지를 통해 팽배해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정도의 반체제운동을 진행한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헝가리 반체제세력에 대해 카다르는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 편이다.”라는 독특한 논리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반체제세력에 대한 체포나 구금 그리고 연금과 같은 억압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카다르가 반체제세력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당시 반체제세력이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특정 계층과 연대하여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반체제세력 자체가 직접적인 반정부 활동을 하기보다는 인권 및 민족 문제를 다루면서 정권에 대한 절제된 반대운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헝가리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하였는 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경제성장률은 198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날로 심각해져 갔으며, 순외채는 1983년 89억 달러에서 1987년 171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 이자 부담률은 높아갔다. 특히 국가경제의 공식 부

문이 침체에 들어서자 제2경제영역을 통해 가계 수입을 보존하려는 일반국민들의 태도로 인해 공식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경제침체의 악순환은 심화되어 갔다.

마침내 1986년 11월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문해 왔던 3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침체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헝가리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이 1차적으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과 카다르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헝가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의 발표로 인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가 당 내부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개혁파 집단은 이제 카다르식 통치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급진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당내 개혁파들이 주장한 정치개혁안은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노동당(MSzMP)의 정치적 독점화를 완화, 당내 민주화를 추진, 인권 및 시민권의 확대, 다원적 권력분립의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경제침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 외부에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였다. 사회주의 정권이 아직은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는 독립단체로서 헝가리민주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이하 HDF)이 창립되었고, 창립대회에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개혁파를 주도해 온 헝가리민족전선(Hungarian National Front: 이하 HNF)의 총비서 임레 포즈가이(Imre Pozsgay)가 축사를 하고 주요 개혁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독립적인 정치단체들이 속속 창립되

I
II
III
IV
V

기 시작하였다. 우선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산하 청년동맹에 대항하여 1988년 4월 청년민주동맹(Magyar Polgári Szövetség: 이하 FIDESZ)이 독립단체로 창립되었다. 청년민주동맹은 대학생이 주축이 된 단체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이어서 1988년 5월 1일 카다르 정권 시절 민주적 반대파였던 인물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자유이니셔티브 네트워크(SzKH)를 설립하였고, 독립노조로서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과학자민주노조(TDDSz)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다당제의 도입

카다르는 1988년 실각하였으며, 카다르의 실각 이후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보수파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 성명서는 당내 민주화, 국가기관 및 공식단체의 자율권 확보, 언론매체의 자유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으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단결과 당의 지도적 역할은 포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정치개혁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항이 새로 등장한 독립단체들에 대한 처리문제와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당내 보수파가 만든 집회 및 결사법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안보, 공공안정, 공공질서, 공공도덕을 위배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는 5일 전에 경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정당과 독립노조의 창설은 금지시켰다. 그러나 보수파가 마련한 법안들에 대해 당내 개혁파가 반대

하고 나서자 보수파는 전략적으로 한 달 여 간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와 결사는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수 없는 시민권이며, 정당이나 독립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헝가리민족전선(HNF)의 포즈가이는 공청회 결과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였고, 당내 보수파는 이러한 공청회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없었다. 더구나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부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의 지방조직들이 개혁파의 입장을 지지하자 당내 권력관계의 무게 중심은 당내 개혁파 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신생 독립단체들이 활동영역을 확대해 갔다. 1988년 9월 헝가리민주포럼(HDF)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정당으로 확대하여 지방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총선에 참여할 것임을 선포하였으며, 청년민주연합(FIDESZ)도 스스로 정치단체임을 선언하고 총선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총선 참여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1989년 11월 그동안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던 자유이니시어티브 네트워크(SzKH)도 자유민주동맹(SZDSZ)으로 변경하고 정치단체로서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외에도 1948년 이전에 연립정부에 참여한 바 있었던 독립소지주당(FKgP), 헝가리국민당(MNP), 헝가리 사회민주당(MSzDP) 등이 정당의 성격으로 창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신생 정치단체에 대해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즉 이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해체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인정하여 다당제로 이

I
II
III
IV
V

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당내 보수파는 이들을 무력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당내 개혁파는 국민들의 지지도에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이 높은 만큼 이들 정당들을 인정하고 다당제에 입각해 총선을 치르자는 입장이었다. 1989년 2월 10일과 11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는 결국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다당제의 원칙을 수용한다는 점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헝가리에 다당제가 도입되었다.

다. 사회주의체제의 종식과 자유총선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보수파는 다당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선을 통해 다시 당을 강화할 것인가에 몰두하였고 이를 위해 신생정당들을 분열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보수파는 신생정당과 개별 협상을 하는 양자협상을 통해 일부 정당을 보수파 편으로 끌어들이면 신생정당 내부에서 분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신생정당들은 이미 보수파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보수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1989년 3월 22일 8개 신생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EKA)가 설립되었고 향후 원탁회의의 입장과 성명은 참여 단체 모두의 동의하에서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헝가리 정국은 당내 보수파와 원탁회의 간의 양자 구도로 진행되었다. 양측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1989년 6월 10일 양측은 협상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국민의사의 유일한 수탁자로 선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는 바, 이는 곧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후 양측은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치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공공기관에서의 정당조직은 금지한다는 점, 각 정당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영 대중매체의 선거 중립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관련 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마침내 1990년 5월 자유총선이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예상과 달리 헝가리민주포럼(HDF)이 총 386석 중 165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 되었고, 자유민주연합(SZDSZ)이 92석으로 제1야당이 되었다. 이어 독립소지주당(FKgP)이 44석으로 제3당이 되었으며,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개혁파들로 구성된 헝가리사회당(MSZP)은 33석만을 획득하는데 그쳤으며 당내 보수파들이 잔류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은 원내진입에 실패하였다. 자유총선 이후 헝가리민주포럼(HDF)은 독립소지주당(FKgP) 및 기독교민주당(KDNP)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이로써 헝가리에서의 사회주의체제는 종식되었다.

2. 정치민주화 평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8개 체제전환 국가의 민주화 지수를 기준으로 1.00점에서 2.99점은 안정된 민주화 국가(Consolidated Democracies), 3.00점에서 3.99점은 준 안정된 민주화 국가(Semi-Consolidated Democracies), 4.00점에서 4.99점은 하이브리드 정권(Hybrid Regimes), 5.00점에서 5.99점까지는 준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 6.00점에서 7.00점

I
II
III
IV
V

까지는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으로 분류한 바 있다.¹ 이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가장 안정된 민주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민주화 국가군에 속한 8개국은 발틱 3개국을 포함해 중부유럽 지역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서유럽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준 안정된 민주화 국가군에는 주로 발칸지역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 소련연방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1 체제전환 국가의 민주화 지수 비교(2009년 현재)

안정된 민주화 국가		준안정된 민주화 국가		하이브리드 정권		준안정된 권위주의 정권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슬로베니아	1.93	불가리아	3.04	보스니아	4.25	코소보	5.07	러시아	6.14
에스토니아	1.96	루마니아	3.46	우크라이나	4.39	몰도바	5.14	타지키스탄	6.14
라트비아	2.18	크로아티아	3.71	그루지아	4.93	아르메니아	5.39	아제르바이잔	6.21
체코공화국	2.21	세르비아	3.71					카자흐탄	6.39
리투아니아	2.25	마케도니아	3.79					벨라루스	6.43
폴란드	2.32	몬테니그로	3.79					투르크메니스탄	6.50
헝가리	2.39	알바니아	3.93					우즈베키스탄	6.93
슬로바키아	2.58								

주: 민주화 지수는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며, 1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고, 7점이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평가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출처: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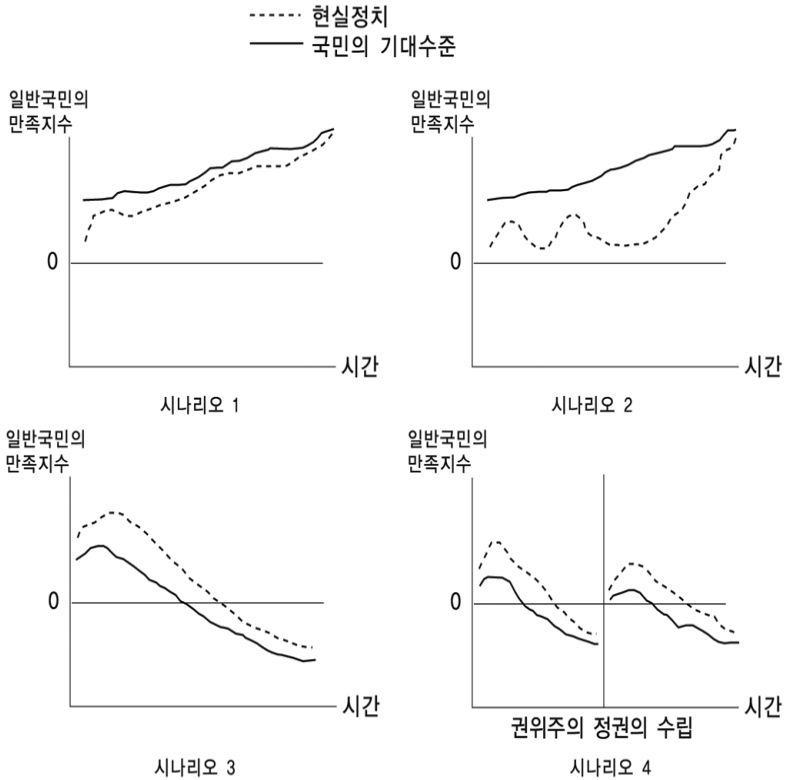
¹-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10.

일찍이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진행 과정에 대해 로즈(R. Rose)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²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로서 정치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권의 교체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정당 간 경쟁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의 정책능력이 미약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균형을 찾게 되고 집권체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만족과 만족이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체제의 정착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의 제도화 과정에서 각종 문제와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일반국민들의 불만족이 쌓이게 되고 구체제로의 회귀 심리가 점점 증가하여 모든 제도권 정치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종교단체와 같은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반국민들은 공식적인 국가제도에서 이탈하여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지하영역에서 만족을 추구하려 하며 그 결과 국가체제는 이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족 수준이 높아져 의회해산과 군사쿠데타와 같은 방법을 통해 권위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원하게 되어 권위주의체제는 해체되고 정치민주화는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본다.

²Richard Rose, "Escaping From Absolute Dissatisfaction: A Trial and Error Model of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 Vol. 4, No. 4 (1992), pp. 371~393.

I
II
III
IV
V

그림 II -2 정치민주화 4가지 경로 시나리오



출처: Richard Rose, "Escaping From Absolute Dissatisfaction: A Trial and Error Model of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4, No. 4 (1992).

이러한 로즈의 시나리오에 비추어 볼 때 안정된 민주화 국가군에 속한 8개 국가들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하이브리드 정권에 속한 국가군은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안정된

권위주의 국가군은 현재까지는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며, 안정된 권위주의 국가군은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8개 체제전환 국가 가운데 특히 헝가리의 정치민주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2>와 같이 평가된다. 헝가리의 경우 1990년 자유총선 이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2010년 현재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 II-2 헝가리의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수준에 대한 평가

분 야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2	03	04	05	06	07	08	09	10
Political Rights	4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ivil Liberties	3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Freedom Status	P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주: 분야별 점수는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며, 1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7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PF(Partly Free), F(Free)

출처: 1989~1999년 자료는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1999~2000, 2000. 2002~2010년 자료는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0.

헝가리 정치적 권리 수준의 향상 과정을 보면 1989년의 정치적 권리 수준이 4점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 자유총선으로 2점까지 개선된 이후 1993년부터 정치적 권리의 수준이 가장 높은 1점에 진입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헝가리 시민적 자유 수준의 경우 1989년에 3점 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2점을

유지하였으며, 2005년부터 선진국 수준인 1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헝가리의 경우 정치적 권리 수준이 먼저 향상되고 이후 시민적 자유 수준이 향상되어 왔으며 전반적인 정치적 자유 및 민주화 수준은 정치민주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당제 및 의회민주주의 평가

1990년 헝가리 자유총선을 즈음하여 등장한 신생정당들은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총 26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였다. 이들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인 5% 득표율을 획득하면서 원내에 진입하였는데 이들 6개 정당의 성향과 정책 노선을 요약하면 <표 II-3>과 같다.

당시 헝가리 신생정당들의 성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구분되었다. 첫째,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의 부활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가의 기준, 둘째, 일반 서민들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 및 엘리트 계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가의 기준, 셋째, 도시지역을 주요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면 농촌지역을 주요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가의 기준이다. 이를 기초로 볼 때 헝가리민주포럼(HDF), 독립소지주당(FKgP), 기독교민주당(KDNP)이 보수진영을 이루었으며, 실제 1990년 총선 이후 헝가리민주포럼(HDF)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정당들이다. 한편 헝가리사회당(MSZP), 자유민주연합(SZDSZ), 청년민주동맹(FIDESZ)은 보수진영의 3개 정당과는 구별되는 성향과 정책노선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헝가리사회당(MSZP)은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의 후계

정당이라는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당시 당내 개혁파들로 구성되어 자유주의적 좌파 정당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유민주연합(SZDSZ)과 청년민주동맹(FIDESZ)은 자유주의 정당으로 평가되면서 자유주의적 우파정당으로 분류된다.

표 II-3 헝가리 정치민주화 초기 주요 정당의 성향 비교

헝가리민주포럼(HDF) 독립소지주당(FKgP) 기독교민주당(KDNP)	자유민주연합(SZDSZ) 헝가리사회당(MSZP) 청년민주동맹(FIDESZ)
성향 및 지향가치	
기독교-민족주의 역사적 운명공동체 민족 중심의 조합주의 권위 단결위주 강한국가	서구식 민주-사회주의 시민사회 자유주의 자율 성장위주 약한국가
주요 정책	
민족주의에 기초한 기독교 중산층의 형성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생적 자본가계층의 형성 자유시장경제

출처: Gyorgy G. Markus, "Parties, Camps and Cleavages in Post-Communist Hungary. Is the Weakness of Social Democratic Forces System?," in Gyorgy Szoboszali (ed.), *Flying Blind: Emerging Democracies in East-Central Europ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Yearbook, 1992), p. 339.

헝가리 다당제에 대한 평가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의 1당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해 많은 신생정당들이 정치영역에 대거 진입하여 정당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각 정당들이 유권자인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자의 역

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헝가리 정당들이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기반으로 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³ 이러한 의문은 일단 1989년 이후 헝가리에서 정당으로 등록된 단체가 무려 2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정당 난립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군소정당의 난립 현상은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으로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헝가리 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 표 II-4 1990년 이후 동유럽 국가의 정당 난립 현황

국 가	정당 수	국 가	정당 수
리투아니아	37	폴란드	36
슬로베니아	35	라트비아	34
루마니아	30	슬로베니아	29
에스토니아	28	체코공화국	26
불가리아	26	헝가리	17

주: 여기서 정당 수는 1990년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적어도 1%의 득표율 혹은 최소 2석의 의석을 한번이라도 획득한 정당을 의미한다.

출처: Richard Rose and Neil Munro, *Parties and elections in new european democracies* (Washington, D.C.: CQ Press, 2003), p. 25.

이러한 군소정당의 난립 현상에 대해 셰플린(G. Schopflin)은 체제 전환기 동유럽 정당정치 공통점은 각 정당의 조직이 당원 간의 정책

3. 헝가리 일반국민의 정당가입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헝가리 학술원의 Agnes Utasi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 현재 국민의 2.1%가 정당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정당가입률은 2.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문가 집단 중 변호사가 많은데 전체 변호사의 10%정도가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감정적이고 애매모호한 가치에 기초한 결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⁴ 즉 정당정치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공동의 적이었던 공산당 체제가 와해된 이후 정당의 난립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정치적 분절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폴란드의 자유노조, 체코의 시민포럼, 불가리아의 자유민주연합과 같이 탈사회주의 개혁을 주도해 온 중추적 구심 세력이 없었고, 이러한 구심 세력이 자유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집권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 역시 정치적 분절화의 원인이 되었다.⁵ 따라서 우파개혁정당의 취약한 지지기반과 신생정당 간의 분절화 현상에 의해 1994년 제2기 총선에서 헝가리사회당(MSZP)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헝가리 제3기 총선인 1998년 총선에 즈음하여 헝가리 정치에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그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향후 헝가리 정당 정치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헝가리 청년민주동맹(FIDESZ)이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화 초기에 그들이 천명하였던 정당의 지향가치와 성향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즉 청년민주동맹(FIDESZ)은 헝가리시민당(Hungarian Civic Party)과 통합하여 청년민주동맹-헝가리시민당(MPP)으로 개편하는 한편 헝가리민주포럼(HDF)과 연합후보를 출마시켰다. 이를 통해 청년민주동맹(FIDESZ)은 1998년 총선에서 386석 중 148석을 획득하면서 제1당으로 집권하는 데 성공하

⁴ G. Schopflin, "The Condition of Post-Communism," *The New Hungarian Quarterly*, Vol. 32, No. 122 (1991).

⁵ A. Agh, "The Parliamentary Way to Democracy," *The Case of Hungary*, No. 2 (Budapest: Papers on Democratic Transition, 1991).

였다. 그러나 이후 내각 구성과정에서 독립소지주당(FKgP)(48석) 및 헝가리민주포럼(HDF)(17석)을 연립정부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변질시키면서 향후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다.⁶

표 II-5 헝가리의회 의석 분포 변화(1990~2002년)

정 당	1990년	1994년	1998년	2002년
청년민주동맹	22(5.7%)	20(5.2%)	148(38.3%)	164(42.5%)
독립소지주당	44(11.4%)	26(6.7%)	48(12.4%)	-(0.0%)
기독민주당	21(5.4%)	22(5.7%)	-(0.0%)	-(0.0%)
헝가리민주포럼	164(42.5%)	38(9.8%)	17(4.4%)	24(6.2%)
헝가리 정의 및 생활당	-(0.0%)	-(0.0%)	14(3.6%)	-(0.0%)
헝가리사회당	33(8.5%)	209(54.1%)	134(34.7%)	178(46.1%)
자유민주연합	94(24.4%)	70(18.1%)	24(6.2%)	20(5.2%)
무소속	6(1.6%)	-(0.0%)	1(0.3%)	-(0.0%)
기타	2(0.5%)	1(0.3%)	-(0.0%)	-(0.0%)

출처: Sten Berglund, Joakim Ekman and Frank H. Aarebrot, *The Handbook of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2004), p.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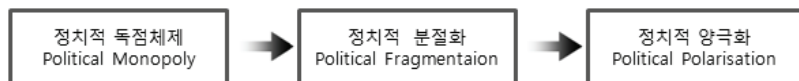
2002년 총선에서 헝가리 정당정치는 정치적 양극화의 속성을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헝가리 정당들은 종교적-세속적, 엘리트-비엘리트, 도시-농촌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8년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시

⁶ 이후 청년민주동맹은 2002년 총선에 즈음하여서는 집권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영 언론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한편 집시당(National Roma Party)과 연합하기도 하였다.

민주의를 천명하면서부터 헝가리 정치 지형은 좌파와 우파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총선을 계기로 청년민주당(FIDESZ)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진영과 헝가리사회당(MSZP)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진영의 구조가 고착되는 정치적 양극체제가 형성된 것이다.⁷ <표 II-5>에서 보듯이 2002년 총선에서 독립소지주당(FKGP)과 기독교민주당(KDNP)과 같은 우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정당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며, 헝가리 정의 및 생활당(MIEP)과 같은 극우정당 역시 1석도 얻지 못하였다. 또한, 무소속과 기타 정당 역시 원내에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헝가리의회는 헝가리사회당(MSZP)과 자유민주연합(SZDSZ)이 자유주의적 좌파 축을 이루고, 청년민주당(FIDESZ)과 이 보수주의적 우파 축을 이루는 양극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체제는 미국과 같은 양당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적 포퓰리즘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우리(us)가 아니면 그들(them)이라는 정치적 선동주의로 변질되면서 과거 스탈린식 슬로건이었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의 적이다(Those who are not with us, are against us)”라는 정치적 흑백논리의 부활을 가져온 것이다.⁸

●그림 II-3 동유럽 정당정치의 특성 변화



⁷-Emilia Palonen, “Political Polarisation and Populism in Contemporary Hungary,” *Parliamentary Affairs*, Vol. 62, No. 2 (2009), pp. 318~334.

⁸-Emilia Palonen, “Political Polarisation and Populism in Contemporary Hungary,” pp. 318~334.

I
II
III
IV
V

따라서 헝가리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당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정치적 독점체제가 붕괴된 이후 다양한 정당의 출현으로 다당제가 성립되었으나 한편으로 군소정당의 난립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분절화 현상이 출현하였고, 이후 몇 차례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군소 정당들의 이합집산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6 헝가리의회의 연평균 통과법안 수

연 도	연평균 통과법안 수
1945 ~ 1949	33.0
1950 ~ 1960	5.3
1961 ~ 1970	4.8
1971 ~ 1980	5.2
1981 ~ 1986	4.5
1990	104
1991	93
1992	89
1993	100

출처: 1945~1986년 자료는 Gabriella Illonski,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Hungar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5 (1994), pp. 253~265를 근거로 했으며, 1990년 이후 자료는 Zoltan Szente, "Understanding Hungarian Central Government System," Working Paper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3)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헝가리의회의는 당과 국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만 형식적으로 승인만 하는 고무도장과 같은 역할을 청산하고 헝가리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부활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의회는 개혁의 주체세력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강력한 의회중심 국가

운영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헝가리의회의 위상 강화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연평균 의회 개원일 수가 6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의회에서 심의·통과한 법안 수가 평균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부터는 연간 90~100여 개 이상의 법안을 심의·통과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회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족수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의회 내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내각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였다. 특히 헝가리의회의 활동에 있어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화된 행정관료에 의한 독주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의회 내 각 위원회의 활동이 서구 국가들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위원회는 전문적인 행정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심의하는 한편 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기 전에 위원회 수준에서 각 정당 간 정치적 이해 조정을 함으로써 의회가 무의미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렇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내각과 행정기관의 독주는 자연스럽게 통제되었으며, 심지어 의회가 지나치게 행정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집행의 적시성과 일관성이 상실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⁹

또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재정 및 예산운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1989년도 개정 헌법에 의거해 의회 내에 감사원

⁹-Istvan Balasz, *The Control of Governmental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Act in Hungary*, Yearbook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2).

I
II
III
IV
V

(National Audit Office)을 신설하였다. 감사원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기획국이 갖고 있던 정부 재정 및 예산관리 기능 중 일부를 이전 받았으며 감사원의 임무와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였다. 감사원의 주된 역할은 예산안의 심의 및 정부 재정에 대한 통제에 있으며, 이외에도 세입 예측의 적합성 여부 심의, 세출의 유용성, 타당성, 합법성 심의, 외국차관의 사용용도 및 상환문제 심의, 전년도 예산운용 평가, 각종 국가기금 운용 감독, 외국차관 도입 협정 날인 등이다.

감사원의 구성은 원장과 부원장, 행정직 공무원, 회계사, 관리사, 기타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다. 원장과 부원장의 임명은 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우선 각 정당의 대표자로 구성된 8인의 위원회가 원장과 부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의회 내 국가경제계획 및 예산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면 동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원장과 부원장을 선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감사원의 신설로 정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할 수 있고 특히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원의 신설이 갖는 의미는 사회주의 당시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적자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계획경제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핵심적 시스템을 폐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헝가리의회 민주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대표성의 문제이다. 1990년 5월 자유총선으로 당선된 의회의원의 출신배경과 체제전환 직전 사회주의체제 당시의 의회의원의 출신배경을 비교해 보면 사회주의체제 당시에는 의회의원 중 노동자 출신 의원이 34.5%, 농민 출신 의원이 4.1%였으나 자유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헝가리의회의 의원은 지식인 출신이 90.9%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의

원들이 인권운동가, 과학자, 대학교수, 법률가, 예술가 등 지식인인 반면 노동자 출신 의원은 4.4%, 농민 출신 의원은 2.1%에 머물고 있다. 이는 특정계층의 과대 대표성과 과소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맹목적인 반노동자 정서가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7 체제전환 전·후 헝가리의회의원의 출신배경 비교

출신배경	1985~1990		1990~1994	
	의원수	%	의원수	%
노동자	133	34.5	17	4.4
농민	16	4.1	8	2.1
지식인	179	46.4	351	90.9
기타	58	15.0	10	2.6

출처: Kukorell Istvan, "We changed it like this," in the text book of Law School in ELLE (Budapest, 1988), p. 84; Janos Istvan Toth, "Members and Factions in Parliament,"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1992), p. 81.

표 II-8 헝가리의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변화(%)

국가기관	1989년 3월	1989년 11월	1990년 11월
군	58.0	53.4	53.9
경찰	57.5	50.6	48.2
의회	64.5	63.6	45.1
노동조합	35.2	31.3	29.0

출처: Laszlo Bruszt and Janos Simon, "A valasztaszok eve,"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1991), p. 639.

둘째, 국민적 신뢰 수준의 저하 문제이다. 체제전환 초기 의회는 개혁의 중추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 특히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개별 영역

I
II
III
IV
V

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의회 내에서 담당해야 할 그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미숙하였고 정책의 실행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보다는 정책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의회가 국민의 기대만큼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의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점점 약화되어 갔다.

4. 국가의 탈정치화

1989년 10월 헝가리 개정 헌법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그리고 권력분립을 명문화하면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당제의 실천을 위한 행정의 독립성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당시 Miklos Nemeth내각은 1990년 총선 이전에 이미 당으로부터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행정의 탈정치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8년 12월 헝가리 수상으로 임명된 Nemeth는 사회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의 중추세력으로서 행정부가 강한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Nemeth는 1989년 5월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를 개편하고 전문적인 관료들을 대거 각 부처 장관으로 발탁·임명한 것이다. <표 II-9>에서 보듯이 Nemeth내각의 각료들은 정치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 각료의 구성은 자유총선 이후 구성된 Jozsef Antall내각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 -9 체제전환 직전 Nemeth내각·1990년 Antall내각·1994년 Hohn내각의 각료사항 비교

구분	Nemeth 내각		Antall 내각		Hohn 내각	
시점	1988년		1990년		1994년	
평균 연령	52.70세		53.36세		49.77세	
부처 수	13		13		12	
부처명	기준					
	정치성	전문성	정치성	전문성	정치성	전문성
내무부	○	×	○	×	○	×
외무부	○	○	○	×	○	○
법무부	×	○	○	○	○	○
국방부	○	○	○	×	○	○
문화부	×	○	-	-	-	-
문화교육부	-	-	○	×	×	×
사회보건부	○	○	-	-	-	-
보건복지부	-	-	○	○	○	○
재무부	○	○	×	○	○	○
상업부	○	○	-	-	-	-
산업부	○	○	-	-	-	-
상공부	-	-	○	○	○	○
농업원예부	○	○	-	-	-	-
농업부	-	-	○	×	○	○
환경수자원부	○	×	-	-	-	-
환경부	-	-	○	×	-	-
환경지역발전부	-	-	-	-	○	×
건설도시개발부	○	○	-	-	-	-
교통통신부	○	○	○	○	-	-
교통통신수자원	-	-	-	-	○	○
노동부	-	-	○	○	○	○
대외경제부	-	-	×	○	-	-

주: ○: 정치성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 ×: 정치성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 -: 당시 내각에 존재하지 않은 부처.

출처: Jozsef Bolony, Magyarország kormányai 1848~1992 (Budapest: Akadémiai Kiado, 1992)와 *Hungarian Observer*, May 17, 1990 그리고 헝가리 국회의원 인명부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다.

I
II
III
IV
V

한편, 1990년 5월 자유총선으로 집권한 Antall내각의 각료 사항을 보면 행정경험자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총 13개 부처 중 장관으로서의 해당 부처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장관은 7명밖에 되지 않은 반면 각 소속 정당에 대한 당성과 당내 역할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어느 정도 반체제 민주화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치성을 평가해 본 결과, 당 외부에서 영입한 재무부장관 Ferenc Rabar와 국제경제부장관인 Kadar Bela를 제외하고 여타 부처 장관의 정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헝가리민주포럼(HDF) 소속 장관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Antall수상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데 많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문화교육부 장관인 Bertalan Andrasfalvy와 국방부 장관인 Lajos Fur는 Antall수상 처럼 한때 박물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무부장관인 Geza Jeszenszky는 비록 칼 맑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지만 그보다도 Antall수상의 조카사위였다.

또한, Antall내각의 평균 연령을 보면 53.36세로서 Nemeth내각의 평균 연령 52.70세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ntall내각이 개혁성을 갖고 각종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료의 구성은 개혁 지향성을 갖는 젊은세대가 아니라 장·노년층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임 각 부처 장관이 정치성은 높지만 전문성이 약한 것은 Antall체제가 부처 장관을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전문성은 행정차관직을 신설하여 행정차관으로 하여금 행정 실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의 내부조직을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이원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1994년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헝가리사회당(MSZP)의 Hohn내각을 보면 Antall내각 때와는 달리 각 부처별 장관의 전문성이 매우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 12개 부처 장관 중 자유민주연합(SZDSZ)소속인 내무부 장관이자 부수상인 Gabor Kuncze와 문화교육부 장관인 Gabor Fodor 그리고 헝가리사회당 소속인 환경지 역발전부 장관 Ferenc Baja를 제외한 9명의 장관이 해당부처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치성에 있어서도 Antall내각이 연립정당 내 전문가가 없어 당외 인사를 영입한 것과는 달리 Hohn내각은 연립정당 내에 전문가 계층이 두껍기 때문에 당외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당내 전문가들로 충분히 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 각 각료의 정치적 당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문화교육부 장관인 Gabor Fodor 같은 경우 청년민주동맹(FIDESZ)당원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SZDSZ)으로 이적하였기 때문에 정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고 더군다나 문화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교육적 배경 그리고 사회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각료의 구성은 Hohn내각이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하며 동시에 각 관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정치적 논리에서 행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의 전문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Hohn내각의 개혁지향성과 각료의 전문성은 Antall내각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Hohn내각은 역대 내각보다 각료의 평균 연령 면에서 젊은세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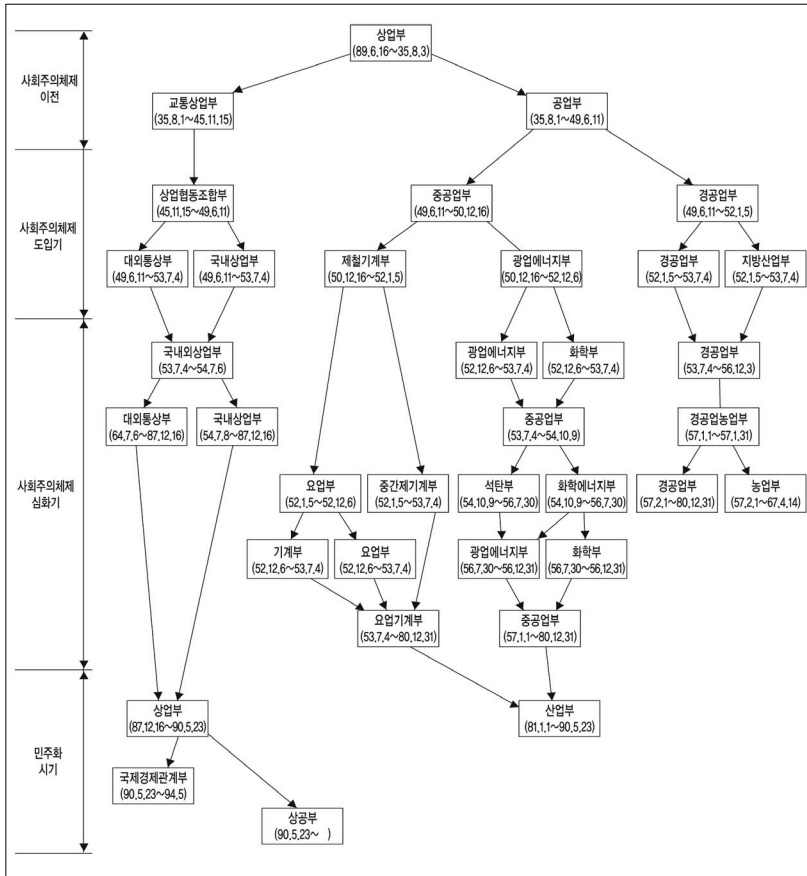
I
II
III
IV
V

Antall내각의 평균 연령이 53.36세인데 반해 Hohn내각의 평균 연령은 49.77세로 나타났다. 이는 Hohn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이 공산당 1세대가 아닌 2세대 테크노크라트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emeth내각과 Hohn내각의 각료 사항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Nemeth내각의 행정부 중심 개혁전략이 Antall내각의 수립으로 4년여간 단절되었다가 1994 총선 이후 Hohn내각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체제는 당이 행정부를 통해 국가 전반적으로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당은 큰 정부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부조직은 세분화시켰다. 그 결과 정부조직은 방대해졌고 부처의 수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통제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부문별 부처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부처 간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하부 분야에 대해 통제의 수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전에 1~2개 부처였던 상공 관련 부처가 사회주의체제의 심화 과정에서 세밀화되면서 부처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다시 1~2개 부처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하부체제에 대한 국가의 세밀한 통제체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4 헝가리 상공 관련 정부부처의 변천과정



출처: Jozsef Bolony, *Magyarország kormányai 1848-1992* (Budapest: Akadémiai Kiado, 1992).

이상과 같은 행정의 탈정치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행정권한의 재집중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치적 변혁기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미루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대부분의 업무관련 결정 사

안들을 장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러나 신임 장관들은 구체제 하에서 행정관료로서의 실무경험이 없는 자들이고 또한 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최종 결정을 회피하고 이를 수상에게 위임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자 각 부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안들이 수상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권력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수상을 보좌하는 수상실의 영향력과 권력이 확대되었다.¹⁰ 결국, 민주화를 천명하면서 등장한 Antall체제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키려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제하의 고위관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체엘리트의 발굴과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행정의 정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개혁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할 정부가 다시 정치적 논리에 지배당하는 행정의 재정치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 사회주의체제 하의 공무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무원 계층의 발굴에 실패하였다. 즉 사회주의 관료 지배체제의 습성을 오랜 기간 체득한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행정공무원 계층의 형성이 미약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체제에 맞는 새로운 인재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해도 공무원의 봉급과 처우 그리고 사회적 평가가 극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근무조건이 좋은 민간기업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공무원 가운데 능력이 있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¹⁰-L. Keri, "A Kormany elso onallo eve, 1991,"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2).

셋째, 공무원집단 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새로운 정부체제로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들은 기존의 공무원을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 가담한 부역자처럼 취급하였고, 이에 기존 공무원들은 항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정치변화에 따라 고위급 행정가로 임명된 신입 상급자와 교체되지 않은 중하위직 공무원 간에 잦은 갈등도 발생하였다. 즉 신입 상급자들은 보다 개혁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 반면 잔류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개혁에 의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불안한 나머지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신입 상급 공무원들은 부하직원을 공산당계의 잔류세력으로 불신하였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신입 상급자가 행정에 대해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라 비판한 것이다.¹¹ 이러한 상하 간의 갈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개혁기에 행정업무의 비효율적 수행과 행정력의 누수 현상을 가져왔다.

넷째, 공무원의 재교육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였다. 1994년 헝가리 사회당의 Hohn정부가 들어서면서 1990년 당시 공직을 떠났던 자들 중 상당수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 관료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¹² 이와 더불어 Hohn 수상은 1995년부터 행정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화와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

¹¹ Richard Rose, "Escaping From Absolute Dissatisfaction: A Trial and Error Model of Change in Eastern Europe," pp. 12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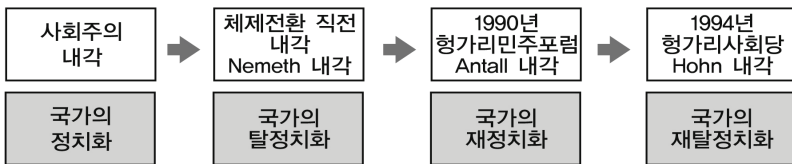
¹² 이 내용은 1995년 1월 31일에 실시된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 Center for Public Affairs 교수인 Laszlo Vardi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리나 예상외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즉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헝가리 당·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은 헝가리 정치민주화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국가를 장악한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당·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은 <그림 II-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국가는 정치화되었으나 1988년부터 당내 개혁에 의해 당이 주도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탈정치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자유총선으로 헝가리민주포럼(HDF)이 집권하면서 국가는 오히려 다시 정치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4년 헝가리사회당(MSZP)이 집권함에 따라 국가행정의 전문화가 강화되고 이는 국가가 또다시 탈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 II-5 헝가리 당·국가 관계의 변화 과정



5. 지방자치의 발전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기존의 사회주의식 중앙·지방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중앙당이 지방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였고, 당의 지방조직들에 의해 지방이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전환국가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슬로베니아가 가장 발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를 앞서 살펴본 국가별 민주화 지수와 교차 분석을 해 보면 민주화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0 체제전환국가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 비교

안정된 지방자치 국가		준안정된 지방자치 국가		하이브리드 정권		준안정된 권위주의 정권		안정된 권위주의 정권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국 가	지수
슬로베니아	1.50	불가리아	3.00	보스니아	4.75	코소보	5.00	타지키스탄	6.00
체코공화국	1.75	루마니아	3.00			우크라이나	5.25	카자스탄	6.25
폴란드	1.75	알바니아	3.00			아르메니아	5.50	아제르바이잔	6.25
에스토니아	2.25	몬테니그로	3.25			그루지아	5.50	키르기스탄	6.50
라트비아	2.50	세르비아	3.50			몰도바	5.75	벨라루스	6.75
리투아니아	2.50	크로아티아	3.75			러시아	5.75	투르크메니스탄	6.75
헝가리	2.50	마케도니아	3.75					우즈베키스탄	6.75
슬로바키아	2.50								

주: 지방자치 지수는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며, 1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고, 7점이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평가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출처: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10.

I
II
III
IV
V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은 중앙정치의 변화와는 다른 경로는 보였다. 즉 중앙정치는 개혁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지방 수준에서는 구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정치영역에 잔류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비록 자유노조 소속 시민위원회 출신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폴란드 농민당과 같은 구 공산당계 정당의 득표율이 저조하였지만 당선된 무소속 후보자들이 대부분 과거 공산당원이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폴란드 지방정치에 대한 구 공산당의 영향력은 중앙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잔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코의 경우 1989년부터 1990년 봄까지 지방정부에서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폐지되고 많은 공산당원들이 지방의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비공산당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89년 중반부터 거의 모든 지방에서 시민조직들이 신설되었고, 이와 병행해 사회민주당, 녹색당, 모라비아 자치운동 등과 같은 정당들도 그들의 지방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공산당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젊은 공산당원들이 이탈하고 많은 조직들이 해체되었으나 각 직장단위의 공산당 조직원들이 공산당원으로 변신하였고, 이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공산당의 정치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을 수 있었다.

표 II -11 폴란드와 체코의 지방선거 결과

폴란드		체코	
소속	의석점유율(%)	소속	의석점유율(%)
시민위원회	41.43	시민포럼	32
무소속	37.92	무소속	28
폴란드 농민당*	6.54	공산당	14
농촌 자유노조	4.32	인민당	12
노동조합	1.74	모라비아자치운동	3
민주당	1.68	농민연합	3
		사회민주당	2
		사회당	2
		녹색당	1

주: 폴란드의 경우 1% 미만은 생략하였다. (* 구공산당계 정당)

출처: 폴란드 자료는 Andrzej Kowalczyk, "Local Elections in Poland, 1990,"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체코 자료는 Ondrej Hubacek, "The Parliamentary and The Municipal Elections seen from the Local Level: A Comparison,"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를 참고하였다.

한편, 헝가리의 경우 폴란드와 달리 중앙정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즉 1990년 5월 총선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된 6개 정당이 합의한 신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990년 9월 30일 1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차 선거는 동년 10월 14일에 실시된 것이다. 헝가리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인구 10,000명 미만인 경우 개인후보자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주민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후보자와 정당명부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적용하

I
II
III
IV
V

였다. 이 경우 지방의원의 과반수는 개인명부제에 의해 선출하고 나머지 과반수는 정당명부제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다. 헝가리 지방선거 선거결과는 총선 때와는 달리 무소속과 야당 출신자의 당선이 지배적이었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구 공산당원이었던 자들이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II-12 헝가리 지방선거 결과(1990년)

인구 10,000명 미만 지방선거 결과 (%)					
소 속	단체장	지방의원	소 속	단체장	지방의원
무소속	82.9	71.2	기독교민주당	1.8	2.8
독립소지주당	3.7	6.2	연합후보	-	1.3
민주포럼	2.3	4.3	헝가리사회당	-	1.1
자유민주연합	1.9	4.0	기 타	7.4	9.1
인구 10,000명 이상 지방선거 결과 (%)					
소 속	개인후보자	정당명부	소 속	개인후보자	정당명부
자유민주연합	17.2	20.7	독립소지주당	6.0	7.8
무소속	14.9	-	기독교민주당	5.7	8.0
민주포럼	12.0	18.3	헝가리사회당	2.6	10.1
청년민주동맹	8.4	15.3	연합후보	28.7	13.9
			기타	9.3	-

출처: *Magyar Nemzet*, November 15~16, 1990.

동유럽 지방자치제의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특이한 현상은 중앙정치가 개혁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구 공산당계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어 중앙정치의 변화와는 별개로 구 공산당 세력이 지방정치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치를 장악한 개혁세력이 중앙정치에 집중한 나머지 지방정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중앙정치의 민주개혁세력이 지방수준에서는 구 공산당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지방정치세력의 발굴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한정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밀접한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 소규모 지역조직 및 직장조직이 중심이 된 지역정치의 특성, 중앙정치 변혁에 대한 정보 부족, 정치변혁 분위기의 확산 지체 등이 지역정치 변혁에 대해 지방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표 11-13 폴란드·체코·헝가리 지방자치제 도입의 특징 비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지방정치의 전환 시기	중앙정치전환 이전	중앙정치전환 이후	중앙정치전환 이후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	무소속 및 공산당의 득세	무소속 및 공산당의 득세	무소속 및 야당의 압승
지방 대체엘리트계층의 발굴 여부	실패	실패	실패
지방자치제의 도입 단위	기초단위	기초단위	광역 및 기초단위
단체장의 정당 가입 허용 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단체장의 선출 방법	기초의회	기초의회	지방의회 및 주민직접선거

6. 시민사회의 발전

체제전환국가의 시민사회 발전 수준을 보면 2009년 현재 시민사회가 가장 발전한 국가는 폴란드인 반면 가장 발전하지 못한 국가는 투

I
II
III
IV
V

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사회의 발전 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등 민주화가 지체된 국가로 평가되는 국가들에서도 시민사회는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이후 동유럽 국가에서 NGO는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 면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공히 민주화의 진행에 맞춰 NGO의 설립과 등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NGO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NGO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과 감세 혜택을 부여하였다.¹³ 폴란드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NGO부문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대하며, 그 결과 NGO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체코의 경우는 구 사회주의체제 당시의 관영 사회단체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어 1990년 이후에 새로 설립된 NGO들과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감시형 NGO나 권력 비판적 NGO보다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우회 성격의 NGO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헝가리는 NGO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헝가리 정부가 NGO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NGO 관련 제도들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¹³-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ion, 2000.

표 II-14 체제전환국가의 시민사회 발전 수준 비교

시민사회 발전 상위 국가		시민사회 발전 중위 국가		시민사회 발전 하위 국가	
국 가	지 수	국 가	지 수	국 가	지 수
폴란드	1.50	알바니아	3.00	키르기스탄	5.00
체코공화국	1.75	마케도니아	3.25	러시아	5.75
헝가리	1.75	보스니아	3.50	아제르바이젠	5.75
슬로바키아	1.75	몰도바	3.50	카자흐탄	5.75
라트비아	1.75	코소보	3.75	벨라루스	6.00
리투아니아	1.75	그루지아	3.75	타지키스탄	6.00
에스토니아	1.75	아르메니아	3.75	투르크메니스탄	7.00
슬로베니아	2.00	우크라이나	3.75	우즈베키스탄	7.00
불가리아	2.50				
루마니아	2.50				
세르비아	2.50				
크로아티아	2.75				
몬테니그로	2.75				

주: 지방자치 지수는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며, 1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고, 7점이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평가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출처: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10.

그러나 동유럽 NGO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동유럽 NGO들이 1990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고 그로 인해 조직력이나 관리력, 전문성,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국가별로 민간단체나 NGO에 관한 개별적인 법체계는 마련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I
II
III
IV
V

내에 NGO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NGO들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주로 서방 NGO나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II-15>에서 보듯이 NGO의 재정수입에서 공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유럽의 경우 56%인 반면 동유럽은 3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 NGO들은 주로 자체수입이나 기부금에 대한 의존성이 서유럽 NGO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II-15 NGO 재정 수입 구성 비교(%) (1995/96)

수입원	Central &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공적 지원	33	56
자체 수입	46	37
기부금	21	7

출처: Stefan Toepler & L. M. Salamon, "NGO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Empirical Overview," *Eastern European Quarterly*, Vol. 37, No. 3 (2003), p. 373.

셋째, 동유럽 NGO 활동가의 출신배경을 서유럽과 비교해 보면 동유럽의 경우 가장 많은 NGO 활동가들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출신이며,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직 단체분야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유럽의 경우는 교육분야, 사회서비스분야, 건강분야 출신 활동가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NGO 활동가의 출신배경을 감안해 볼 때 동유럽 NGO들은 주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동호회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권력감시형 NGO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16 NGO 상임활동가의 출신배경 구성 비교(%) (1995/96)

출신배경	Central &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문화 및 레크레이션	35	10
교육	18	28
건강	8	22
사회서비스	12	27
전문직 단체 및 연합	11	3
개발	6	6
환경	6	3
기타	4	1

출처: Stefan Toepler & L. M. Salamon, "NGO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Empirical Overview," *Eastern European Quarterly*, Vol. 37, No. 3 (2003), p. 370.

넷째, 동유럽 NGO는 미래의 새로운 정치엘리트를 양성시키지 못하고 있다.¹⁴ 즉 NGO는 제3의 정치세력으로 제도권 내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동유럽 NGO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회피하거나 비정치적인 활동 분야에 집중을 함에 따라 NGO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엘리트 계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7. 일반국민의 정치의식

정치민주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실제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로 민주화되었는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동유럽 정치민주화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전에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선행 연

¹⁴Umut Kork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Invigoration of Civil Society: The Case of Hungary and Poland," *East European Quarterly*, Vol. XXXIX, No. 2 (2005).



구 자료가 없는 관계로 체제전환 이전과 이후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체제전환 전·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보다는 체제전환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의 정치의식 상태만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헝가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헝가리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예를 들면 1974년 당시 헝가리 국민의 약 90% 정도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여건에 대한 노동자의 이해를 결정하는데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다만 4%만이 당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72%나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여가 및 레저 문제에까지도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55%나 되었다.

¹⁵- A William Welsh (ed.), *Survey Research and Public Attitud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 표 II -17 사회주의 당시 당의 역할에 대한 헝가리 국민의 인식 (1974년)

	당의 역할 중요	당의 역할 불필요
일반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여건에 대한 노동자의 이해 결정	90%	4%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태도 및 자아의식의 고취	87%	12%
노동자의 삶의 질 및 생활 여건 개선	85%	15%
직업안정	84%	4%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향상	73%	6%
노동자들의 불만 요인 관리	72%	18%
노동 여건 및 처우의 개선	69%	9%
노동자들의 여가 및 레저의 보장	55%	16%

출처: A William Welsh (ed.), *Survey Research and Public Attitud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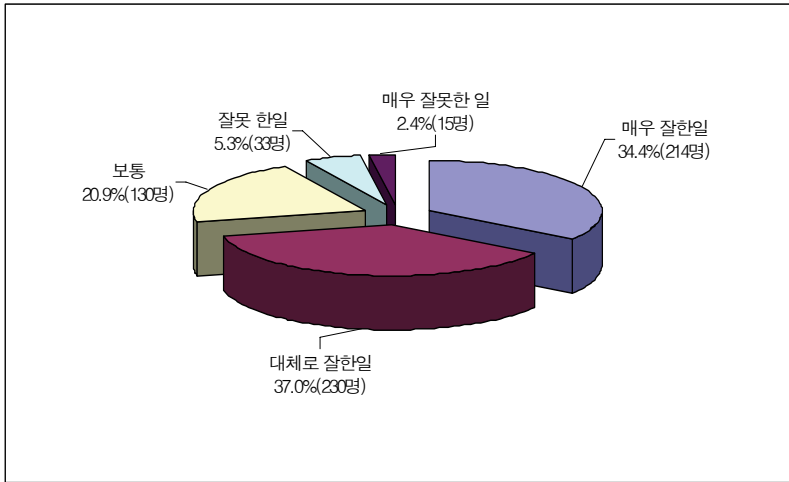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13여 년이 지난 2003년도에 헝가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헝가리가 체제전환을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한 것에 대한 설문에서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의견이 71.4%(444명)에 달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7.7%(48명)에 불과하였다.¹⁶ 따라서 대부분의 헝가리 국민들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요인

16. 본 조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구자가 현지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조사일 현재 헝가리 국민으로서 모든 자연인 중 만 20세 이상인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인 표본은 헝가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인구비에 따른 강제배분법과 무작위에 의한 층화표본추출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630명이다. 이은구, 『시장경제화에 따른 동유럽 국민의 사회경제적 형태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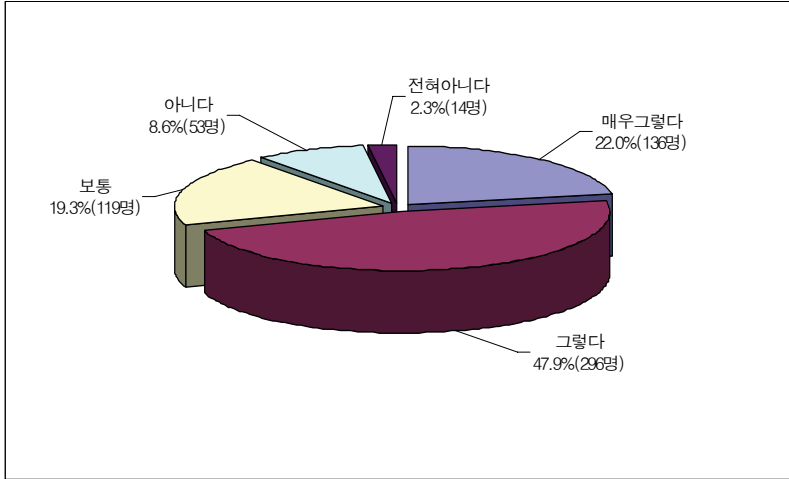
과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체제포기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 사회주의체제 포기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 (2003년도)



다음으로, 체제전환이후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 가치체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69.9%(432명)인 반면, ‘평등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10.9%(67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헝가리 국민들이 사회주의체제의 가치 기준이었던 평등을 대신하여 자유를 사회적 선행가치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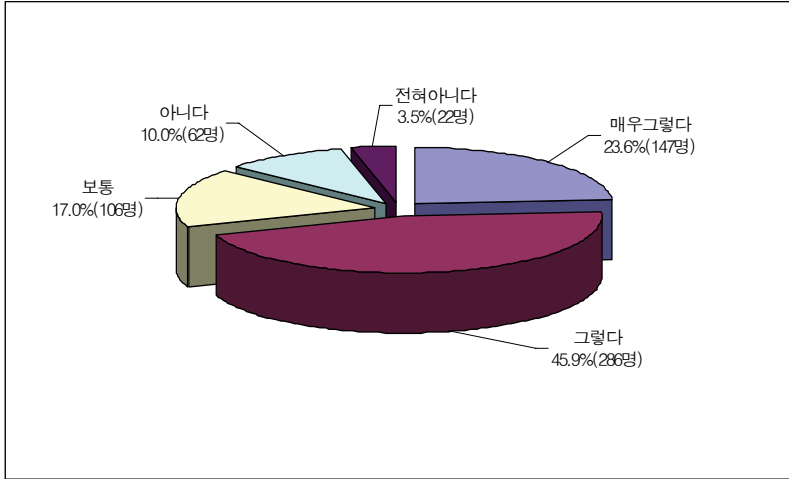
● 그림 II -7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 (2003년도)



또한, 체제전환 이후 정당정치가 실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가를 설문한 결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의견은 69.5%(433명)인 반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13.5%(84명)였다. 따라서 활성화된 정당정치가 체제전환 이후의 헝가리 정치발전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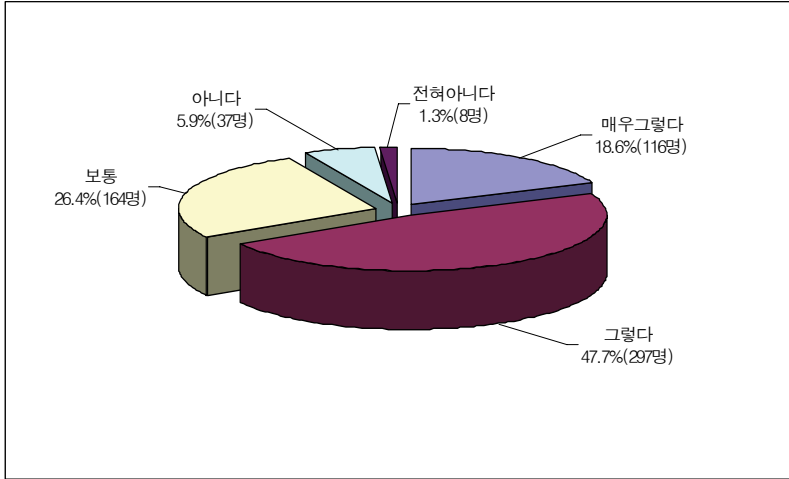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그림 II -8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한편,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활동이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사회발전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이 66.3%(413명)인 반면 사회발전을 저해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7.2%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학력이 높고, 총 가계수입이 높으며, 노조활동이 활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헝가리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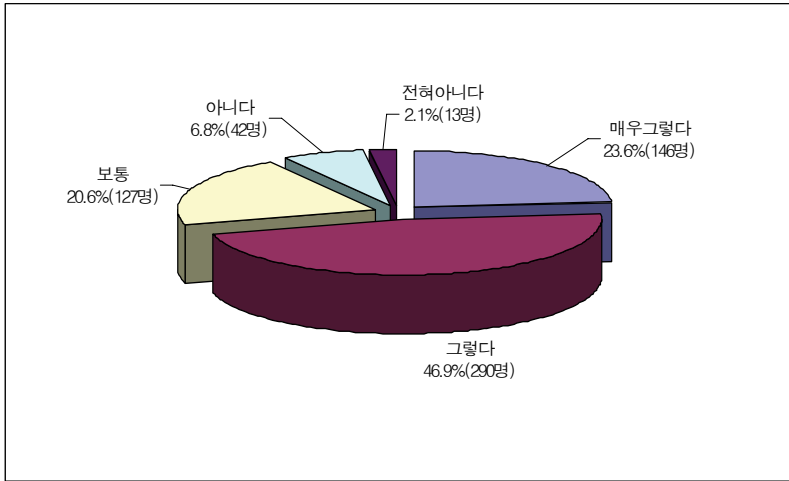
●그림 II -9 시민단체활동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헝가리 일반국민의 인식(2003년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힌다”는 응답은 70.5%(436명)인 반면 “의사를 잘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은 8.9%(55명)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헝가리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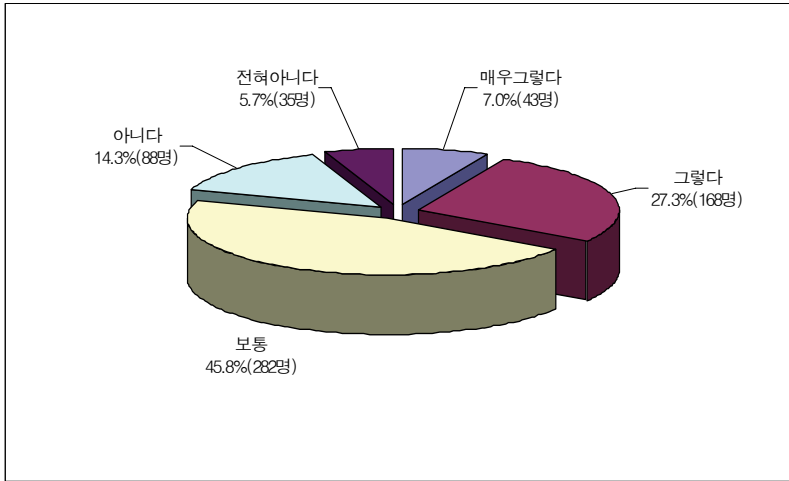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I -10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향후 정치민주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치민주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34.3%(211명)인 반면 “정치민주화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은 20.0%(123명)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평가의견이 45.8%(28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동안 진행된 정치민주화에 대해 헝가리 국민들은 기대 이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미래의 정치민주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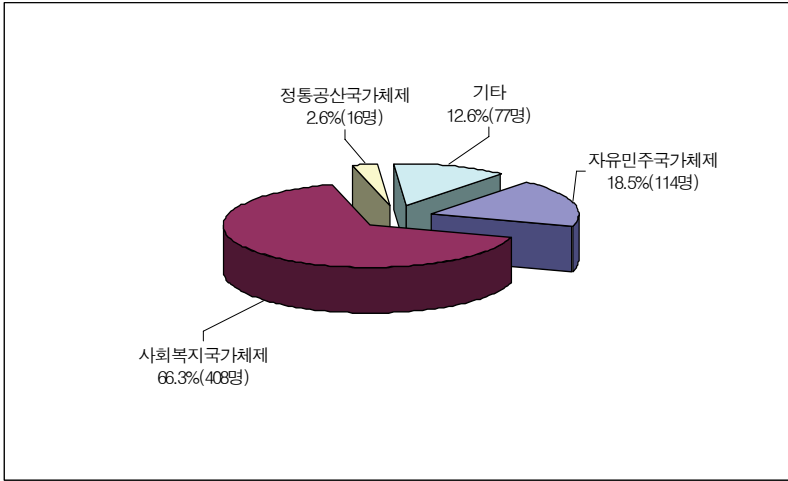
●그림 II -11 향후 정치민주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헝가리 일반 국민의 인식(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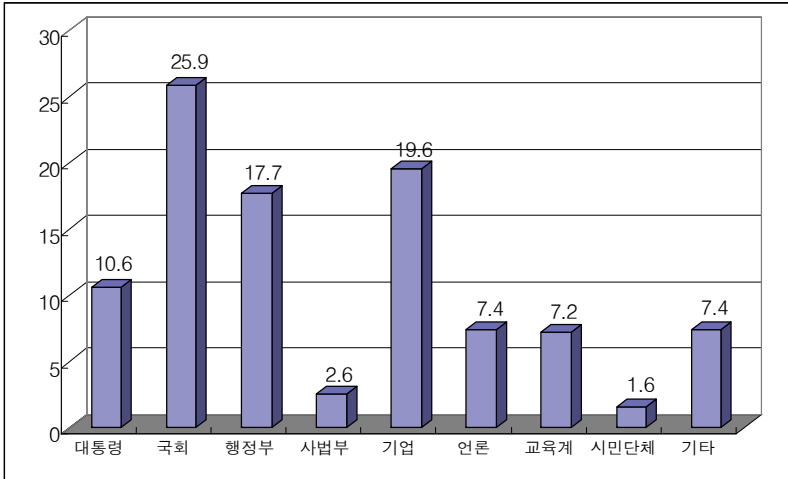
또한, 향후 헝가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체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사회복지국가체제”라는 응답이 66.3%(40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유민주국가체제”라는 응답은 18.5%(114명), “정통공산국가체제”라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따라서 헝가리 국민들은 사회복지국가체제를 선호하며 정통공산국가체제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그림 II -12 지향하여야 할 국가체제의 성격



●그림 II -13 향후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핵심 기관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발전을 이끌 핵심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라는 응답이 25.9%(15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업” 19.6%(120명), “행정부” 17.7%(108명), “대통령” 10.6%(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헝가리 국민들은 국회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헝가리의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어떠한 형태이든 비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¹⁷ 이는 일반국민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비민주적 체제로의 변화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상황에 따라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8.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 평가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비용·편익에 대한 진단은 정치민주화에 대한 보편적인 비용·편익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동유럽의 체제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정치민주화 과정의 비용·편익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다당제, 국가의 탈정치화, 지방자치제의 도입, 시민사회의 발전, 국민의 정치의식 등 5개 영역에 대해 각 영역의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추론해 하고자 한다.

¹⁷ 조한승, “동유럽의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비민주적 체제 선호: 민주화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동아시아 연구』, 제9호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4).

가. 다당제의 비용·편익

우선 다당제의 비용·편익을 진단하기 위해 다당제의 영역을 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 정치적 다원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의 신장 등 7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로 검토하였다.

① 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정치적 다원주의의 편익으로는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정치적 다원주의의 비용으로는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는 점이다.

③ 의회민주주의의 편익으로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의회민주주의의 비용으로는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의회 의원이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의회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당내 주요 인물이나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당내 민주화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I-18 자유·평등·공정선거의 비용·편익

	범 주	편 익	비 용
다 당 제	자유·평등· 공정선거 제도	-국가기관의 정통성 강화 -국가기관의 정당성 강화 -국가기관의 책임성 강화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적 독점체제의 폐지 -정치참여의 확대 -정치적 안정성 향상	-정당의 난립 -정치적 비용 증가 -정당의 정체성 왜곡 -포퓰리즘의 심화 -극우적 민족주의의 부상
	의회 민주주의	-권력 감시 기능의 강화 -부정부패의 감소 -정책결정의 합리성 강화	-정당체제의 양극화 -의회의 대표성 약화 -의회의 전문성 약화 -당내 민주화의 약화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평등권의 강화 -국민에 대한 불법적 통제 방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확대 -학문 및 교육의 발전 -다양한 문화의 발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사회의 발전 -권력 감시 기능 강화 -사회적 다원주의의 발전	-사회적 혼란의 야기
	인권의 신장	-사유재산권의 강화 -주거 및 직업 선택의 자유 강화 -사회적 자유의 강화	

I
II
III
IV
V

④ 법치주의의 편익으로는 사법부가 집권당이나 여타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평등한 법의 적용에 의해 평등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정치적 테러, 불법적 감금, 추방, 고문 등으로부터 일반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⑤ 표현의 자유가 갖는 편익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문화적 표현이 자유로워지며, 언론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감시 기능과 정보의 확산이 강화된다. 또한, 학문과 교육의 자유가 확대되어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⑥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갖는 편익으로는 시민사회가 발전하며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갖는 비용으로는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⑦ 인권의 신장이 갖는 편익으로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인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여행, 주거지, 직업선택 등에 있어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양성평등, 동성결혼, 출산 등 개인의 사회적 자유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나. 국가의 탈정치화의 비용·편익

국가의 탈정치화의 비용·편익을 진단하기 위해 정책능력과 국가관리능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① 정책능력의 편익으로는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정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국민에 대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향상되고, 당이나 외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압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정책이 그 본연의 기능을 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정책능력의 비용으로는 정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동시에 정책의 국민적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미루게 되어 행정권한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낮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② 국가관리능력의 편익으로는 행정관료가 정치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조직이나 인력으로 인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행정조직이 간소화되고 의사결정과정도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반면 국가관리능력의 비용으로는 정치변혁에 의해 새로 구성된 정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집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조직 내에 신·구 공무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공백상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I
II
III
IV
V

표 II -19 국가의 탈정치화의 비용·편익

	범 주	편 익	비 용
국 가 의 탈 정 치 화	정책능력	-정책의 효과성 향상 -정책의 효율성 향상 -정책의 책임성 향상 -정책의 투명성 향상 -정책의 공정성 향상 -국가경제의 발전	-행정권한의 집중화 -행정부에 대한 통제 약화
	국가관리 능력	-행정의 전문성 향상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행정비용의 감소	-유능한 공무원 집단의 결손 -공무원 집단 내 갈등 심화 -행정업무의 공백

다. 지방자치제의 비용·편익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주의식 중앙·지방 관계의 폐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제의 편익으로는 첫째, 그동안 중앙당은 지방당 조직을 통해 지방을 통제·감독해 왔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해 공산당에 한정되었던 지방정치 엘리트집단이 다양한 지방정치집단에 의해 다원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정치 엘리트 집단이 육성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선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선거를 통해 주요 공직을 맡은 자들에 대해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그 결과 부정부패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I - 20 지방자치제의 비용·편익

	편익	비용
지방자치제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율성의 확대 -새로운 지방엘리트의 발굴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감시 강화 -부정부패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방 간 갈등 심화 -정책의 효과성 약화 -공산당의 잔류 기반 제공

반면 지방자치제의 비용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지방정부가 집권 여당과 다른 정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개혁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 공산당계 인물들이 중앙정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구 공산당세력의 잔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라. 시민사회의 비용·편익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편익으로는 첫째, 획일적 가치체계에 의해 함몰되었던 사회적 다양성이 자유롭게 표출됨에 따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가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 각 영역에

I
II
III
IV
V

잠재해 있는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여 국가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가행정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가 분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성 정치엘리트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I-21 시민사회의 비용·편익

	편익	비용
시민사회	-다원주의의 발전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 강화 -행정비용의 감소 -국가인적자원의 활용성 향상 -새로운 정치엘리트의 양성	-NGO의 자립성 취약 -NGO활동가의 전문성 부족 -정치적 비판 기능 미약

반면 시민사회의 비용으로는 첫째, 동유럽 NGO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NGO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 NGO 활동가들이 NGO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NGO들은 시민사회의 대리자로서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적 감시를 대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NGO들은 정치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 일반국민의 정치의식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국민적 내면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정치의식은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견고성과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민 정치의식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주의체제를 폐기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도 정치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동유럽 정치민주화는 향후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체제 당시 일반국민들은 국가의 온정주의를 용인하고 오히려 국가의 온정주의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온정주의는 매우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형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 -22 국민 정치의식의 비용·편익

	편익	비용
국민의 정치의식	-정치민주화의 안정성 강화 -온정주의의 약화 -국민통합의 강화	-국민의 정치적 분열 심화 -극우적 민족주의의 부상

반면 국민 정치의식의 비용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당시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일반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의식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선호체계를 갖게 되어 선호체계가 다른 집단 간에 정치적 분열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헝가리 정의와 생활당(MIEP)과 같은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배외주의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에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I
II
III
IV
V

Ⅲ. 러시아 시장경제화의 비용·편익



1. L-S-P 체제전환 프로그램과 J-curve

1991년 8월 보수 쿠데타가 불발로 끝난 뒤 러시아에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선택과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고, 향후 러시아 사회발전의 방향을 규정짓는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는데 현대 혼합사회형의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로의 점진적인 발전, 1917년 혁명으로 단절된 자본주의적 발전, 사회발전 전략의 경로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 유지, 즉 발전전략의 선택은 뒤로 미루고 위기상황과 관련된 긴박한 과제만을 전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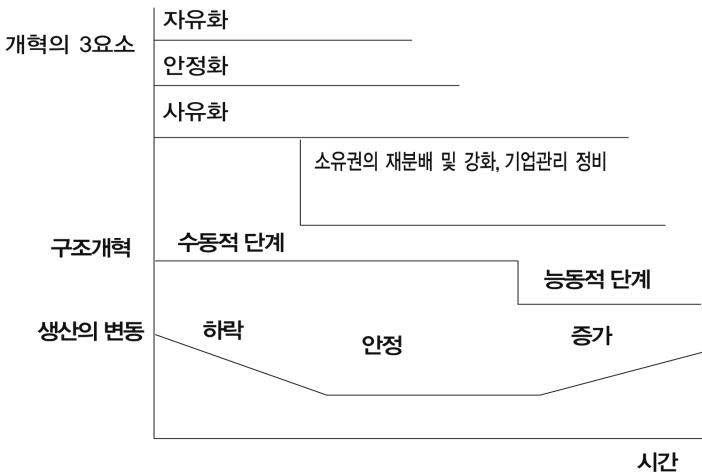
그러나 러시아 급진주의자들에게 개혁이라는 이념은 있어도 철저히 연구 검토되고 구체화된 체제전환 프로그램은 없었다. 러시아 지도부의 태만과 방관, 여기에 기인하는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혼란과 경제 재건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렇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러시아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해체 및 붕괴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즉 폴란드의 예를 따라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이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 경제안정과 시장관계 확립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짧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했다.

1991년 1월 2일 가이다르 정부에 의해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시작으로 국내 상업활동 및 대외무역의 자유화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거시 경제안정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구소련 시기 경제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및 국방비의 대폭 삭감, 정부투자의 축소,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한 부

I
II
III
IV
V

가가치세의 도입 등 일련의 시장화 개혁정책이 뒤따랐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 긴축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사유화증서(바우처)를 통해 과거 사회주의 시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소유관계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는 사유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 -1 체제전환-구조개혁-생산변동의 연관관계



출처: Ясин, Е. Г.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с.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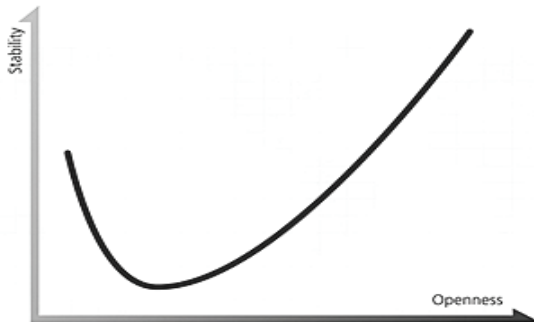
체제전환 개혁의 3요소는 L(자유화)-S(거시경제안정화)-P(사유화)로 집약되고, 순서(sequence)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대다수 서방의 논자들은 L-S-P 정책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¹⁸에

¹⁸ 체제전환의 시기에 '기회의 창'이 열리지만, 적시에 성공적으로 전환이 시도되지 못한다면 이후 개혁정부를 좌초시키고, 급진적 개혁조치의 실행을 계속 지연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L-S-P 조치들은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가들마다 개혁적 조치들의 실행 순서, 정도, 각 조치들의 조합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이행의 과정과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논자들은 체제전환 전략과 과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행기에 생산이 감소하는 전환기 침체(transition recession)를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가리켜 논자들은 J-curve라 한다.

●그림 III -2 J-curve



J-curve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III-2>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회의 개방성이 증대되면 급격하게 안정성이 훼손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안정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거론되기도 하고, X축과 Y축을 시간(time) 변수와 국내총생산(GDP) 변수로 전환하면, 체제전환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은 급격하게 생산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일정 기간 안정기를 지나 초기 시장화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그래프는

I
II
III
IV
V

우상향하여 증가 추세를 밟아간다는 이행의 경로를 설명하는 예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로(path)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전환, 또는 이행은 시장화의 편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용·편익이 교차되어 발생하는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J-curve에서 유추하여 매우 단순하게 이행의 비용·편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면 산출의 감소라는 현상은 비용에 해당될 것이고,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J-curve의 눈물의 계곡을 지나 경제성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편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비용으로, 또 무엇을 편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이 둘 사이의 기본적인 결합 모델은 무엇이고, 다종의 변형태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 개발은 가능한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의 체제전환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해본다. 1990년대 러시아의 체제전환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편익과 실제 비용과의 차이를 평가하고, 이후 체제전환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2. 체제전환의 성과에 대한 평가 -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1990년대의 10년은 마치 1980년대 남미의 ‘잃어버린 10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시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러시아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탈규제’와 ‘자유화’로 대표되는 통화주의 패러다임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였고,¹⁹ 소위 ‘워싱턴 컨센서

19. 신자유주의가 러시아에 수용되는 과정과 신자유주의 진영의 인식론적 가치체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신자유주의와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러시아연구』, 제9권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9), pp. 241~279 참고.

스'(Washington consensus)²⁰로 호칭되는 긴축기조의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프로그램에 따라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체제전환개혁은 생산감소, 산업화의 퇴행, 투자위기 등이 지속되고, 절대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사회 인프라가 해체되는 등 미증유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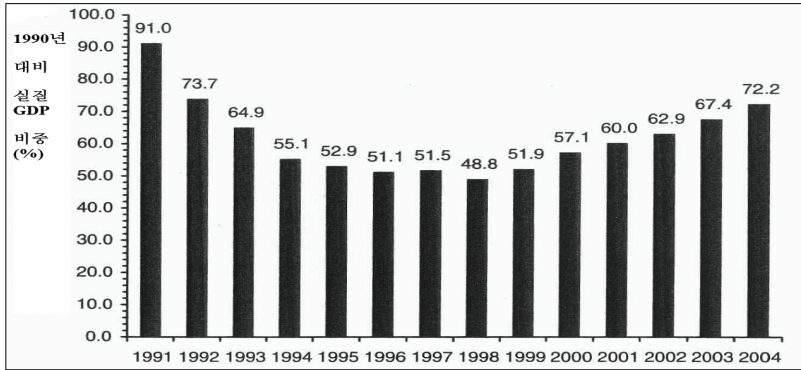
가. 생산구조의 해체와 산업화의 퇴행

1990년대 체제전환기에 러시아는 일찍이 다른 어떤 국가들도 평화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침체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게 되었다.²¹ 급진적인 시장개혁 이후 러시아는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였고, 1997년에 12.5%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0.9%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1998년에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5.3% 하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98년 러시아의 실질 GDP는 1990년 대비 48.8%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²⁰. 1989년 국제금융기구와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합의되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재정적자 축소 ② 공공지출 우선 순위 조정 ③ 조세개혁(조세기반 확대 및 세율 인하) ④ 금융자유화 ⑤ 단일환율제 ⑥ 무역자유화(비관세에서 관세로 무역제한 조치 전환) ⑦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외국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국내의 기업에게 동등한 경쟁 조건 제공) ⑧ 사유화 ⑨ 탈규제(경쟁 제한적 정부규제 폐지) ⑩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확립. Grzegorz W. Kolodko,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sustained growth. Implications for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2 (1999), p.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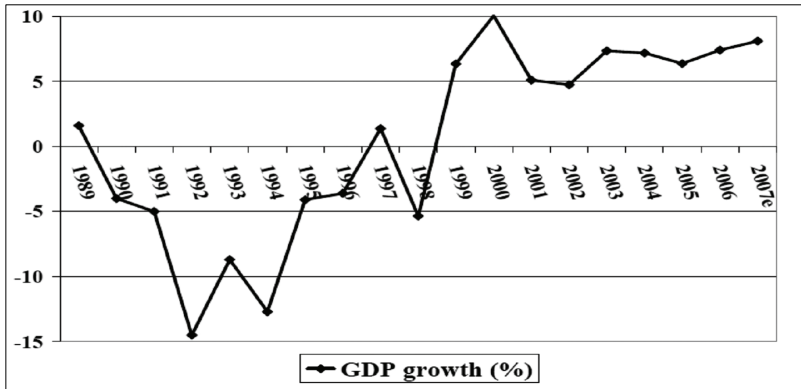
²¹. 참고로 1차대전시기(1914~1917)에 러시아의 GDP는 1/4, 내전시기(1918~1922)에는 23%, 2차대전시기(1941~1945)에는 21%가 감소했다. Андрионов В. Д.,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Москва: Экономика, 1999), с. 20.

●그림 III -3 1990년 대비 러시아의 실질GDP 비중의 변화 (1991~2004년)



출처: David M. Kotz, and Fred Weir,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p. 240.

●그림 III -4 러시아경제의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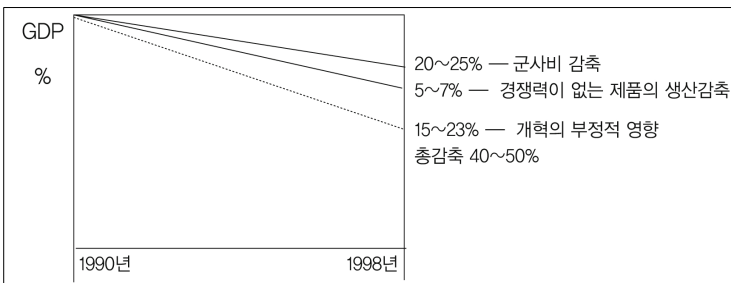
출처: L. Vinhas de Souza, *A Different Country. Russia's Economic Resurgence*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07), p. 15.

앞서 언급한 J-curv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전환기의 생산감소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나타난 장

기간에 걸친 심각한 경제침체는 동유럽의 일부 체제전환 선행국가들
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미증유의 경제적 사건이었다.

일부에서는 1990년대 GDP의 감소가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에 의문
을 제기하기도 한다.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 신
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생산감소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시장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의 통계는 사회주의 계
획경제의 특성상 경제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었고, 체제전환 이후
에는 민간부문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산감소가 훨씬 작을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
문가들의 반론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의 부정적 여파에 따른
생산감소는 대략 15~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배나 되는 군산복합
체의 생산감소,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의 생산감축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GDP의 감소는 공식통계의 결과보다 작은 40~45% 수준에 달할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III -5 1990~1998년 GDP 감소 요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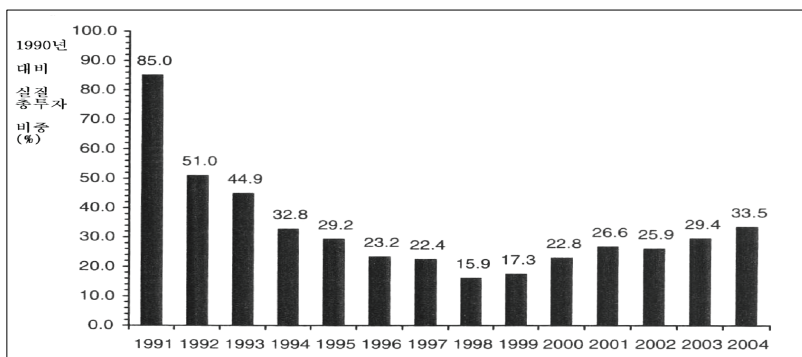


출처: Ясин, Е. Г. Россий 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
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с. 424.

I
II
III
IV
V

체제전환기 러시아경제의 GDP 추락도 증대한 문제이지만, 또한 러시아의 급진적인 시장개혁이 초래한 문제의 심각성은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1998년의 총투자가 1990년의 15.9%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 있다. 투자의 감소는 생산감소 현상보다도 더욱 가파르게 하향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고,²² 경제회생을 위한 생산기반이 완전히 해체되는 ‘산업화의 퇴행’이 진행되기도 했다. 더구나 시장개혁의 중요한 목적은 최종생산물, 고품질·고부가가치상품 생산으로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원료·에너지산업 생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기계설비, 경공업 등 가공산업의 생산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 III -6 1990년 대비 러시아의 실질 총투자 비중의 변화 (1991~2004년)



출처: David M. Kotz, and Fred Weir,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p. 240.

22. 러시아 산업의 고정자산 마모율은 1998년 전체 고정자산의 52.4%에 달한다.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крат. стат. сб*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1999), с. 185.

나. 상품·화폐관계의 파괴

체제전환기 러시아 시장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기 단절되었던 상품·화폐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1990년대 ‘충격요법’에 의한 급진적인 시장개혁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체제전환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충격이 진정되고, 초고속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에 비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임금체납, 기업 간 지급연체, 세금체납 등이 긴밀한 상호연계를 가지며 위기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러시아경제는 바터(barter)거래²³ 등 비화폐거래에 의해 가격정보가 왜곡되고, 따라서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가공경제’(virtual economy)²⁴를 창출하기도 했

²³. 바터거래를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현상을 변화된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의 활동형태로 바라보고자 한다. 흔히 바터는 화폐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직접 교환하는 거래 행위, 즉 <Товар-Това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Лай зберг Б. А., Лозовский Л. Ш., Стародубцева Е. Б., Соврем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 М., 1997, с. 30. 만일 이러한 협소한 관계에서 바터를 이해한다면 화폐 혹은 기타 지불수단이 동반된 거래는 바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바터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그 어떤 화폐 또는 지불수단을 동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자간, 다자간 교환도 바터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며, 굳이 바터거래시 교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가물이어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관점에서 마카로프(Макаров В.)와 클레이네르(Клейнер Г.)는 바터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바터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혹은 서비스 수혜(작업 이행) 권리를 교환하는 형태로 여기에서 그 권리의 상호 이전은 화폐로 지불을 하는 것과는 무관한 교환의 필요 부분이다.” Макаров В., Клейнер Г., “Бартер в Росс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4 (1999), с. 81.

²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C. Gaddy and B. Ickes, “Russia’s virtual Economy,” *Foreign Affairs*, Vol. 77, No. 5 (1998), pp. 53~67; C. Gaddy and B. Ickes, “An Accounting Model of the virtual Economy in Russia,”

I
II
III
IV
V

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편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비상품·화폐거래가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상품·화폐관계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은 어떠한 내용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어떤 속도로, 어떤 수순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건설(nation-building)에서의 근본적인 결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결점은 바로 러시아 경제를 비화폐거래로 유인했던 약한 고리, 즉 ‘화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드라프(David. M. Woodruff)에 따르면 국가건설의 문제는 러시아에서 화폐경제를 확립하려는 연방정부와 비화폐거래를 원하는 기업에 의해 지지되는 지방정부 간의 치열한 접전으로 발현되기도 했다.²⁵

비상품·화폐관계를 전형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은 바터거래의 급격한 증가이다. 바터거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지만, 아우꾸치오네크(Аукционек С.)에 따르면 1992년 6%에 불과하던 바터거래의 비중은 1997년에는 상반기에 41%로 증가했고, 이 현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²⁶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Vol. 40, No. 2 (1999), pp. 79~97; R. E. Ericson and B. W. Ickes, “A Model of Russia’s ‘Virtual Economy,’” *BOFIT Discussion papers*, No. 10 (2000); William Tompson,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Unravelling the workings of Russia’s ‘virtual economy,’” *Economy and Society*, Vol. 28, No. 2 (1999), pp. 256~280.

²⁵-David M. Woodruff, *Money Unmade: Barter and the Fate of Russian Capit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The Economist*, August 18, 1999.

²⁶-과연 바터거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일부에서는 이 거래의 비중이 1999년 1월 46%에서 2000년 1월에는 33%로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Russian Economy,” *The Month in Review* (May 2000).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바터거래의 비중은 30~35%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아직도 60~70%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GDP 대비 M2의 비율이 20%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바터거래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Эксперт*, June 3, 2000.

표 III-1 기업 간 거래에서 바터거래의 비중

(단위: 월 지표의 연평균,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바터거래의 비중	6*	9	17	22	35	41

주: *1월 제외, **상반기.

출처: С. Аукуционек, “Бартер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1998, No. 2. с. 51.

그렇다면 바터거래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또한 논자들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개디(Clifford G. Gaddy)와 이키스(Barry W. Ickes)는 현재 러시아의 바터거래는 ‘새로운 현상’으로 그 원인은 경쟁구조에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즉 엄청난 규모의 가공산업들이 손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지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바터거래는 과거 중앙집중적 계획경제가 수행했던 역할 중 하나, 즉 거래를 조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바터거래는 그들의 주장처럼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소비에트 시기에도 바터거래는 존재했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는 비화폐경제체제였고, 자연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치의 이동, 이들의 순환, 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경제주체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극소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이나 생산연합체가 아닌 산업별 부처를 상품생산자로 이해한다면 소련에서도 제품의 분배체제는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스플란(Госплан)이나 고스스나브(Госснаб)를 통해 매개 되는 거대한 바터시장이었다. 현대 체제전환기 바터거래가

²⁷-Gaddy Clifford G. and Ickes Barry W., “Russia’s virtual Economy,” *Foreign Affairs*, Vol. 77, No. 5 (1998), pp. 53~67.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부처나 부처 간 기구에 직접 종속된 것이 아니고 기업 간 직접적인 경제적 관계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바터거래의 확대는 단계별로 그 원인이 달랐다. 과거 1960~1980년대 중반까지 계획생산의 비효율적인 분배체제로 인해 계획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바터거래가 진행되었다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물품부족으로 인해 바터거래가 증가되었다. 반면에 1992~1994년간은 기업의 유동자산의 부족으로, 1995~1996년간은 정부의 과도한 긴축정책과 통화량 부족으로 바터거래가 급증하였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바터가 관행화되었으며 이것이 통화정책·조세정책 부문과 연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었다.²⁸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적 구조가 바터거래를 강화하게 되었는가? 러시아에서는 잠재적 수요자와 공급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독점구조가 해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경쟁은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 경제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계약체결 시에 가격경쟁은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가격형성체제에서 제품의 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닌 실질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바터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얻고자 하는 효용은 화폐소득이나 이윤이 아니라, 단지 생산활동을 유지·확대하는 것이었다. 기업들이 가격형성의 요소 시장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기업 내부의 차원에서 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자들과 이해관계와 노동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관리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수차례의 바터거래를 통해 상품을 인도할 때마다 일정한 ‘포상’을 받고자

²⁸ Макаров В., Клейнер Г., “Бартер в Росс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4 (1999), с. 82.

했다.²⁹

바터거래의 성사 여부는 결국 파트너를 찾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과거 기업 간 연결망은 중앙집중적 계획시스템 하에 있었지만, 사유화 등 기업분리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기업으로 분화되었고, 급격한 생산감소와 국가주문의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바터거래를 관행화했다.³⁰ 다시 말해 바터거래는 그것의 확대가 소득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제주체들의 의도적이고 합목적적인 의지에 의해 더욱더 확대되었던 것이다.

크게 보아 4개의 집단들이 바터거래의 이해당사자들이었다. 첫째, 바터거래가 개인의 소득 증대와 권력 강화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기업관리자, 둘째, 바터거래가 이미 존립수단이 되어버린 거대 중개조직의 관리자와 직원, 셋째, 기업 간 제품의 물리적 흐름을 통제하면서 그 보호자이자 후원자 역을 하는 범죄조직, 넷째, 위에 언급한 집단들에 의해 부양되는 지방, 연방 단위의 행정 관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었다.³¹

바터거래 등 비화폐거래로 나타나는 러시아 시장경제의 파라독스적(비상품·화폐경제) 상황은 상호지급연체(arrears)라는 또 다른 메커니즘과 함께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공존하는 특별한 체계를 구축했다.³²

²⁹-거래가 실행되는 데 있어 가격은 전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러시아에서 가격은 화폐가격, 바터가격, 계약가격 등으로 세분화되고 계약체결 당사자에 의해 수없이 많은 가격 변형이 나올 수 있다.

³⁰-수직적 통합은 기업의 거래비용과 조세부담을 낮추고, 연결망 내의 기업들의 총이윤을 극대화해준다. 그리고 수직적 통합을 통한 기업의 판매전략은 미래 판매의 불명확성을 감소시키고,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³¹-Макаров В., Клей нер Г., “Бартер в Росс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참고

³²-자세한 내용은 А. Яковлев, “О причинах бартер неплатежей и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4, 1999, pp. 102~115; Н. Я. Петраков, Русская рулет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ценою 150 миллионов жизней (М.: Экономика, 1998), сс. 221~238.

I
II
III
IV
V

바터거래의 확대는 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지급연체를 증가시킨다. 기업은 수요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자(기업, 가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호지급연체 현상은 정부-기업-가계 간에 하나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면서 전체 국민경제의 단위로 확대된다. 이러한 상호지급연체는 사실상 기업의 파산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제체제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³³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1990년대 이전 소비에트 시기와 매우 유사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가 제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통제하는 것은 중지했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수준을 통제했다.³⁴ 생산자들이 제품의 공급가격을 실제로 결정할 수 없고, 이것이 그의 통제권 밖에 있게 될 때 제품의 판매대금을 화폐로 수령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결국 상호지급연체 현상의 확대로 유도되었던 것이다.

33. 러시아처럼 진정한 의미의 파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제한된 경우라도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상황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34. 현재의 러시아 경제에서 임금 및 수익률 수준과 감가상각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 Гриценко Г., Стушин В., “Платежный кризис в экономике с неравновесными ценам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5 (1998), сс. 43~44.

표 III -2 1992~2000년간 러시아산업에서의 결제 구조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상품신용(비지불)	25.2	22.9	18.8	13.8	11.6	8.3	14.8	7.5	7.6
바터 및 상호청산	7.5	11.4	21.6	27.9	44.4	53.5	64.7	50.7	36.8
화폐결제	67.3	65.7	59.7	58.3	44.0	38.2	20.5	-	-

출처: E. Г. Ясин,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с. 278.

다. 대외교역구조의 원료지향성 강화

체제전환은 러시아 대외교역의 자유화를 가져왔다. 대외교역의 자유화 조치는 지속적인 생산감소 등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의 증대, 무역수지 흑자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러시아경제가 더욱더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대외교역을 통해 경상수지 구조를 개선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은 수출을 통해 국내시장의 유효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산업생산 감소와 경기침체의 악화를 일정 정도 억제하는 역할도 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로 러시아의 통화가치 하락을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또한, 대외교역의 확대는 저렴한 수입품의 수입 증대를 통해 생산감소 등 경제위기로 촉발된 국내의 물품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와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대외교역 자유화 조치는 위에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을 낳고 말았다.

첫째, 과거 구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내재된 기형적인 산업구조

I
II
III
IV
V

가 더욱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수출구조를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기계 및 설비의 수출은 1.8배나 감소했다. 대신 철광석, 원료·연료 등 에너지자원 등의 수출은 현저하게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수출부문에서 기술집약, 노동집약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원료·에너지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증가했다. 수입구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자본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기계·설비류의 수입 비중은 감소했고, 반면에 사치품과 대중소비재의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했다.³⁵ 본질적으로 기계·설비류의 수입은 수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혁신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투자로 연결된다. 이러한 수입행태의 지속은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불러옴으로써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침식시키는 파행적인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³⁵-1997년도 수입부문에서 식료품 및 농산물의 수입 비중은 26.4%를 차지했다. Goskomstat of Russia, *Russia in Figures: concise statistical handbook* (Moscow: Goskomstat of Russia, 1998), p. 375. 러시아의 수입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러시아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III-3 러시아의 對원외국가* 수출의 상품구조(전체대비 %)

산업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연료 및 원료	45.4	51.2	41.5	47.0	40.2	54.5	56.7
철광석 및 보석	12.9	20.0	32.5	27.4	31.7	20.1	21.2
기계 및 설비	17.6	8.7	6.4	8.1	10.0	7.6	8.6
화학제품	4.6	5.9	7.3	8.5	8.5	10.2	6.8
목재펄프	4.4	3.5	4.2	4.4	5.5	4.5	5.0
섬유 및 의류	1.0	0.7	1.8	0.9	1.0	0.6	0.5
식품 및 농산물	2.1	3.5	1.8	1.7	1.5	1.1	1.2
기타	12.0	6.5	3.5	1.5	1.6	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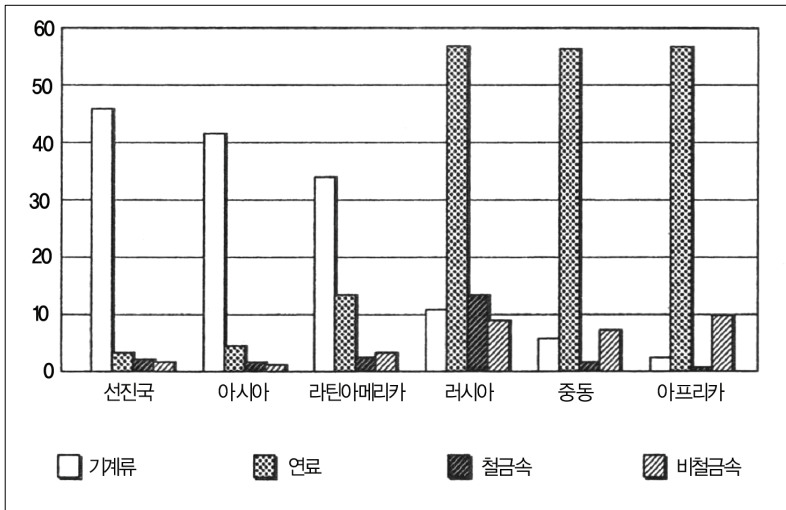
*주: 원외국가는 구소비에트(CIS) 공화국을 제외한 국가들

출처: Мартынов, В. А. Автономов В. С. Осадчая И. М.(Ответ, ред.) Перех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сийские проблемы, мировой опыт. Москва: Экономика, 2004, с. 326.

결국, 경제위기와 함께 가속화된 대외교역의 자유화 조치는 러시아의 대외교역구조가 점점 더 원자재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농산물, 가공식품, 대중 소비재 등의 수입대금으로 지출하는 ‘후진국형’ 교역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말았다.³⁶ <그림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각국의 수출상품구조를 비교해보면 선진국경제일수록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연료·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기계류의 수출 비중을 보면 러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의 경우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체제 전환과 함께 러시아경제가 선진산업국가들의 자원공급기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³⁶ 성원용, “러시아의 대외교역 구조변화와 세계경제로의 편입,” 『비교경제연구』, 제7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0), pp. 86-96.

● 그림 III -7 권역별 기계·연료·금속의 수출비중(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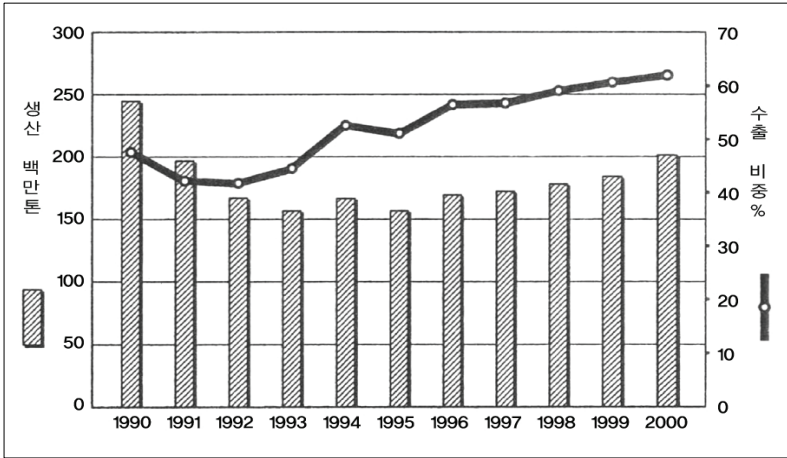


출처: Мартынов, В. А. Автономов В. С. Осадчая И. М.(Ответ. ред.) Перех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сийские проблемы, мировой опыт, с. 325.

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교역구조의 성격과 함께 에너지자원의 수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러시아의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은 1992년 이후 1995년까지 일정한 감소추세에 있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생산증대 속도는 둔화되었다. 기존의 주요광구에서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그간 설비투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생산설비는 노후화되었고, 그 때문에 생산성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새로운 광구를 찾는 노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광구가 보다 내륙 북방에 위치함으로써 생산비와 수송비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III-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에서 석유 및 석유

제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러시아에서 에너지원의 수출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92년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 비중은 42%였는데, 2001년에는 거의 65%로 증대되었다.

●그림 III -8 러시아의 석유·석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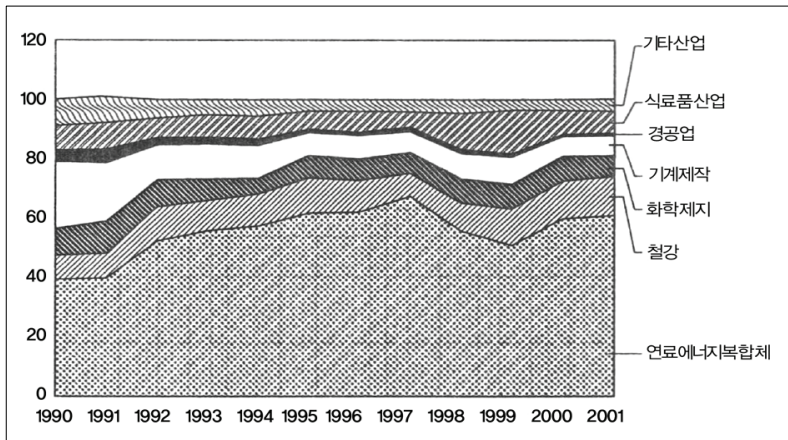
출처: Мартынов, В. А. Автономов В. С. Осадчая И. М.(Ответ. ред.) Перех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сийские проблемы, мировой опыт, с. 328.

셋째, 원료·에너지산업 제품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기형적인 대외교역구조는 제한된 투자자원마저 원료·에너지복합체에 집중함으로써 여타 산업부문으로의 투자 유입 가능성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로써 여타 산업들은 대내외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사태를 불러왔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원료·에너지복합체의 투자 비중은 1990년 39.1%에서 2001년에는 61.5%로 약 1.6배 증대된 반면, 기계제작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23.1%에서

I
II
III
IV
V

7.0%로 감소되었다. 전통적으로 군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계제작 산업은 일부 사유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소유 및 통제의 비중이 막강했는데, 1998년 말까지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 특혜들이 주로 연료·에너지복합체에 제공됨에 따라 상대적인 ‘재원결핍’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군산복합체에 포함되지 않는 가공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상 대외교역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들을 혹독한 시장조건에 방치하고 말았고, 그에 따라 투자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내외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말았다. 1998년 모라토리엄 등 경제위기 이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들 가공산업들의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제고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원료·에너지산업에 편중된 대외교역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급격한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III -9 1990~2001년간 산업별 자본투자 비중(경상가격 기준, %)



출처: Мартынов, В. А. Автономов В. С. Осадчая И. М.(Ответ. ред.) Перех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сийские проблемы, мировой опыт, с. 333.

라. 경제의 ‘자연경제화’와 ‘상업화’³⁷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가장 역설적인 사회현상은 GDP가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 기근과 같은 사회적 동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이다. 사실상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자본과 노동이 분리된 ‘문명화된 시장경제’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서 절대 대다수 인구의 주된 소득원이 ‘임금’이라고 할 때 수천 배에 달하는 생필품 가격 인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 하물며 임금과 연금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체불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농업에서 매우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업농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농업생산의 주체는 ① 농기업(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³⁸ ② 주민농(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③ 자영농(крестьянские(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개인부업농은 주민농을 구성하는 한 주체이다. 주민농은 “농촌이나 도시 부락 시민들의 개인부업농·기타 개인경영, 그리고 비상업 과수원·채소밭·다차 연합회에서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경영”으로 정

37. 이하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 중 일부를 정리·축약한 것이다. 성원용, “러시아 농업개혁의 패러독스: 개인부업농과 상품·화폐관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비교경제연구』, 제18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1), pp. 90~105.

38. 이 범주의 농업부문 지표에는 생산조합, 폐쇄·공개형 주식회사, 국영기업, 유한책임회사, 공업·수송·학술연구 분야 기관의 부업 등이 포함된다.

의된다. 여기에서 러시아어로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ЛПХ)로 표기되는 개인부업농이란 “개인부업 경영을 위해 제공 또는 획득한 토지에서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시민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노동에 의해 실행된 비기업적 농산물 생산·가공 활동 형태”로 정의된다.³⁹ 한마디로 개인부업농은 농촌 가족의 자원 및 노동력 이용에 기초한, 농업경제를 구성하는 특별한 부분을 말한다.

개인부업농의 공식적인 등장은 1920년대 소련 사회주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생산의 특수한 형태로서 개인부업농은 개별 자영농의 집단화 이후 ① 토지를 포함한 주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② 개인부업농 보유자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노동에 기초했다. 개인부업농의 자원에는 콜호즈·소포즈 구성원의 이용하에 있는 토지자원과 이들이 소유한 가축, 건축물 및 노동수단 등이 해당된다.

개인부업농은 용어상으로는 ‘부가적인’, ‘추가적인’이라는 제한적 성격을 규정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소득원이었다. 1930~1953년간 콜호즈 농민들은 이러한 개인부업농 덕분에 생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인부업농의 성격은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콜호즈와 소포즈의 재조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과거 개인부업농으로 경작된 텃밭은 러시아연방헌법에 따라 경작자의 소유로 이전되었는데, 체제전환과 함께 시작된 콜호즈·소포즈 조직의 해체와

39. “форма не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и переработ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личным трудом гражданина и членов его семьи в целях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лич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на земельном участ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м или приобретенном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9, с. 435.

생산기반의 붕괴, 그리고 반대로 자영농 등 새로운 농업생산 주체들의 출현은 장기 지연되고 체제전환위기로 그 존립기반마저 취약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개인부업농의 역할은 역설적으로 증대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과 1995년 농업생산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96.4%, 92.0%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한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했는데, 반면에 개인부업농을 포함한 주민농의 농업생산지수는 같은 해에 104.0%, 103.4%를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을 늘려나갔다. 농업생산 전체에서 주민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7.9%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였고, 2008년까지도 43.4%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⁴⁰

표 III-4 경영형태별 농업생산구조(실제가격 기준, 전체대비 비중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기업	68.6	71.0	73.7	50.2	45.2	42.3	42.6	45.8	44.9	47.6	47.6	48.1
주민농	31.4	29.0	26.3	47.9	51.6	53.8	52.5	47.9	49.3	48.0	44.3	43.4
자영농*	-	-	...	1.9	3.2	3.9	4.9	6.3	6.1	7.1	8.1	8.5

*주: 개인기업 포함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 2009. p. 409; Росстат.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хота и лесоводство в России 2009.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9, с. 53.

주민농의 품목별 농업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제품에서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꿀(92%), 감자(83.5%) 외에도 야채와 열매는 그 비중이

⁴⁰-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 2009, с. 409.

70%를 넘어서며, 우유와 양모의 경우에도 생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전체 농업생산에서 주민농의 비중이 가장 컸던 2002년의 경우에 야채 재배는 58.5%, 축산은 54.2%를 차지했다. 그동안 주민농의 농업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몇몇 제품들의 경우에 최근 수년간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이후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들의 비중 변화는 결국 자영농과 주민농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며, 향후 수년 내에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자영농이 확대·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농업생산 비중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 전체 대비 주민농의 품목별 농업생산 비중(%)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곡물	0.4	0.4	0.3	0.9	0.8	0.7	0.8	1.1	1.0	1.1	1.1	1.0	0.9
사탕무	0.0	0.0	0.0	0.6	0.6	0.7	0.9	0.9	0.8	1.1	0.8	0.7	1.0
해바라기씨	1.5	2.1	1.4	1.4	1.2	1.5	1.1	1.0	0.6	0.5	0.3	0.4	0.4
감자	65.1	65.4	66.1	89.9	91.2	91.1	91.3	90.9	89.3	88.8	86.4	85.5	83.5
야채	40.7	32.8	30.1	73.4	74.7	76.2	77.6	75.3	74.8	74.4	71.2	72.4	70.7
열매	46.9	46.3	50.5	77.4	84.1	83.0	85.8	75.9	84.7	78.4	82.8	77.9	79.1
도축육류	32.5	29.8	24.8	48.6	58.0	57.3	55.6	54.1	53.5	51.4	48.8	45.9	42.7
우유	33.6	26.9	23.8	41.4	50.9	50.9	50.2	51.3	52.0	51.8	51.3	51.7	51.7
계란	47.9	26.8	21.6	30.2	28.8	28.2	27.0	26.8	26.9	25.6	24.6	24.8	24.5
양모	20.8	19.5	24.5	42.5	56.8	58.9	60.4	57.6	57.1	54.7	52.9	55.7	55.4
꿀	51.4	57.7	69.4	83.7	88.2	89.7	90.7	90.7	90.8	91.6	91.8	91.6	92.0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 2009, с. 412.

축산 분야에서도 주민농의 생산 잠재력은 매우 높다. 2008년 기준으로 주민농이 보유한 소의 비중은 전체의 47.3%, 그중 젖소는 절반을 넘어 51.8%에 도달했고, 돼지는 37.9%, 면양과 염소는 50.6%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장기 추세로 본다면 돼지와 면양·염소의 보유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소(젖소)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 -6 전체 대비 주민농의 가축 보유 비중(%)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	22.0	16.4	17.3	28.7	38.0	40.0	41.4	43.0	44.1	44.5	45.7	46.5	47.3
젖소	34.4	24.6	25.5	38.4	47.1	48.2	49.6	50.5	50.8	50.7	51.3	51.7	51.8
돼지	20.1	16.4	18.5	33.4	43.6	43.7	44.6	45.4	45.1	42.9	42.9	41.5	37.9
면양·염소	29.6	23.3	27.7	47.9	63.5	63.4	60.1	59.1	55.1	52.5	53.5	51.8	50.6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 2009, с. 426.

결론적으로 1990년대 ‘반문명적인 시장개혁’이 낳은 왜곡된 시장관계는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혹독한 시장법칙에 맞서 생존할 수 있도록 어로, 수렵, 채집뿐만 아니라 다차 주변의 텃밭(채마밭)을 일구면서 각종 필요한 야채류를 자급하는 ‘자연경제’(natural economy)로 회귀하도록 강요했다.⁴¹ 그러나 이처럼 낙후된 상품·화폐경제권 배후에 자연경제권이 경제문화를 이루어 공식경제의 파국적 위기를 극복하는 순

⁴¹ 성원용, “현대 러시아의 농업개혁과 농업구조의 변화,” 『슬라브학보』, 제14권 1호 (한국슬라브학회, 1999), pp. 400~401. 1998년 8월 외환위기 후 ‘무엇으로 경제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340명 중 44%가 자신의 텃밭이나 다차에서 생산한 식량이라고 답했고, 여름에 저장한 식량(12%), 사냥이나 어로, 버섯, 열매 등 채집(12%)이라고 응답한 자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The Economist*, October 3, 1998.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⁴² 그것은 상품·화폐관계의 확대를 추구했던 개혁 목표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생산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연경제로의 회귀와 함께 1990년대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따리’ 형태의 소규모 국경무역상(shuttle trader)부터 좌판행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고파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상업화’에 휩쓸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 경제의 범죄화와 제2경제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사회경제적 현상은 범죄 마피아 세력의 창궐, 이들에 의한 자본집중과 증식, 권력과의 유착 및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 있다.⁴³

체제전환기 급격한 범죄증가는 매우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체제전환기 사회 구조적 왜곡 현상을 반영한다. 체제전환기에는 급격한 사회체제변화에 의한 가치위기, 빈부격차 확대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기존규범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의 증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의 규범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동시에 획득할 수 없는 기회의 증대는 일

⁴² 국내의 한 연구자는 러시아 사회체제가 드러내는 ‘위기’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러시아 사회가 ‘평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차와 텃밭이 나름대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다차와 텃밭은 “생존전략의 제1차적 지렛대”이자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그것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는 “사회적 진정제”의 역할을 한다. 김창진, “평온한 사회, 분열되는 국가,” 『경제와 사회』, 통권 제42호 (한울, 1999), p. 20.

⁴³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hil Williams (ed.),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FRANK CASS & CO LTD, 1997); William H. Webster, *Russian organized crime/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New York: CSIS, 1997).

탈적 규범에 대한 동의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탈적 규범에 따른 육구층폭행위들 중 하나가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⁴⁴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범죄 현상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경제의 범죄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데 있다. 극단적으로 조직범죄에 의해 경제활동이 통제되고 지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997년 말에 범죄자본에 귀속된 러시아 기업수는 무려 4~6만 개에 달했고, ‘마피아’는 37개의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산업자본의 55%,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80%를 장악하고 있었다. 조직범죄단은 1,500여 개의 국영기업, 449개의 은행, 귀금속산업체 전부를 포함하여 총 4만여 개의 산업체를 사실상 직접 통제하기도 했다.⁴⁵

체제전환 시기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조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존재했던 지하경제(shadow economy)를 근절하고, 러시아경제를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역설적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는 더욱 비대해졌다.⁴⁶

44.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체제전환국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참고.

45. Акош Силади, “Беда и катастрофа в России,” Косалс Л,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как особ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в кн: Конец Ельцинщины (Будапешт: Венгерский институт русистики, 1999), с. 21.

46. 러시아의 지하경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의 글을 참고. Косалс Л,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как особ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0 (1998), сс. 59~80; Исправников В. О.,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No. 6 (1998), сс. 40~50; Шестаков А. В.,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Дашков и К.», 2000); Сенчагов В. К.(Под ред.), Эконом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о-Финансы-Банки (Москва: Финстатинформ, 1998), сс. 485~507.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0~1991년에 GDP의 10~11%였던 러시아의 지하경제는 1996년에 GDP의 46%까지 증가했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구만 무려 5,800~6,00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⁴⁷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성격의 지하경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왜곡 현상에 의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체제전환기 혼란을 통해 지하경제는 러시아 경제체계의 안정적인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다. 그런 이유로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범죄와의 명확한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지하경제는 확대·강화되었다. 기업이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후견인(крыша)이나 관료에 대한 지출(20%)과 돈세탁비(5%)를 합한 것이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의 영역에서 지하경제의 문제는 부패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부패의 만연은 낙후된 시장경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자 체제전환국들의 공통적인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러시아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시장경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표하는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는 2~3 사이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에 세계 순위는 총 178개국 중 타지키스탄과 같은 154위였다.⁴⁸

⁴⁷-Косалс Л,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как особ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капитализма,” с. 59. 지하경제의 정의, 그리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규모 또한 달라진다.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서방선진국의 경우 GDP의 15%, 신흥개도국의 경우는 33% 전후가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하경제는 GDP의 40%를 웃돌아 6위, 한국은 35% 정도로 8위의 지하경제 비율을 나타냈다. *The Economist*, August 28, 1999.

그렇다면 이렇게 부패에 의한 지하경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I-7 국가기관의 행정적 장벽·일상적 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러시아 업계의 지출 비용(2000년)

장벽과 통제의 형태	비용(연간, 백만 달러)
행정적 장벽	
1. 법인등록	60~130
2. 상품·서비스의 의무 자격	120~150
3. 면허	100
4. 개별시장의 장벽, 상품의 의무적인 상표	200~270
5. 지역의 상표	50~70
6. 상품의 국가등록	12~18
7. 지역 및 지방정부 행정부의 투자프로젝트 심사	250~300
소계	792~1,038
일상적 통제	
평균 한 기업당 20개 이상 기관의 일상적 통제	7,200~7,500
전체	7,992~8,538

출처: E. Г. Ясин,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с. 212.

하나는 ‘큰 정부’ 담론에서 자주 지적되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행정규제와 일상적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80~85억 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구매력평

48. 각국의 사업가, 전문가, 일반대중 등이 ‘부패’의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0에서 10까지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패의 정도는 높은 것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10*, <<http://www.transparency.com>>.

가지수(PPP)로 환산한 러시아 GDP의 약 1%에 달하는 규모였다.⁴⁹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부패에 의한 지하경제가 창궐하게 된 것은 ‘국가포획’(state capture)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국가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러시아에서 국가관료의 행위를 통해 인식하는 국가란 그저 특정 권력을 갖고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개인들의 총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관계에서 힘과 폭력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각종 이권을 독점적으로 전유화하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은행 간 송금, 수출입 서류 조작, 내부자거래 및 가격조작 등의 다양한 수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자본을 서방으로 유출시키는 행태조차 극히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⁵⁰

3. 시장개혁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침식

체제전환기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시장개혁은 당초 급진개혁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체제전환국가들에서 대규모 실업,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절대 대다수 사회계층의 빈곤화, 빈부격차의 확대, 또 의료·교육 등 사

49. E. Г. Ясин,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с. 212.

50. 1991~1998년간 러시아에서 유출된 자본규모는 대략 500~1,000억 달러에 달하고, 스위스연방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의 평가에 따르면 1998년 초 외국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의 자본은 400~500억 달러에 달한다.

회보장체계들의 와해로 인한 ‘삶의 질’의 하락은 매우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유럽국가들보다 훨씬 크고, 그 파장은 보다 심각했다.⁵¹

가. 노동시장의 변화

체제전환과 함께 노동관계의 사회적 구조도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변화를 유발한 요인들에는 소유 성격의 변화, 사회경제정책의 성격, 인구학적 상황의 악화 등의 요소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노동관계의 사회적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소유관계의 변화이다.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의 자유화, 그리고 소유권의 변화를 초래한 사유화 등의 조치로 고용구조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소유형태별로 러시아의 노동구조를 비교해보면 국가부문에 고용된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고용인구가 대폭 증가되었다. 아래의 <표 II-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에 민간부문의 고용인구는 고작 12.5%에 불과했으나 바우처 및 화폐 사유화가 일단락된 1996년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38.2%로 증가되었다. 반대로 국가부문은 82.6%에서 37.0%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⁵¹ 보다 자세한 내용은 Богомолов О. Т., *Реформы в зеркал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равнений* (Москва: Экономика, 1998), сс. 90~99.

표 III-8 기업 형태별 러시아의 노동력 배분 구조

	1985	1990	1994	1996
국영	91.1	82.6	44.7	37.0
민간	8.9	12.5	33.0	38.2
공동	0.0	0.8	0.7	0.8
합작	0.0	0.1	0.4	0.6
혼합형태	0.0	4.0	21.2	23.4

출처: Gregory Paul R. and Robert C. Stuart,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New York: Addison Wesley, 2000), p. 287.

그러나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 뒤에는 생산요소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혹은 고용노동자 간의 분화에 보다 심층적인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러시아에 주요 생산요소를 소유하지 않은 고용노동 계급이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2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6,150만 명 노동인구 중 고용노동 인력은 5,830만 명이고, 고용인력을 유지하지 않은 비고용 노동인구는 90만 명이었다. 따라서 고용인구는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달리 말하면 사적소유로의 이행과 함께 상품으로서 노동력시장이 형성되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고용형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볼 때 일부 그룹의 지위가 변화하고 새로운 그룹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경제 및 관리 부문에서 관리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기업가들과 기업의 대표들이 해당되는 이 그룹의 비중은 1989년에는 고작 5%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2%로 증대되었다. 또한, 생산직 분야에 고용된 노동인구는 감소한 반면에서 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III -9 고용지위 및 사회그룹별 고용인구 구조(%)

2002년		1989년		
고용인구	100%	고용인구	100%	
고용노동	94.7	노동자	60.2	
비고용노동	5.2	관리자	34.4	
		콜호즈노동자	5.3	
고용인력 유치	1.5			
	고용인력 비유치	3.1	개인적 노동활동	0.1
	기타	0.4		
	고용인력 유치 불응답	0.2	불응답	-
고용상황 불응답	0.1			

출처: Сидорович, А. В.(Под ред.), Кур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Общие осно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Микроэкономика. Макроэкономика. Осно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Дело и Сервис>. 2007, с. 712.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노동구조의 변화를 일정 정도 편익으로 읽을 수 있다면, 열악해진 노동시장의 상황은 비용 측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93년 말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제활동인구는 240만 명이나 감소했고, 시장개혁 이래 고용인구는 820만 명이나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기준에 따르면 1997년 말경에 실업률은 9.1%에 달했다.⁵² 실업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인구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수급의 불균형, 경제활동의 주기적 변동에 따른 것도 아니고, 구조개혁, 또는 생산의 현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적 실업의 현상만도 아니라는 데 있다. 체제전환기 러

⁵² Четвернина Т. Лакунина Л.,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труда и механизмы ее преодолени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2 (1998), сс. 115~116.

시아에서 실업의 전반적인 증가는 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러시아의 급진적인 시장개혁은 국내산업의 기반을 침식시켜 국내시장이 외국상품공급자들에 의해 잠식되는 경우도 많았고, 과도하게 민수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군산복합체의 노동인력이 갑자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러시아의 실업현상은 지역적 특성을 갖기도 한다. 러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보다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었는데, 이것이 실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주자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실업상태로 남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표 III-10 러시아의 실업률(%)

	실업인구(천 명)			실업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2	3,877.1	2,026.2	1,851.0	5.2	5.2	5.2
1995	6,711.9	3,615.8	3,096.0	9.5	9.7	9.2
1996	6,732.4	3,662.5	3,069.9	9.7	10.0	9.3
1997	8,058.1	4,370.7	3,687.4	11.8	12.2	11.5
1998	8,902.1	4,792.6	4,109.5	13.2	13.5	12.9
1999	9,322.6	4,965.6	4,357.0	13.0	13.3	12.7
2000	7,514.7	4,030.3	3,484.5	10.5	10.8	10.1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2001, с. 164.

러시아에서 실업률은 1998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루블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던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00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실업 인구는 감소되고 있다. 2000년 750만 명에 달하던 실업인구는 2005년에 560만 명으로 감소되었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7.6%로 하락했다.

나. 소득구조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하락

체제전환기 대다수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전통적인 소득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초고속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임금·연금이 소비재 및 공공요금의 인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선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소득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의 주요 원천은 임금이지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총 화폐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식적으로는 40%대로 하락했다. 비공식적인 수입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대략 60~70%를 차지한다. 반면에 기업활동에 의한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소득구조와 비교해보면 이것은 기업설립의 자유화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로 경제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축소되고,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활동에

I
II
III
IV
V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5년 러시아와 1984년 미국의 소득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기업부문에서 세후 잔여이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대략 10배에 달한다.⁵³

표 III -11 러시아인의 화폐소득 구조(%)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화폐소득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업활동소득	3.7	16.4	13.1	12.5	14.4	12.4	15.4	12.6	11.9	12.0	11.7
임금	76.4	62.8	66.5	66.4	64.9	66.5	62.8	64.6	65.8	63.9	64.9
사회이전	14.7	13.1	14.0	14.8	13.4	13.1	13.8	15.2	15.2	14.1	12.9
자산소득	2.5	6.5	5.3	5.7	5.5	7.1	6.8	5.7	5.2	7.8	8.3
기타소득	2.7	1.2	1.1	0.6	1.8	0.9	1.2	1.9	1.9	2.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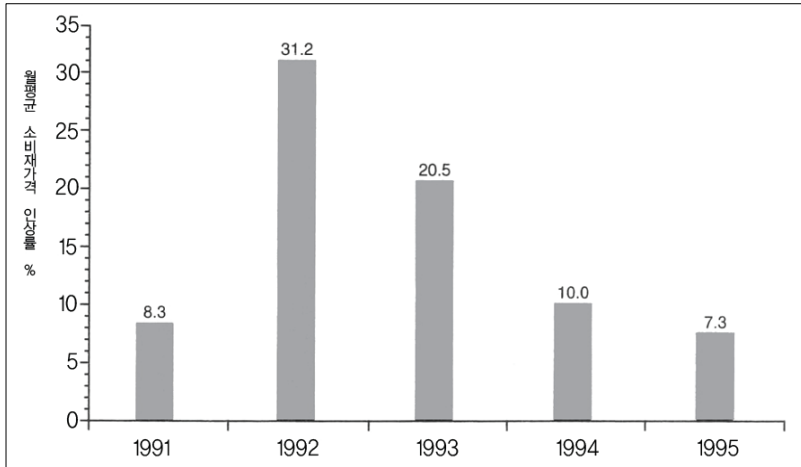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5. Стат.сб.. Москва, 2005, с. 187.

러시아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충격요법’으로 시작된 소비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다. 소비에트 시기에 인플레이션율은 2% 미만이었고, 1990년에도 5.6%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 중앙계획기구가 해체되면서 러시아정부 당국은 몇 단계에 걸쳐 가격인상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월평균 8.3%까지 물가가 인상되었다. 1992년 대부분의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소비재가격은 1992년에 2,500%나 인상되었다. 이후 급진개혁이 진행되던 3년에 걸쳐 인상은 점차 감소추세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1995년 말까지의 기록을 보면 1991년 말과

⁵³-Александр Анисим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вобода - не причина богатства, а его следствие,” Эксперт, 13 января 1997 г.

비교하여 가격 인상율은 1,411%이었고, 199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668%나 되었다.

●그림 III -10 월평균 소비재가격 인상률(1991~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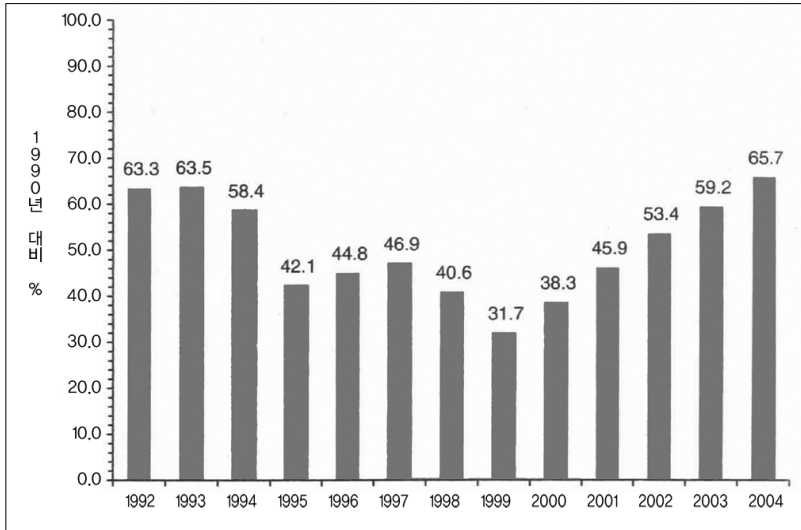


출처: David M. Kotz and Fred Weir,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p. 172.

러시아인 소득의 주요 원천인 실질임금은 이러한 초고속 인플레이션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했다. 1998년의 경우에 실질임금은 1990년 대비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실질임금은 1999년에 31.7%까지 추락했다.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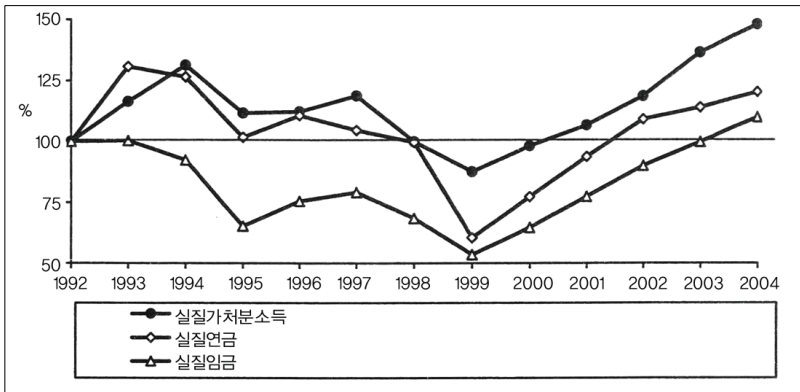
● 그림 III -11 러시아의 1990년 대비 월평균 임금변화 추이 (1992~2004년)



출처: David M. Kotz and Fred Weir,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p. 242.

1999년 말부터 러시아경제가 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실질임금은 다시 성장세로 전환했지만, 체제전환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1992년 수준을 회복했다. 실질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2001년에 1992년 수준을 넘어섰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개혁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초고속 인플레이션하에서 평균 임금·화폐소득·연금이 약 2배 이상 하락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림 III -12 러시아인의 주요 화폐소득의 변화 추이(1992년 기준)



출처: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5. Стат.сб.. Москва, 2005, с. 187.

한편, 러시아인의 상당수가 소득이 2~3배가량 하락함으로써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1992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화폐소득 인구는 4,970만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반면에 약 10%에 해당되는 러시아인들만이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기업활동에 역이용하여 자본축적에 성공하고 각종 수입사치품과 내구재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계층구조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서 빈곤층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I
II
III
IV
V

표 III -12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인구 변화 추이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백만명	49.7	36.3	41.9	39.4	34.6	29.3	25.5
총인구대비 비율 %	33.5	24.7	28.8	27.3	24.2	20.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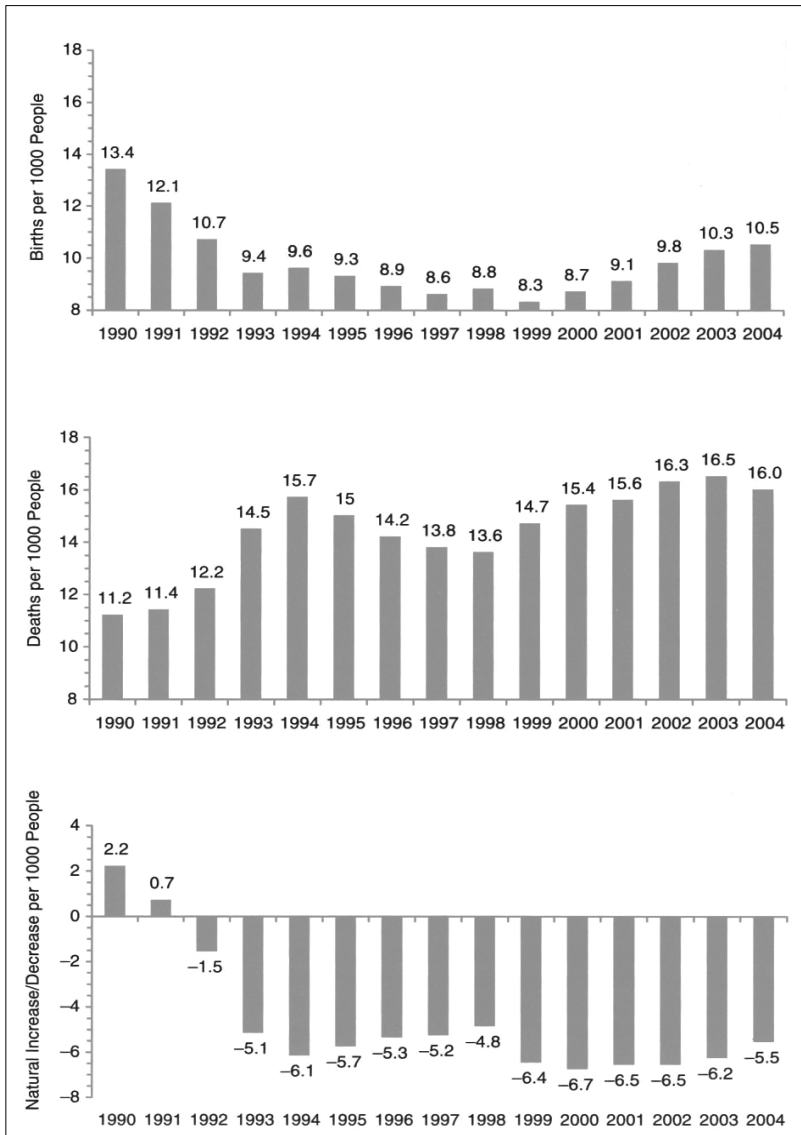
출처: Сидорович, А. В.(Под ред.), Кур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Общие осно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Микроэкономика. Макроэкономика. Осно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Дело и Сервис>. 2007, с. 749.

또한, 위에 언급한 러시아 사회계층의 빈곤화와 양극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유효수요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러시아 산업의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러시아산업의 재생산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 인구의 감소

위에 언급한 사회적 토대의 침식은 러시아에서 급격한 인구감소의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가히 ‘인구학적 위기’로 표현될 수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은 체제전환 이전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으로 발생한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복지재정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 등 사회정책의 실패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었고, 평균수명도 감소했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학적 위기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지방의 농촌지역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의 40% 이상이 연금생활자인 경우도 있었다.

●그림 III -13 러시아의 인구 증감(1994~2004년)



출처: David M. Kotz and Fred Weir,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p. 256.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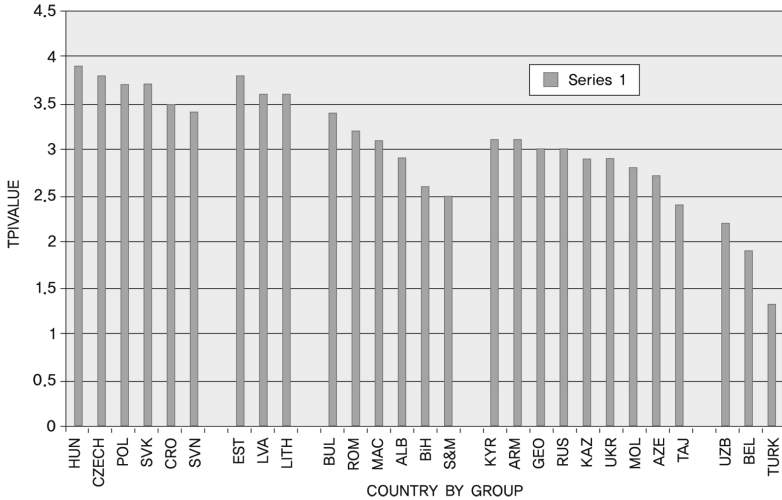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부담’, 즉 노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 노인의 수로 표현되는 지표들은 몇몇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부 흑해지역, 북서지역, 동시베리아지역, 극동지역의 경우 노동인구 1,000명당 비경제활동 노인의 수는 각각 460명, 390명, 257명, 194명이었다.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동일한 경제지역에서조차 공화국과 주별로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체제전환과 함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인구학적 위기의 가속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증폭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4. 비용·편익 분석의 제문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여러 기관에서 개발되었다. 경제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의 TPI (Transition Progress Index: 이하 TPI)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는 대규모 및 소규모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외환시스템, 경쟁정책, 금융개혁 및 금리자유화, 증권시장 및 비은행 금융제도 등을 TPI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TPI를 비용·편익 분석에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체제전환기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

● 그림 III -14 EBRD의 TPI 지표



출처: Erik Mathijs and Johan F. M. Swinnen,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1 (October 1998).

우선 비용·편익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TPI는 시장화의 정도, 이행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지,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가피한 비용과 예상되는 편익에 대한 준거 틀은 아니다.

비용·편익이 명쾌하게 분리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범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대로 J-curve 상에서 침체와 성장은 모두 이행의 비용·편익이 될 수 있다. 즉,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생산(산출)이 어떤 시기에는 비용으로, 또 어떤 시기에는 편익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시간 변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J-curve를 고려한다면, 과연 어느 시점이 체제전환의 시작이고, 어느 시점이 완료 시점인지 합의할 수 있는 시간 범주가 설정되어야 한다.

I
II
III
IV
V

아직도 “이행은 완료되었는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행의 종결 여부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가능한 한 1990년대를 시간범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열친시기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10년이 침체와 혼란, 불황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실제로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러시아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는 1990년대의 1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제적 비용이고, 무엇이 경제적 편익인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행은 체제와 경제주체의 변화를 동반한다. 경제체제가 시장화의 과정에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성격을 획득해갈 때, 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행과정의 결과들을 모두 편익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경제활동의 결과물들을 전유화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방향들도 편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방향의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왜곡 현상, 또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편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자. 시장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집단화의 해체와 자영농의 증가를 동반한다. 마더스(Erik Mathijs)와 스위넨(Johan F. M. Swinnen)의 연구⁵⁴에 따르면 탈집산화 지수(Decollectivization Index: 이하 DI)로 대표되는 탈집산화 속도는 동

⁵⁴-Erik Mathijs and Johan F. M. Swinnen,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1 (October 1998), pp. 1~26.

유럽 및 구소련 지역 국가별로, 또한 일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위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농장(individual farm)을 경영할 때 예상되는 생산성 및 수익성의 증가가 개인들이 집단농장을 떠나 개인농장을 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즉 ‘탈출비용’(exit costs)⁵⁵보다 더 클 경우에만 탈집산화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별로 탈출비용이 크고 적음에 따라 탈집산화의 속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론에 기초하여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집산화 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 된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탈출비용을 결정하는가? 대다수의 논자들은 토지개혁, 사유화, 탈집산화 규제 등이 ‘탈출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제도적 조건들이 ‘탈출비용’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탈집산화 과정에 매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체제전환기 농업부문의 제도적 환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한 제도의 출현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국의 고유한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농장 내 농민들이 자영농으로 ‘탈출’하려는 행위들을 체제전환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과연 그 농민들이 개인주의적, 아니면 집단주의적 소유양식과 생산조직 방식에 어떠한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반즈(Andrew Barnes)

⁵⁵ ‘탈출비용’은 집단농장을 떠나 새로운 개인농장을 경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즉 농장 구성원들이 이 조직에서 이탈하기 원할 때 직면하게 되는 모든 실질적인 비용과 거래비용, 그리고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작하거나 현존하는 개인 텃밭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포함한다.

I
II
III
IV
V

는 러시아의 예를 들면서 농업부문의 사유화가 공업부분보다 지체된 데에는 농업생산집단의 관리자(director)가 사유화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는 상충되는 ‘위협’으로 인식, 그것에 반대하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물론 이 주장은 농업생산조직에서 관리자(director)와 농민들 간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상명하복식의 통일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민주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탈집산화는 자영농으로 독립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과거 집단(국영)농장이 제공했던 많은 이점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조세개혁도 비용·편익을 동반한다. 부가가치세의 도입 등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조세체계로의 변화는 안정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이다. 문제는 이로써 기대되는 편익이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동반되는 비용도 크다는 것이다. 낙후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등 전산화를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설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설비에 거대한 자본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인력의 충원도 절실하다. 체제전환기에는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적인 탈세가 횡행하게 되는데,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조세경찰의 인력도 요구된다. ‘탈세’ 현상 자체도 비용이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 및 행정도 비용에 포함된다. 조세체계의 변화를 통해 기대되는 재정수입의

⁵⁶- Andrew Barnes, “What’s the Difference? Industrial Privatisation and Agricultural Land Reform in Russia, 1990~1996,”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5 (1998), pp. 843~857.

증대 및 투명성 증대보다도 불법적인 탈세 및 지대추구 행위의 일반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체제전환기에는 과연 무엇이 개혁의 비용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1990년대 체제전환기 10년의 결산보고서는 그 자체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반적인 전환의 비용인지, 아니면 러시아만의 특수한 사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들을 설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환 그 자체의 비용인지, 아니면 전환과정에서 진행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1990년대 러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전환의 비용들은 전환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급진개혁가들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전환의 비용이고, 어디까지가 정책실패의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체제전환 전략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상세한 프로그램의 차이와 개혁주체들의 정책 실패에 따라 비용으로 설정된 범주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비용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이행모델에서는 동일한 비용의 범주들이 발생되었지만, 모델을 달리할 경우에 그러한 비용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러시아의 비용 범주에서 논의하는 지표들이 다른 전략을 채택한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비용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전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전환 과정을 통해 체제전환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I
II
III
IV
V

- 체제전환 이후 시장개혁을 진행하기에 앞서, 뒤따르는 전환 비용·편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 기업 사유화와 같은 법률적 시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자연발생적인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불균형적인 초기조건하에서 선진국 경제에 맞추어진 거시경제정책은 비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행동 규범의 형성, 즉 제도적 틈을 촉진할 수 있다.
- 하나의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으로 제도를 이식하는 것은 제도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특히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한다.
- 체제전환개혁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국가의 구축이다. 국가는 단지 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앙의 권력기구는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대리자들에게 자신의 전권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점검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체제전환은 고용과 생산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낮추게 된다. 전통적으로 GNP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지출 비중은 동유럽국가들의 경우에 이미 1980년대에도 50%를 차지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62~63%에 달하기도 했다. 고용부문에서도 농업에서 사적부문이 발전되었던 폴란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공공부문이 전체 고용의 95~9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것이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하락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성의 증대로 해석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국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다. ‘전환’이란 조세·재정정책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우선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 바뀌게 된다. 과거 주된 재정수입원은 기업의 소득세, 교역세, 대외교역세 등이었다. 시장관계로의 이행과 함께 과거 60%에 이르렀던 기업의 이윤세는 약 30%대로 감소하게 된다. 대외교역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폐기로 대외교역세도 급감한다. 도소매 가격 차에 근거하던 교역세는 가격자유화와 도매가격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그 차가 급감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세원의 감소와 함께 전환 과정에서는 영세 소규모 민간기업인들이 출현하지만, 판매세 징세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감소분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조세 당국의 저급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소득세를 징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생산에서 사적부문의 비중이 커질수록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결과 GNP에서 국가수입의 비중은 50%에서 30~40%로 낮아진다.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는 예산 감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제는 재정규모의 축소를 동반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파장을 낳게 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는 것은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보다도 쉽게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 소련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GNP의 11% 정도에 불과했고, 1/10 이상은 보조금으로, 그리고 거대한 자금은 군사부문과 낭비성 투자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축소의 방향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비 지출 감소로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 전환의 지지기반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통계는 전적으로 대부분 국가부문에 집

I
II
III
IV
V

중되었는데, 전환과 함께 이 부문이 위축되기 때문에 과연 통계 등 정보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진단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부문이 신속하게 확장되지만, 이를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계 당국의 노동규율의 악화, 정보 축적 및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 등 인프라시설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새로운 민간기업 등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정보제공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

5. 체제전환시기 비용의 발생과 시사점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체제전환의 비용 문제를 검토해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GDP의 감소이다. 러시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국가들마다 생산감소의 폭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을 정도로 심각했다. 생산감소가 가장 적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15%에 불과했다. 체제전환기 개혁의 급진성이 클수록 생산감소의 폭이 크다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곧바로 침체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후 가파른 성장 속도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감소 및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에서는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이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에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5천 520만 명으로 37.7%까지 급증했다.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 등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해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하락이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시기의 생산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되어 설명된다.

첫째, 전통적인 투자부문에서 새로운 제도 구축으로 자원의 이전이 발생한다. 전통적인 경제메커니즘의 해체, 기업사유화, 새로운 은행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과세체계의 도입 등은 자원 배분의 전환을 동반하고, 따라서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 전통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구체제의 해체가 먼저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한 균형점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행동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의 기간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균형을 찾으려는 탐색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만, 상품 수요 및 가격 등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셋째, 생산감소는 지대(rent)의 재분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에서 지대소득은 도매-소매 가격차, 국내-대외교역 가격차에서 발생했고, 이것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중앙집중적으로 재분배되었다. 문제는 가격자유화로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에 있었다. 체제전환기에는 국가 대신 기업이 지대소득을 취하게 되고, 침해한 지대추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비용의 현저한 증가를 낳

I
II
III
IV
V

게 된다. 소득 분화의 급격한 증가세와 거대한 지대소득의 발생은 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부채질한다.

체제전환의 비용과 관련해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의 문제이다. 흔히 시장관계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이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것처럼 사고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행동규범이 장기간에 걸쳐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터, 비지불, 수뢰, 탈세, 자본유출 등과 같은 관행과 행동규범이 지속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차적으로는 거시경제조건의 급격한 변화에서 초래된 것이며, 이행기 지대소득의 개인으로 이전, 국가관리통제의 약화, 불명료한 시장행위 규범, 법률의 결함 등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이 경우에 일련의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 사회적으로 부패와 수뢰가 일반화될수록 각각의 부패 및 수뢰행위에 징벌을 가할 확률이 떨어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패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후 비효율적인 행위규범은 첫째, 부패행위 메커니즘과 기술의 개선, 부패의 위계구조 발생, 둘째, 비효율적인 행위규범의 다른 규범체계로의 침투와 상호연계(탈세 및 입법로비 등과의 연계), 셋째, 부패의 일상화로 인해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부패행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증대된다.

체제전환기에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자유화는 국가가 이행기의 지대 수취를 박탈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이 거대한 전환 비용을 구성하게 된다. 흔히 체제전환기에는 시장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토대의 구축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출현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폭넓게 채택되는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들이 제도적 목표와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연체 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파산법의 적용이 무의미한 결과를 낳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사유화가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가 지분을 소유한 개방형 주식회사 제도로의 변화는 과잉노동력의 해고나 경영자의 교체를 곤란하게 하고, 수직적 연계가 강한 기업들의 사유화는 오히려 독점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다음 체제전환의 비용과 국가의 역할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흔히 체제전환과 같은 거대한 시장개혁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국가의 역할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시장개혁의 목표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관리의 탈 중앙집권화를 지향하거나, 원론적으로는 국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부닥치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가 ‘강한’ 국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효율적인’ 국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 제도적 불균형이라는 조건에서 정부를 제외한다면, 그 어떤 경제 주체들도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업의 일개 경영자나 기업집단들, 혹은 민간기업가들이 상당한 수준의 수평적 계획화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체제전환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과제를 설정하고, 개별적 풍요를 지향한다.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은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협력, 동기유발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I
II
III
IV
V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그룹의 대표자들 간 대화를 조직할 수 있게 한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소득의 분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지하경제 및 부패의 증가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과정에서 사회계층의 복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절충적 성격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기구가 불안정하고 거시변수의 불안정 요인이 강할 경우에는 기업의 상태가 경영자의 질보다는 우연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그러나 한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일련의 산업부문의 파산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의 이니셔티브나 지원, 경쟁촉진, 관세율이나 쿼터 조정 등에 의한 수출입 규제 등이 이러한 산업정책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IV. 러시아 사회체제전환의 비용·편익



체제전환이란 사회학적으로 사회변동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바로 ‘사회란 무엇인가?’, ‘변동의 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바로 자신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도 전에 자신의 내부에 이미 근본적인 사회학적 논쟁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체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환된 것이며, 한편 외면상 전환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본질은 전환이 아닐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제전환’ 연구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연구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 통일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러시아 체제전환의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편익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⁵⁷ 하지만 여기에도 수많은 연구적 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통일 비용·편익 연구 자체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리고 비용·편익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문제라든지, 혹은 유형과 무형의 대상들을 수치화하는 데에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체제전환의 연구와 향후 남북통일 비용·편

57. 이종수,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2009).

I
II
III
IV
V

의 분석의 연계는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연구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IV장에서는 러시아 사회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남북한 통일 비용·편익 범주의 고찰을 위한 예비적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부문의 하위분야를 설정하여 각 분야별로 체제전환 중 어떠한 득과 실이 있었는지 분석하되, 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조사 및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남북통일 비용·편익 연구를 위한 사회부문의 범주 설정에 기여하리라 본다.

1.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과 비용·편익 개념의 문제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연구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러시아 체제전환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독립변수적 성격을 지닌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모순 혹은 사회적 문제들이 가중되면서 정치, 경제 분야의 개혁을 불러왔을 수 있지만, 여러 사회적 세력의 갈등이나 주동, 혹은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과제의 해결 등과 같은 측면들이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은 정치, 경제개혁과 이 분야의 체제전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전개된 측면이 있다.

또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목적이었으며,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정의와 평가에 따라서도 러시아 사회부문의 득과 실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무수히 많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내용으로 정리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까지도 먼 훗날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라보아야할 문제이다.

그 외에도 사회학의 두 가지 거대 담론에 따라서도 (사회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를 통합적 구성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하위 분야는 사회의 재생산, 사회적 삶의 질, 인간의 정신적, 지적 발전을 보장하는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예를 들어 가족제도, 교육과 훈련, 노동과 취업, 가계, 물질적·지적 소비, 건강과 스포츠, 문화, 예술, 학문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를 갈등적 관계의 대립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의 체계에 주목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분석은 사회 정의, 법, 자유,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별과 분절화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 경우 사회의 하위분야란 다양한 사회집단, 계층, 세대, 성별, 그리고 지역별, 주거지별, 부문별,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 공동체별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러시아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양자를 포괄하는 틀과 범주를 활용한다.⁵⁸

역시 양 입장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본 논문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양 입장이 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제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포괄적 차원에서 사회부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사회변동의 여러 층위, 그리고 어떤 집단(지배엘리트, 야당

⁵⁸-Заславская Т. И. Социет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осква: Дело, 2002), с. 175.



및 언론, 학자 및 이념가), 어떤 계층(지배엘리트, 중간계층,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체제전환의 해석과 수준, 강조점,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평가, 대책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변동을 논할 때 살펴봐야 하는 세 가지 층위로서, 사회형태를 결정짓는 제도, 사회구조, 사회문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지배계급은 개혁을 논할 때 형식적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고, 야당이나 언론인은 사회구조 부분에, 학자나 이념가들은 사회 문화적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⁵⁹ 이와 같이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세밀한 내용은 사후 과제로 넘기고 본고에서는 실제 러시아 사회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을 포착하여, 구사회주의권 국가로서 러시아의 일반적인 체제전환의 사회범주 혹은 카테고리리를 포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양상은 1990년대 초부터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결과는 2000년대 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체로 부정적 결과는 2000년대 초까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는 그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경계는 명확한 형태로 그어지지 않는다. 체제전환의 결과 새로운 사회 제도, 유형, 현상 등이 출현하여 일정한 모습으로 고착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체제전환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의 결과로서 주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의 부정적인 상황과 2000년대 중·후반부 이후 그중에서 일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

⁵⁹-Заславская Т. И. Социет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оссий 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с. 175~177.

는 긍정적인 양상을 기술하고 이들을 분류 및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과정과 단계를 기술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정리하며, 어떠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범주화가 가능한지를 제시한다.

2.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과정과 단계

가. 소비에트 체제의 위기와 사회변동의 필연성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탈 소비에트 20년간 러시아에서는 정치, 경제영역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구조적, 제도적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동의 시작점은 사실 소비에트 체제가 한창 무르익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견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중반까지 소비에트 연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구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지만, 1960년대 말부터는 양상이 달랐다. 우선 경제성장 속도가 확연히 떨어졌다.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6~1970년 7.5%였으나, 1971~1975년에는 5.8%, 1976~1980년에는 3.8%, 1980년대 초에는 약 2.5%로 떨어졌다.⁶⁰ 국민소득은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지도부가 이것을 위기로 인식한 결정적 계기는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패한 사실이었다. 당시 소연방은 군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소연방이 국내총생산의 5%를 지출했던 미국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36%를 지출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

⁶⁰-Селюнин В. С., Ханин Г. И. Лукавые цифры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5).

것은 불가능했다.⁶¹

이처럼 위기 현상이 나타난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사회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이제 더는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의 발생 원인은 사실 소비에트 체제 안에 있었다.

중앙 집중적 계획으로 운영되는 기본적 경제제도는 복잡하게 뒤얽힌 상품·화폐 유통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지방과 각 경제부문에서 중앙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허위보고, 뇌물, 매수로 덮인 채 허울만 좋게 굴러갔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는 각각 따로 놀았다.⁶²

정치 영역에서는 중앙권력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위기를 드러내었다. 중앙과 지역 간 모순의 증가, 민족 간 분쟁의 첨예화는 소비에트 제국의 위기를 예고했다. 특히 발트국가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인민 우호, 서구와의 경쟁, 국민 복지 증대, 사회적 평등 강화, 집단주의의 발전과 같은 가치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1960~1970년대에 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에 이르자 주민 대부분이 이것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 표어와 실제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수많은 유머의 등장이었다.

⁶¹-Заславская Т. И. Современное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оциальный механизм трансформации (Москва: Дело, 2004), с. 48.

⁶²-Най шуль В. “Высшая и последняя стадия социализма,” Погружение в трясины (Москва: 1991); Кордонский С. Г.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Трансформац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рынка,” Иное: Россия как предмет (Москва: Русский институт, 1995), сс. 167~212.

위기는 점차 팽배해졌고, 마침내 사회 상하층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인텔리겐치아로 표상되는 중간 계층도 합당한 지위를 잃었다. 전문가 집단은 서구로 이민하기 시작하였고, 소연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뒤처지는 원인과 자신의 개인적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원칙적인 문제와 비효율성, 따라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위기 현상들이 드러나자, 젊은세대의 당 노멘클라투라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형의 국가 관료적 ‘사회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진짜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불고 있었던 지식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은 사회적 발전에서 인간적 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제고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 특히 소연방에서 인간은 노동력의 단순 담지자, 경제시스템에 박혀 있는 ‘노동자원’의 한 작은 나사 정도로 취급되었다. 사회 발전에서 인간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는 모든 소비에트 체제 붕괴의 가장 총체적인 원인이었다.⁶³ 이 시점에서는 스탈린식의 ‘억압적, 강제적 동원’이 더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설령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에 닥친 위기의 성격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 사회의 생명력은 소진되었으며,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변동은 피할 수 없었다.

소비에트 체제의 위기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1990년대 엘친의 급진적 개혁이 일어났다.

⁶³-Барулин В. С. Российский человек в XX веке.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е себя (СПб.: Алетейя, 2000), сс. 114~126.

I
II
III
IV
V

이러한 개혁은 정치·경제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부문은 이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개혁 과정은 러시아에서만뿐만 아니라 구사회주의권 대다수 국가에서도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지정학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또 소비에트와의 단절과 연속성 속에서 개혁을 통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년간 전개된 사회변동은 국가에 의해 수행된 경제정책의 성격과 변화, 새로운 시장 영역의 발생과 특징, 시장에 대한 국민의 적응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은 다분히 정치·경제 변동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지만, 다음의 사회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사회변동 자체에 초점을 둔 경계이자 시기구분이다.

나.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1단계(1985~1991년)

1단계는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초의 시기로서, 일정 정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한 개혁이 사회주의의 체제적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되었던 때이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의 국영기업의 형태를 벗어나 협동조합이나 개인노동활동 등의 경제 형태들이 활발히 퍼져가고 있었지만, 국가 규모 차원에서 시장관계로의 이행이나 시장과 국민의 대중적 접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시장 개혁의 프로그램이 구상되고 있었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또한, 70년간 유지되었던 행정명령시스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즉, 검열의 거부, 개방의 확대, 이데올로기 장벽의 제거, 국민의 탈 이데올로기화, 물자 공급의 저하와 기하의 위협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 체제를 유지했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신화가

무너지 갔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수많은 소련 공산당의 비밀들, 예를 들어 예산 적자, 대외채무, 군사비 지출규모, 소련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환경 위협, 마약 밀매, 원자력의 실제 상황 등을 소련 국민이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고 ‘시장’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서 시장으로 점차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던 때였다. 처음으로 사적 소유제의 도입 방법이 공공연히 논의되었는데, 개인노동, 집단, 자치, 가족, 공동체 등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소유제 형태들이 사실상 사적 소유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그동안의 국가 정책의 모호성에 대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외국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진보적인 학자와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아의 위협을 실감하게 되고, 외부로부터의 원조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낡은 체제가 더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국민의 분노는 점점 더 치솟게 되었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의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토론이 새로운 경제 문화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래에 그것의 출현을 위한 전제 조건만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사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은 시장 속에서의 노동과 삶의 방식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행동은 누구도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례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했다.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

I
II
III
IV
V

을 국민은 수행하면 되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또한 명백했다. 노동규율을 위하여, 그리고 계획 달성을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곤 정해진 기금을 재촉하거나, 과제를 일부 정정하고 조정하며, 합의하는 것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요구되었다. 토지와 기업을 직접 사들이고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식회사를 창설하고, 개인 상점을 열며, 대외무역을 하는가? 사람들은 그동안 단지 한 가지 사업 방법만을 알고 있었다. 즉, '상부'에게 요청하는 것이었다.

1단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기간에 두 개의 정치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두 개의 체제란 바로 계획경제의 소비에트 정치체제와 또 하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시장 혹은 자본주의 정치체제이다. 사적 소유형태에 대한 과거 소비에트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점차 누그러졌고 긍정적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ВЦИОМ(전 러시아 사회여론조사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 사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응답자의 44%와 17%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992년 1월에는 각각 51%와 25%로 비율이 올라갔다. 1989년 말 자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응답자의 63%였고, 1992년 1월에는 81%에 달했다. 유사한 경향이 실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1989년 말 응답자의 45%가 실업이란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겼고, 1990년 말에는 39%, 1992년 1월에는 33%로 떨어졌다. 실업이란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각각 6%, 20%, 27%로 점차 올라갔다.⁶⁴

⁶⁴-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форм*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2004), с. 31.

이러한 예들로부터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시장’을 향한 러시아 국민의 마음속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람들은 점차 시장구조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실업, 파산, 경쟁 등)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틀을 유지하였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1991년 보수와 쿠데타의 실패와 소연방의 붕괴, 그리고 1991년 가을의 식량부족, 외환보유 부족, 루블화의 통화기능 상실 등은 사실상 엘친과 가이다르에 의한 급진적 개혁을 불러오는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2단계(1992~1993년)

2단계는 1992년의 충격요법에 의한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상업이 자율화되고 자유무역이 허용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루블화의 화폐 기능도 회복된 때이다. 하지만 물가상승, 실질임금 저하, 소비자구매력 저하, 외국상품의 도입과 국내산업의 악화, 국외투자 위축, 농업생산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 현상도 동시에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국민과 시장이 첫 대면을 한 때이다. 이러한 만남은 시장에 대한 국민의 미숙한 정보력과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났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는 시장개혁에 우호적이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제체제가 더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81%의 응답자가 ‘사적 소유와 시장에 기초한 체제’라고 답변하였다.⁶⁵

⁶⁵-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форм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2004), с. 31.

1991년의 사태로부터 비롯한 현실적인 민주적 개혁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강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시장개혁의 지지를 계속 유도하였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사회가 시장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충격(예금 가치의 상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실업 등)을 겪었음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사태(임금체납 등)는 아직 극대화되지는 않았고,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밝은 자본주의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시장에 대한 현실적 적응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에도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기존 체제의 파괴 과정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즉 정부 부처의 대규모 재편, 수많은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폐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시장의 개편, 새로운 소유 형태, 새로운 경제활동 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실질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러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소련에서는 금지되었던 이중 취업, 자유로운 상행위와 같은 업종의 출현, 새로운 전문성의 재교육과 개발 같은 것들이다. 은행이나 새로운 형태의 회사와 같은 시장 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요도 높아졌다. 광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노점상, ‘보따리상’도 대규모로 늘어났다. 중개업이나 경비,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서구적인 예약, 후원, 동업과 같은 경제활동 형태도 급속도로 늘었다.

이 단계에서 노동과 삶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사회적으로 깊이 있게 일어났다. 소련방으로부터 물려받은 과거의 가치들은 새롭고 시장

적인 가치들에 자리를 내주면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생활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맞서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를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태도 자체가 더 이상은 러시아인들이 과거처럼 더부살이로 살지 않겠다는 징표이기도 했다. 지출의 면에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은 실질적으로 지출의 60%를 주택 유지에 할당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도 사회와 국가가 아닌 가족이 엄청난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의료비 역시 가족의 지출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⁶⁶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된 사회변동의 1~2단계는 모든 국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 사람’, 즉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일반 전문가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정치가, 행정가, 경영인의 진화 단계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새 정부를 설립한 바로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낡은 제도가 허물어졌지만 새로운 제도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물오른 시기였다. 막강한 자금력과 연출, 그리고 정보를 거머쥔 그들은 이미 1단계에 적극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 2단계에서는 바야흐로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장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소련시대의 특권층은 역시 특권적으로 사회변동의 과정을 통과했다. 이들의 출현과 형성은 앞으로 러시아 사회에 발생한 양극화 현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⁶⁶ Сабуров Е., Шохин А. “Принципы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5 марта, 2000.

I
II
III
IV
V

라.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3단계(1994~1999년)

1992년의 ‘바우처 사유화’, 1994년의 ‘자본 사유화’는 기본 취지로 볼 때 중간계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소유자 집단의 발생을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 은행, 졸부들, 마피아 조직이 바우처를 마구잡이식 헐값으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개혁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소소유자들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했으며 그들에 의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세 번째 단계는 개혁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단계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단계는 개혁의 지지와 거부가 동시에 일어나고 최초의 두 단계에서 예정되고 있던 모순들이 심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주 명확히 특권층을 위한 것들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관료들의 부패와 여러 가지 직위를 이용한 범죄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으로부터 사람들을 멀리 소외시켰다.

가이다르에 의해 주도된 개혁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침체화하였다. 즉, 만성적 임금체납이 시작되었고,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국민 상당수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었으며, 전례 없던 부의 계층화가 심화하였고, 인구학적 상황이 악화하였으며(출생률의 저하, 사망률의 상승), 국외로의 대규모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인 인식이 발생하는데, 한편으로는 개혁가들의 승리, 개혁 정부의 건설, 개혁을 물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가 확대되었다. 1995년 러시아 여론조사센터(BЛИИОМ)의 통계를 보면 1994년과 비교할 때

개혁 지지자들의 비율은 54%에서 48%로 줄었다.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농업이 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51%에서 35%로 현격히 줄었다.⁶⁷

그러나 개혁에 부정적인 평가를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국민의 시장 경제활동의 참여나 시장의 적응과정은 멈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장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노동 잠재력을 더 극대화하고, 삶의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지에 모든 사람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 기반의 직업과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 갔고, 전문적인 노동뿐 아니라 뭐든 닦치는 대로 수익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활용했다.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상황, 인플레이션, 가격 인상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졌다.

시장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지면서도 1996년부터는 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민 사이에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올리가르히(과두재벌)’의 등장은 정경유착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병상에 쓰러져 올리가르히에 휘둘리는 옐친의 모습을 볼 때 국민은 체념감마저 느꼈다.

3단계의 후반부는 이전보다 더욱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최상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대한 국민의 적응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달성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취업, 직업, 일자리, 기술,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가치의 재평가를 통하여, 시장 개혁이 논의된 지 약 10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이제 ‘소비에트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인’이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임금체납, 수많은 산업 기업의 도산, 다

⁶⁷-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форм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2004), с. 34.

I
II
III
IV
V

양한 사회계층의 영락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말미암아 국가에는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례 없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 국면을 해결할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1996년까지 GDP가 하락하다가 1997년 최초로 상승하였지만, 1998년 8월의 금융위기는 대다수 국민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즉, 현실 경제에서 자금을 쥐고 흔들었던 금융 피라미드 구조가 붕괴하였고, 과잉상태였던 수입상품이 감소하였으며,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산업부문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마.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4단계(1999년 말~현재)

그동안 진행된 시장개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내버려 두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2000년대는 여러 국가적 문제들을 수습하고 정비하며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사실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된 엘친은 조기 퇴진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국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푸틴은 새로운 정치, 경제 노선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인가, 중단될 것인가? 러시아의 영원한 역사적 숙제가 다시금 제기된 것이다. 푸틴정부는 경제질서의 회복에 모든 조치를 집중하였다. 이것 중 상당 부분이 엘친 시대에 방치된 구멍을 메우는 조치들이었다. 가장 돋보이는 예는 과세정책의 결함을 교정하

는 것이었다. 다수 국민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조세 법률이 채택되었다. 토지와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시작되었는데, 2001년 말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토지법과 노동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규정의 채택과 대중들이 광범위한 현실에서 느끼는 법 적용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푸틴정부 초기 경제 성장의 반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계 석유시장의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석유, 가스의 수출은 러시아의 국가적 수입을 증폭시켰으며, 2000년대 국내총생산은 평균 6%씩 매년 성장했다. 이 기간에 러시아는 국가 채무를 청산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석유, 가스 재벌 기업들의 길들이기에도 성공하였다.

자원수출산업의 주도로 국가 자산이 불고, 일부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고 경제적 재편이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경제성과의 사회적 환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전히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부의 대부분이 상류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하였지만, 일부 중간계층이 출현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함께 국민의 시장경제의 적응도도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앞선 단계들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개혁의 성과가 상층과 일부의 중간층으로만 집중되어 대다수 국민은 새로운 시장체제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었다. 다양한 산업 부문의 노동자, 사무원, 전문가, 회계사, 교사, 의사, 학자, 문화인,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민들 등 대부분의 국민은 가혹한 시장의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은 정부와 시장체제에 오한이 나고 있다.

4단계는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푸틴 노선의 열매를 따 먹은 층과



더욱 소외된 층으로 나뉘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러시아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소득, 교육환경, 의료, 문화, 인구학적 상황은 매우 상반되며,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 사회의 주요한 현상으로 지속하고 자리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정책이 앞선 노선들과 차별성을 뚜렷이 보여 주지 않은 채 현재의 정치행태와 경제노선의 윤곽이 자리 잡혀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사회적 양상도 어느 정도 고착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대 중·후반부에는 그동안 급속도로 진행되던 사회변동이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은 차후 더 큰 국면의 차원에서 거대한 러시아의 사회변동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3.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양상과 결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은 국가 차원의 개혁노선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난관 외에도 몇몇 우연적 요소와 장애를 헤치며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나타났으며, 혹은 국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필연적으로 나타났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 사회현상과 결과가 있었으며, 한편 과거 소비에트체제하에서는 얻기 힘들었지만, 새로운 사회체제가 추구하고 그 결과 획득할 수 있는, 혹은 획득하고자 하는 긍정적 사회현상들도 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포착되는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분류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가. 러시아 사회부문 체제전환의 부정적 결과

(1) 인구학적 위기

개혁의 시대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 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⁶⁸

러시아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1억 4,190만 명이다. 러시아는 20세기 몇 차례의 인구격변기를 극복하고 20세기 후반에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규모는 약 680만 명이 축소되었다.⁶⁹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인구문제는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그리고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의한 이주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는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부터 기인하다.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199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2009년까지 약 1,300만 명이 감소되었다.⁷⁰ 하지만 동기간에 국제이주민의 순유입이 약 450만 명에 달해 총 인구의 감소폭을 다소 완

⁶⁸.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⁶⁹. 2010년은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с. 81. 1990년대 초반은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с. 19.

⁷⁰. 1992~2008년까지는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с. 66. 2009년은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с. 84.

I
II
III
IV
V

화시켰다.⁷¹ 만약 국제이주민의 유입이 없었다면 지금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 이하로 밀들었을 것이다.

사망률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저하된 원인과 배경으로는 경제위기,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구감소에 영향을 준 그 밖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또한 불안정한 가족 상태(이혼율 및 사생아 급증 등), 살인율과 자살률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⁷²

여기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바는 특히 ‘노동연령인구’층에서의 심각한 사망률 증가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40~50대 연령층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이 상승하여 2000년대 초반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는데,⁷³ 그 중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3~4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도한 노동, 산업재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알려져 있다.⁷⁴ 또한,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 남성들에 비해서도 러시아 남성들은 20~50대 전 연령층에 걸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⁷⁵ 따라서

71. 다음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계산함. 1992~1999년까지는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1), сс. 336~339. 2000~2008년은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с. 464. 2009년은 다음 참조.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сс. 86~87.

72. Троицкий Е. С.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и в обстановке кризиса с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ая группа <Граница>, 2009), с. 17.

73. 2003년에 1,000명당 사망률이 40~44세는 9%, 45~49세는 12.5%, 50~54세는 17.5%, 55~59세는 22.2%로 나타나고 있다.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5), с. 257.

74. Шкарин В. В., Величковский Б. Т., Позднякова М. А. Социальный стресс и мед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России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2006), сс. 75~102.

75. Суринов А. Е.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1992~2002 (Москва: Статистика России, 2003), с. 256.

기대 수명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에는 70.13세였는데, 2003년에는 64.85세(남자: 58.55세, 여자: 71.84세)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8세 정도로 회복되었다.⁷⁶

표 IV-1 2000년대 매년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

(단위: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생	1266.8	1311.6	1397.0	1477.3	1502.5	1457.4	1479.6	1610.1	1713.9	1764.2
사망	2225.3	2254.9	2332.3	2365.8	2295.4	2303.9	2166.7	2080.4	2075.9	2013.6
감소	958.5	943.3	935.3	888.5	792.9	846.5	687.1	470.3	362.0	249.4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с. 84.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90년대 매년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는 평균 약 70~80만 명이었는데,⁷⁷ 2000년대 초반에는 100만 명에 근접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다소 출생규모는 높아지고, 사망규모는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⁷⁸ 인구의 자연감소는 여전하지만, 최근에는 감소의 속도가 꽤 늦추어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의 국제 이주 현상도 증가하였다. 러시아도 1990년대 개혁 이후 이와 같은 국제이주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데, 특히 독립국가연합과 발트국가들과의 이주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 이것은 과거에 같은 소연방 국가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이들 지역이 지니는 지리적 근접성과 육로, 해로, 항로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아시아와

⁷⁶-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с. 103.

⁷⁷-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9), с.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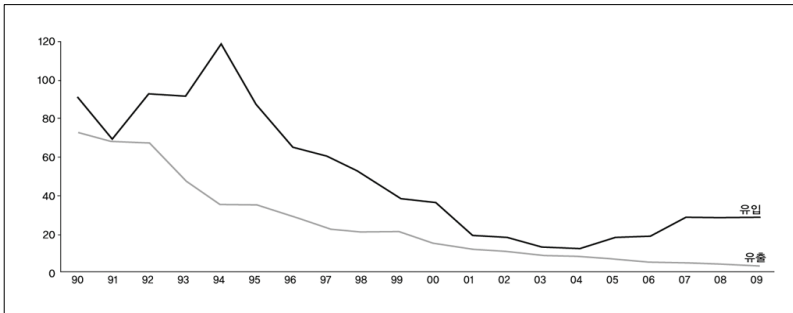
⁷⁸-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с. 84.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로서의 위치를 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⁹⁾

하지만 1990년대 한때 순유입 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러시아의 국제 이주민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적은 규모로 축소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독립국가연합의 저발전 국가 이주민에 대한 흡입력이 떨어진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법 제정과 규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IV -1 1990~2000년대 국제이주민의 유입과 유출

(단위: 만 명)



출처: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сс. 42 2~423; Росстат. Бюллетень “Численность и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9 году(выпуск 2010 г.),” (Москва, 2010), с. 35.

사실 러시아 내 국제이주민의 유입은 특히 인구 및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국제이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러시아의 인구감소와 향후 노동력 부족 사태를

⁷⁹⁾Рязанцев С. В. Турдовая миграц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и балтии: тенденции, последствия, регулирование (Москва: Формула права, 2007), с. 70.

부분적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체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 감소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국제이주민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이주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식이 환기되면서, 점차 이주민 유입의 양이 다시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로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러시아 내 국제이주민 유입 흐름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러시아인의 귀환’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이주민들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노동 및 취업의 동기로 이주하고 있다.⁸⁰

(2)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악화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은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여 당시 이것은 일상적, 대중적 현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⁸¹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인구의 30%가 2003년 당시 최저생활비 800루블 미만의 소득수준을 지녔다. 러시아 인구의 10%는 소비품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80%는 굶주렸다.⁸²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렸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⁸⁰- 최우익, “러시아의 인구감소와 국제이주민의 유입 - 인적자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pp. 613~633.

⁸¹-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⁸²- Тоценко Ж. Т.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ЮНИТИ-ДАНА, 2005), с. 127.

밖에 없었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의 전문성이나 숙련도와 상관없이 임금이 매우 부당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농업, 경공업, 학문, 교육, 보험, 문화 분야에서는 평균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2000년도 시점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미국의 2.5%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3불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0.1불이었다. 1999년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4~27불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약 0.4불이었다.⁸³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은 분명 노동활동의 쇠퇴와 국민 생활수준 하락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련 시대보다도 그들에 의해 생산된 소유물로부터 더욱 소외되었고 권리를 덜 누리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시장개혁 초기에 구상하였던 것만큼 노동 동기도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생산성도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기술적으로도 노동관계가 퇴보하였다.

시장 개혁은 또한 농업에서도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인농업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니까 가까운 장래에 개인농업 및 농장은 농업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농업개혁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시장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조직으로 기존의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을 변형시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농장의 공식적인 재등록 절차가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와 연금은 농업노동자 집단과 연금생활자들에게 건네졌고 각 조건에 맞는 단위로 분

⁸³-Тощенко Ж. Т.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ЮНИТИ-ДАНА, 2005), с. 127.

할되었다. 더 나아가 각 단위 소유자는 토지와 일정 재산을 가지고 농장으로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집단에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농장들은 재등록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공동배당 소유제에 기초한 집단농장이 되었다. 일부의 농장은 이른바 농민농장 및 협동조합 협회(ассоциация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и кооперативов)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은 농업의 시장경제화 및 상품생산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농민은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들과 힘겹게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농업의 위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⁸⁴

본래 시장개혁의 취지대로 하자면 우선순위로 추진되었어야 할 개인적 차원의 자영농에 의한 농장경영 형태는 초기에 제도적 도입을 성급하게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시점에 자영농에 의해 운영되는 농장(фермерство)생산량은 전 농업생산의 단 3%를 차지하는데에 그쳤다.⁸⁵

농장경영은 물적 기초가 부실하고 경영이 미숙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수많은 농장들이 파산하였고, 자신의 물적 기초를 상실하였다. 대외무역의 자유화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러시아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허용하여 러시아 자영농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⁸⁴ “Радикальна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траны и ее издержки,” <<http://bookishman.com/395.html>> (검색일: 2011.4.18).

⁸⁵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I
II
III
IV
V

(3) 사회복지 및 사회제도의 약화

식료품 가격은 대다수 러시아 국민의 소비 및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식료품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 다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국민의 금전지출에서 개혁기간 동안 음식료품의 비율은 항상 높았다. 1990년 음식료품의 비율이 금전지출에서 43%(주류비를 빼면 거의 30%)이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은 20%로 두 배가 낮았다. 2000년에 미국은 15% 이하로 떨어졌는데, 러시아는 46.5%로 올랐다(주류비를 빼면 37.2%).⁸⁶ 그만큼 러시아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들의 심각한 질병으로는 마약중독, 에이즈, 결핵 등을 꼽고 있다.⁸⁷

학문 분야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990년에 국내총생산의 약 2.4%를 학문에 지출했다면, 1991년에는 지출이 0.29%로 줄었다. 2000년에 러시아는 학문연구에 10억 달러를 썼다. 많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위축되었고, 수십 개의 분야별 연구소들이 문을 닫았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수는 2/5로 축소되었는데, 즉, 1990년 210만 명에서 2000년에는 80만 명 이하로 줄었다.⁸⁸ 수천 명의 학자들, 특히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들이 외국으로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다른 영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재정(2000년은 1991년의 40% 수준)은 교육분야에서도 위기

⁸⁶-Тощенко Ж. Т.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ЮНИТИ-ДАНА, 2005), с. 128.

⁸⁷-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⁸⁸-*Ibid.*, сс. 343~344.

적 상황을 낳았다. 적지 않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2004년 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⁸⁹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교육여건이 다소 회복되었다. 2000년대 중반 고등교육기관은 국립은 약 600여 곳, 비국영은 약 350여 곳이며, 약 470만 명의 대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상대적으로 대학생 수가 줄었으나, 그 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즉, 2005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은 481명인데, 1995년에는 189명이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 예산의 12%를 교육에 지출하였으나 1992년에는 5.8%, 1993년에는 4.4%, 1996년에는 3.4%까지도 떨어졌다. 그 후 러시아연방법 ‘교육에 대하여’에 따르면 연방 예산의 3% 이상을 교육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1999년까지 교육예산은 거의 이 수준에 달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현재도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이 뚜렷한 결실로 나타나려면 최소 10~15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⁹⁰

개혁기 러시아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부패 및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주로 관료들에 의해 행해졌다. 개혁기에 국가 재산의 누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한다. 권력을 이용한 관료의 부패 및 경제와 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이슈는 러시아 대중매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으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⁸⁹-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с. 343~344.

⁹⁰-Шафранов-Куцев Г. Ф.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книга, 2008), сс. 222~224.

I
II
III
IV
V

경제영역의 범죄화는 또한 지하시장 혹은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40~50%가 지하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실상 경제에 대한 느슨하고 허술한 국가의 통제력에 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수십 년간 존재했던 형식적, 편의적 행정명령 관리제도가 여전히 잔재처럼 남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경제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뇌물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하여 개혁기간 동안 총체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부패 현상은 단지 널리 확산된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체계로 유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⁹¹

1980년대 말과 비교하여 상당히 언론의 자유 및 정보 개방의 수준이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정보매체는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적 검열이 복구되고 있고, 몇 년 전 학자들에게 공개되었던 몇몇 자료실은 다시 폐쇄되었다. 독립적인 정보 출처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그것들에는 접근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러한 사정은 지방에서 더 그렇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면에는 수많은 산업체의 폐쇄와 대량 실업 현상이 나타났으며, 월급과 연금의 정기적인 지급이 중단되곤 하였으며,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시스템이 매우 약화되었다. 20~30%의 가족은 심각한 궁핍상태에 있고, 허물어진 집에서 거주하며, 영양실조 상태에 있거나 병에 걸렸으며 조기 사망하였다. 특히 젊은세대에서 출생률이 저하하였고, 영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아이들의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있고, 건강한 징병검사 합격

⁹¹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대중적 저항운동이 발생하지만, 당국의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가 부재한 상태이다.⁹²

(4) 사회계층화 현상과 지배엘리트의 등장

경제와 정치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양상은 러시아의 사회부문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사회의 양극화가 극대화되었는데, 즉 지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자원은 훨씬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사회집단 층은 모든 자원이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전 가족의 6~10%가 총소득의 약 절반을 획득하고 있으며, 총 자산의 70~80%를 소유하게 되었다.⁹³

1990년대에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비즈니스계층이 출현하였고, 다양한 직업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중간계층의 형성과정도 진행되었다. 러시아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 즉 부동산,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금융 등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급속히 확대된 서비스 분야에 국민의 1/3 이상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다수의 급속한 영락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다수 기업의 파산, 실업자 발생, 병적인, 투기적인 경제행위 등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사회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장 부유한 층 10%와 가장 빈곤한 층 10%의 총소득을 비교하면 1:15.5로 평가된다. EU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3이다. 1:10의 비율 이상이면

⁹²-Заславская Т. И. Социет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осква: Дело, 2002), сс. 173~175.

⁹³-*Ibid.*, сс. 173~175.

I
II
III
IV
V

그것은 사회적 재앙의 전조로 여겨진다. 국민의 1/3이 사실상 빈곤한 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연금생활자, 다자녀 가정, 실업자뿐 아니라, 낮은 봉급을 받는 고등교육자(선생님, 의사 등)도 해당된다. 권력에 근접한 소수 집단에 의한 사유화 과정에서 부의 강탈, 부자와 빈자 간의 경계는 공정성에 대한 오랜 러시아의 꿈을 짓밟았다. 이것은 1990년대 경제개혁의 가장 두려운 심리적 쇼크 중의 하나로 꼽힌다.⁹⁴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순위 20% 별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2000년대에도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표 IV-2 소득순위 20% 집단별 소득총액 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집단(최하)	5.9	6.0	6.0	5.9	5.7	5.7	5.5	5.4	5.4	5.4
2집단	10.5	10.6	10.5	10.4	10.4	10.4	10.3	10.1	10.2	10.1
3집단	15.3	15.0	14.8	15.1	15.4	15.4	15.3	15.1	15.2	15.1
4집단	22.2	21.5	21.1	21.9	22.8	22.7	22.7	22.7	22.7	22.6
5집단(최상)	46.1	46.9	47.6	46.7	45.7	45.8	46.2	46.7	46.5	46.8
소득격차율	13.6	13.8	14.1	13.9	13.9	14.0	14.5	15.2	14.9	15.3
지니계수	0.390	0.394	0.400	0.395	0.397	0.397	0.403	0.409	0.406	0.410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7), с. 196;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5), с. 203.

러시아에서 진행된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지향성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전 국민의 8~

⁹⁴-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22~324.

20%)는 더욱 부유해지는 결과를 의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의 천연자원을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5~7% 범위의 사회집단은 최상위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다.⁹⁵ 이들 경제엘리트는 내부적으로 때로 대립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치 권력자와의 결합, 동종분야 경제인들 간의 협력, 친인척 및 학연으로 뭉쳐 있다.⁹⁶ 반면 아래의 표에서도 보듯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는 전 국민의 40%에 달했다.

표 IV-3 러시아 주민들의 일인당 월평균 소득 및 최저생계비
(인구단위: 백만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월평균소득	942	1,012	1,659	2,281	3,060	3,947	5,170	6,410	8,112	10,183
최저생계비	411	493	908	1,210	1,500	1,808	2,112	2,376	3,018	3,422
최저생계비미만 소득인구	31	34	42	42	40	36	29	25	25	22
비율	21	23	28	29	28	25	20	18	18	15

비고: 1997년 소득 단위는 1,000루블, 1998년 이후는 루블.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7), сс. 182, 199;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2), сс. 173, 190.

1990년대 급속히 전개된 러시아의 사회변동은 그 이후 대체로 시장 경제체제에 적응해 가고 있는 국민의 약 20% 집단과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한 나머지 국민들 간의 여러 가지 측면의 양극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물질적, 심리적 상태의 면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⁹⁵- Львов Д. С.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тия (Москва: Экзамен, 2002).

⁹⁶. 최우익, “러시아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1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pp. 559~577.

있다.⁹⁷

(5) 지역 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격차 심화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사회 발전의 지표상에서 지역 간의 대비적 현상이 많은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평균 국민 1인당 수입의 규모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약 3배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1990년 모스크바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 4,000루블이었다, 다게스탄의 경우는 1,300루블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최대와 최소를 따질 때 1994년에는 6배, 1998년에는 12배에 달하게 되었다.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구분은 보다 완연해졌는바, 예를 들어 전자의 지역으로는 모스크바나 가스석유채굴지역, 그리고 극동의 몇몇 지역이 속하며, 후자로는 북카프카스, 칼미키, 티바, 그리고 몇몇 북극 자치구들이 속하게 되었다.

또한, 부유한 지역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입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분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하위 수입 20%대의 주민과 상위 20%대 주민 사이의 수입 규모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 이미 20배에 달하게 되었고, 비교적 그 차이가 덜한 지역도 3~4배에 달하게 된다.

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수입규모에서 보다는 그 차이가 덜하다. 1998년 금융위기 시 지역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10~12배에 달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차이는 북쪽과 동쪽의 일부 원료채굴지역과

⁹⁷ 최우익, “현대 러시아의 사회 계급계층 변화,” 『슬라브학보』, 제15권 1호 (한국슬라브학회, 2000), pp. 419~448.

남쪽의 주로 농업과 관련한 노동집약적 지역 간에 발생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비 물품과 서비스 가격의 지역적 분화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다분히 기후적 조건과 주변부적 위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쪽지역이나 극동지역의 경우(추코트카, 코랴크, 타이미르, 네네츠, 캄차트카, 사할린, 야말로네네츠, 무르만스크, 사하 등)에는 그 물가 수준이 모스크바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체로 중앙지역(블라디미르, 코미, 오를롭스크, 탐뵘스크, 툴라, 리페츠, 추바시, 스몰렌스크, 프스콥스크 등)이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의 지출이 가능한 곳이다.

많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평균 수입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지니는 빈곤 상태에 처해있고, 예를 들어 티바 공화국, 치타주의 경우에는 2/3의 주민이 빈곤 상태에 처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지하경제, 가계의 경우 공식 통계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까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상태에 처해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 혹은 차별적 발전 양상은 취업, 수입,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화 현상을 초래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남부연방관구의 일부 공화국들, 북극지대의 일부 자치구, 흑토지대의 몇몇 주의 경우는 1/5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벨고라드, 볼로고드, 리페츠 주와 같은 철금속 지대는 1/3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반면 네네츠 자치구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1인당 지역총생산고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20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상위 연방 주체 5개가 국내 총생산의 3/10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주체가 2/5를 생산하고 있다.

I
II
III
IV
V

3개 연방관구(중앙, 볼가, 우랄)의 지역에서 국내 총생산의 2/3가 생산되었다.⁹⁸

결국, 현재 러시아연방에서는 질적으로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군들이 형성되고 있다. 높은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확보된 지역이나 석유 가스 채굴지역(한티-만시와 야말-네네츠 자치구), 그리고 모스크바와 같은 지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정도 수준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군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은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러시아 지방의 모습은 결국 그 지방 내부에 서로 다른 사회계층화 현상과 구조를 가지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⁹⁹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매우 날카로운 경제적 모순이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소련 시대에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한 인간의 생활의 질을 보장했던 지역적 역할 분담의 산업체제는 이제 오히려 허물어지고 있다.

나. 러시아 사회부문 체제전환의 긍정적 결과

(1) 시장경제의 적응과 중간계층의 형성

인권과 자유의 확대에 바탕을 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치(개방) 시대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1993년 헌법은 의회와 사법부 위에 행정부를 군림할 수 있게 권

⁹⁸-Климанов, В. В.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УР, 2003), сс. 35~49.

⁹⁹-최우익,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 『러시아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pp. 353~384.

한을 주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점점 더 권위주의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제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산의 분할과 사유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민주주의의 형성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즉 경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반(半)국영적 기업들에 의해 독점화되었고, 중소기업은 법적, 경제적 굴레에 빠져 기대하였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생산의 효과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또 달성할 수 있는 기업가적 소유자 집단이 창출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장개혁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무엇보다도 경제의 탈국유화, 소유에 대한 국가 독점의 중단, 사적 기업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수준은 아직 낮고 효율성도 떨어지며 수많은 부정적인 성격을 지녔더라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필요했고 사회발전 가능성의 폭과 기회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수천만 러시아인들이 시장경제를 배우게 되었고,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 외화와 유가증권을 다룰 줄 알게 되었고, 은행거래, 부동산 매매, 주식투자, 사기업 창설, 외국 파트너와의 무역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인은 새로운 전문성을 키우고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사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과거에 러시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구조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속에서 만들어진 가장 커다란 사회적 결과일 것이다.¹⁰⁰

이에 따라 소득 및 임금의 상승 기회와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¹⁰⁰ - 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форм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2004), сс. 17~22.

I
II
III
IV
V

언급하였듯이 무엇보다도 소수의 특권층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간계층의 출현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 시장개혁이 진행되고 심각한 사회변동과 사회계층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중간계층의 형성문제는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중간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개념 규정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여,¹⁰¹ 1990년대 후반에는 일정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중간계층의 형성 혹은 와해는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초점이 되었는데,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간계층이 1998년 위기 이전에는 러시아 사회계층에서 25% 정도를 점했는데 그 이후로는 18%로 축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이제 중간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지만, 아직 이들은 말 없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¹⁰² 금융위기 이후 중간계층의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¹⁰³ 정체성을 지니고 사회적 공동체를 이룰만한 중간계층의 형성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었다.¹⁰⁴ 더 나아가 이들은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¹⁰¹- Умов В. И.,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и политический фантом,” ПОЛИС, No. 4 (1993); Беляева Л. А.,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а обрет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ОЦИС, No. 10 (1993).

¹⁰²- Горшков М. К., Тихонова Н. Е., Чепуренко А. Ю.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осква: РНИСиНП, РОССПЭН, 1999), сс. 232~237.

¹⁰³- Аврамова Е. М., Овчарова Л. Н.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год после августа,” ОНС, No. 1 (2000), сс. 15~22.

¹⁰⁴- Беляева Л. А.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и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Academia, 2001), сс. 158~176.

심리적 측면에서 양극 분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대중이라는 의견도 있었다.¹⁰⁵ 따라서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법치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간계층의 형성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였다.¹⁰⁶ 실제로 중간계층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가 200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중심적인’ 중간계층은 10%를 채 넘지 못한 채 중간계층은 아직 러시아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¹⁰⁷

표 IV-4 각 사회계층 비율 및 월 소득 규모에 대한 연구사례

1997년 연구사례(Косалс Л. Я., Ръ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перехода к рынку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с. 305.)				
상층(3~5%)	중상층(15%)	중간층(20%)	중하층(20%)	빈곤층(40%)
\$2,000 이상	\$1,000~2,000	\$100~1,000	\$50~100	\$50 이하
2003년 연구사례(Симонян Р. Х.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иф или реальность?" ОНС, № 1 (2008), с. 45.)				
상층(5%)	중상층(10%)	중간층(20%)	하층(25%)	빈곤층(40%)
\$2,000 이상	\$1,000~2,000	\$120~1,000	\$60~120	\$60 이하

¹⁰⁵- Дилигенский Г. Г. Люди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фон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2002), сс. 272~279.

¹⁰⁶- Шкаратан О. И. Российский порядок: вектор перемен (Москва: Вита-Пресс, 2004), сс. 158~177.

¹⁰⁷- Аврамова Е. М. Средние классы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Москва: Гендальф, 2003).

하지만 2003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하층은 60.2%, 중간계층은 33.9%, 상층은 5.9%로 나타나면서 중간계층의 성장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¹⁰⁸ 더 나아가 2007년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주변적인’ 중간계층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층만도 25%를 넘으면서 모두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내면적인 연구 결과 이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까지 기대되는 평가가 나왔고, 게다가 이들은 모스크바뿐이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다.¹⁰⁹ 사회계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선두 역할을 하는 티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 역시 2007년 시점에서 하층은 38~40%, 상층은 5~7%, 나머지 중하층을 포함하여 중간계층은 약 55%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¹¹⁰ 즉, 2000년대에 들어와 중간계층은 일정한 형성 단계를 넘어서서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의 중요한 집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계에서 다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¹¹¹

¹⁰⁸-이 조사는 11개 지역과 모스크바 및 상페테르부르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 연구방법과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Тихонова Н. Е., Давыдова Н. М., Попова И.П. “Метод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ОЦИС, No. 6 (2004), сс. 120~130; Горшков М. К., Тихонова Н. Е. Россия - 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Богатые. Бедные. Средний класс (Москва: Наука, 2004); Тихонова Н. Е. “Новые капиталисты’: кто они?” ОНС, No. 2 (2005), сс. 29~39.

¹⁰⁹-Аврамова Е. М. “Средний класс эпохи Путина,” ОНС, No. 1 (2008), сс. 28~36.

¹¹⁰-Тихонова Н. Е. “Модель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вр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подходов,” Россия реформирующаяся. Ежегодник. Выпуск 6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7), с. 145.

¹¹¹-한국에서도 러시아 지역 및 중간계층 관련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김우승, 홍성원, 조영관, 김태진, 강성희, 최성권, “러시아 중간계급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모스크바 지역의 소규모 기업가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2호 (한국슬라브학회, 2006), pp. 235~273; 김우승, 홍성원, 조영관,

러시아에서 중간계층의 존재는 향후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장 경제 하 러시아인의 보편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원천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제도의 현실화

낮은 수준이었지만 소련시대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복지 제도는 현재 와해된 상태이다.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사회복지 제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현실성이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분야에서 유효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는 세금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는데, 2001년부터 통일된 13%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기업체의 세금인하 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누적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이 마련되었다. 2001~2003년에는 토지매매법이 채택되었으며, 게다가 토지문제에서 개별 지역의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세관법과 노동법도 채택되었다.¹¹²

2004년 여름에는 모든 사회적 혜택을 폐지하는 연방법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약 1억 300만 명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가장 손해를 입은 기존의 수혜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극동 연해주의 소규모 기업가와 의식구조,” 『아시아학보』, 제10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7), pp. 129~163; 최우익,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한국슬라브학회, 2008), pp. 449~473.

¹¹²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37~353.

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2005년 초 러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태는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는 모스크바와 다른 지역 간의, 그리고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엄청난 소득의 차이이다. 푸틴은 러시아 국가 및 국민의 부를 높이고자 네 가지 주요 국민 프로젝트(2005년 9월) 사업을 일으켰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건강’, ‘수준 높은 교육’, ‘충분하고 안락한 주택’, ‘농산업 복합 발전’ 등이었다. 2007년에는 이를 위해 2,300억 루블이 투입되었다. 당시 부총리였던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경제성장과 정치안정화 덕분에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들을 제거하고, 특히 유아 및 산모의 사망률을 저하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도시에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료센터가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출산증명’ 프로젝트가 가동되었고, 국민의 공중보건지도가 수행되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¹¹³

2000년대 초반에는 모든 교육체계의 기본적인 현대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신세대에게 시장과 관련한 직업은 특히 인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전문가, 금융인, 매니저, 법조인 등이 그러한 인기 종목이다. 사설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였고, 대학생 수는 2배가 늘었다(2003년 4백만 명). 2003년 9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에 가입하여 고등교육 영역에서 유럽 표준과 기준을 의무적

¹¹³-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с. 343~344.

으로 따르게 되었다. 1999년 6월에 29개 유럽 국가에 의해 서명된 볼로냐 선언은 유럽 국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된 고등교육체계의 창설을 위한 것이다. 선진 시장경제기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의 국가 예산 책정에서 교육과 학문의 발전은 가장 주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¹¹⁴

아래의 표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물질적 만족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로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간접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 만족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부정적 견해는 줄고 있다. 물론 변한 것이 없다는 응답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 표 IV-5 '작년에 비해 당신과 가족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단위: 응답 비율(%))

응답	1990	1994	1998	2002	2006
더 좋아졌다	14	21	15	25	31
변한 것이 없다	31	36	33	48	51
더 나빠졌다	50	42	49	25	14
응답곤란	5	1	3	2	5

출처: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7), сс. 182, 199;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2), сс. 173, 190.

이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및 보호 제도들이 마련되거나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 현실적 성과를 높이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힘을 잃은 소비에트 시대

¹¹⁴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Граф, 2008), сс. 343~344.

I
II
III
IV
V

의 제도들이 구축되고 새로운 현실적 제도들이 수립되는 것은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관문일 수밖에 없다.

(3) 세계화 속의 러시아 위상 구축

20세기 말 가속화된 지구화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구화 현상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그 밖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값싼 천연자원과 노동자원의 국가로 위치 지워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부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 즉, 이주, 고용, 사회분야의 개혁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한다.

노동이주를 포함하여 대규모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부’ 국가의 빈곤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주변부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묘한 이주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다. 그것은 ‘주변부’ 국가에 특징적인 ‘두뇌 유출’ 현상과 독립국가연합,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미숙련노동력의 이주 흐름이다. 후자는 주로 ‘중심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중심부’ 국가처럼 러시아로부터 자본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서구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을 흡수하기 위해 주택이나 대출을 제공하곤 한다. 1990년대에 피크를 이루었던 지식인의 유출은 현재 수그러들었지만, 정치 및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문맹 및 미숙련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지출로 인해 아직 경제성장이 보장되기보다는 노동생산성이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¹¹⁵

¹¹⁵-Водолагин А. В. “Социальны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 России,” <http://www.ni-journal.ru/archive/2006/n4_06/hron306/001a390a> (검색일: 2011.4.18).

2000년대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시도한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여 할 과제들이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다른 산업기업들은 경쟁성을 가지기 힘들며,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생산적 고용이 억제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제도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원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2005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교육, 의료, 주택,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과거에 러시아가 추구했던 사회정책, 혹은 헌법 원리에도 어긋날 수 있지만,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로 재확립되는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러시아는 지구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고립되거나 차원이 다른 나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비용·편익 범주 고찰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모아 간추려 본다면, 러시아 체제전환의 목표는 서구적 현대화(대체로 유럽식 복지국가), 근대적 도시화, 국민의 빈곤퇴치와 사회적 보호,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제도의 발전, 중간계층의 형성과 성

I
II
III
IV
V

장, 교육과 학문의 발전, 원활한 사회적 소통과 언론매체의 역할 수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IV-2**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비용·편익 범주

(-)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비용 범주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편익 범주 (+)	
인구위기	↔		
서민 빈곤화	↔	⇒	중간계층의 출현
사회복지 약화	↔	⇒	현실적 사회개혁
지배엘리트 등장	↔	⇒	세계화 확대
지역간 격차 심화	↔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꼽는다면, 인구위기, 노동자·농민의 영락화, 사회복지제도의 약화, 정치·경제엘리트의 등장, 지역 간 격차 현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커다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시장경제의 적응, 사회보장제도의 현실화, 세계화 현상의 편입 등은 체제전환의 결과 드러난 러시아의 사회적 모습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러시아 체제전환의 결과는 편익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1999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상태가 호전된 몇 가지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으며, 농업생산량이 일부 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은 사실 체제전환의 편익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과 2000년대 석

유 및 가스 등의 천연자원 수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의 조성으로부터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주변 경제체제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계경제 속에서 기민하게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체제전환의 편익이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던 소련 체제의 사회복지제도가 와해되었고, 반면 시장체제의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재정착된 상태이다. 여전히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적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적인 수준의 중간계층 및 시민단체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는 러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며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변화되어 나타날 러시아 사회 모습의 단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이러한 현상들은 러시아 체제전환의 편익들로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만은 없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한 과제가 남아 있으며, 실제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양한 사회적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단, 과거에 비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수단과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체제전환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V. 결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남북통일에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많은 편익을 가져다준다. 우선 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 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로 인해 시민사회가 발전하며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인권의 신장으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비용으로는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는 점이다. 또한,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의회 의원이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I
II
III
IV
V

뿐만 아니라 당내 주요 인물이나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당내 민주화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갖는 비용으로는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에 의해 시민사회 내에 사회적 다양성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다원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국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며, 사회적 문제들의 해소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민 정치의식의 고양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극우민족주의의 등장 등 지배이데올로기의 공백상태를 이용한 과도기적 극단주의적 경향은 경계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경제적 의의에 있어 중요한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사유화와 같은 법률적 시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자연 발생적인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불균형적인 초기조건하에서 선진국 경제에 맞추어진 거시경제정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이식은 기존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국가의 구축이라는 점이다.

시장화는 다양한 의미에서 구 사회주의 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편익을 제공한다. 우선 국가의 계획에 의해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면서 인위적으로 유지되어온 비효율적 조정기제가 시장기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에 대해 경

제외적 차원에서 강요되었던 외부요인들의 영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유인 동기들이 시장경제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전반적 해체와 비효율적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산감소부분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감소 현상은 국가별 차이를 보이며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 감소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은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37.7%까지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정착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대추구현상과 지하경제화현상을 가속화한다. 지대 추구 및 계층분화의 심화는 경제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체제전환에 있어 국가의 효율적 역할은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강한 국가가 아닌 효율적 국가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해체를 대행할 효율적 국가의 형성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긍정적 결과 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자유로운 삶과 다양한 가치의 추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계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삶에 대한 구조적 위협과 정치적 테러

I
II
III
IV
V

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핵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삶의 추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간계층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7년 조사는 ‘주변적인’ 중간계층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층만도 25%를 넘어 중간계층이 60%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 2000년대에 들어 정체성을 지니는 중요 사회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있어 중간계층은 향후 시민사회의 형성과 아울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현실적 복지체제도 형성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폐쇄적인 상태를 넘어 지구촌 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여러 가지 점에서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 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현재까지 약 68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궁핍화의 진행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은 수개월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시장화의 이면에 많은 기업의 폐쇄와 대량 실업현상이 나타났으며, 사회

주의적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시스템의 약화를 수반했다. 보다 심각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문제는 경제의 부패화·범죄화였다. 부패는 주로 관료들에 의해 행해졌으며, 범죄화는 또한 지하시장 및 비공식 경제 부문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었다.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사회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 권력에 근접한 소수 집단에 의한 사유화 과정에서 부의 강탈, 정당성을 결여한 빈부격차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가장 큰 부작용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함의들의 통일 비용·편익 개념에 대한 직접적 적용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일반적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의 주요한 목표가 동일하지 않으며, 북한과 소련·동유럽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은 시장과 민주화·자유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통일에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의 비용·편익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진. 『벼랑에 선 사람들: 헝가리에서 알바니아까지』. 서울: 한승, 1991.

이은구. 『시장경제화에 따른 동유럽 국민의 사회경제적 행태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04.

이종수.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Ash, Garton Timothy. *We The People*. London: Granta Books, 1990.

Balasz, Istvan. *The Control of Governmental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Act in Hungary*. Yearbook.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2.

Baldersheim, H., M. Illner and H. Wollman (eds.). *Local Democracy in Post-Communist Europe*. Opladen: Urban Research International, 2003.

Berglund, S., J. Ekman and H. F. Aarebrot. *The Handbook of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2004.

Bolony, Jozsef. *Magyarország kormanyai 1848-1992*. Budapest: Akademiai Kiado, 1992.

Brogan, Patrick. *Eastern Europe 1939-1989: Fifty Years War*.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1990.

- Bruszt, Laszlo and Janos Simon. *A választások éve.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1.
- Coulson, Andrew (ed.). *Local Government in Eastern Europe: Eastablishing Democracy at the Grassroots*. Aldershot: Edward Elgar, 1995.
- Deacon, Bob. *The New Eastern Europe: Social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age, 1992.
- East, Roger.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 London: Pinter Publishers, 1992.
-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1999-2000*, 2000.
- _____. *Nations in Transition*, 2010a.
- _____. *Freedom in the World*, 2010b.
- Goskomstat of Russia. *Russia in Figures: concise statistical handbook*. Moscow: Goskomstat of Russia, 1998.
- Handelman, Stephe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Horvath, M. Tamas. *The Story of the Local Electoral System: Hungary 1990*.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1.
- _____. *The Structure of the Hungarian Local Government. Yearbook*.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_____. *Parties in Local Transition: East-Central European Comparison Unpublished Working Paper*.

-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3.
- Hubacek, Ondrej. "The Parliamentary and The Municipal Elections seem from the Local Level: A Comparison."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Istvan, Kukorell. *We changed it like this*. Budapest: Law School in ELLE, 1988.
- Kotz, David M. and Weir Fred.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London: Routledge, 2007.
- Kowalczyk, Andrzej. "Local Elections in Poland, 1990."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Vinhas de Souza L. *A Different Country. Russia's Economic Resurgence*.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07.
- Paul, Gregory R. and Robert C. Stuart.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New York: Addison Wesley, 2000.
- Peteri, Gabor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1.
- Révész, Gábor. *Perestroika in Eastern Europe: Hungary's Economic Transformation, 1945-1988*. London: Westview Press, 1990.
- Ringen, Stein and Wallace Claire. *Societies in Transition: East-Central Europe Today*. Aldershot: Avebury, 1994.
- Roberts, Andrew. *The Quality of Democracy in Eastern Europe*:

- Public Preferences and Policy Refor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Rose, Richard and Neil Munro. *Parties and Elections in new european democracies*. Washington, D.C.: CQ Press, 2003.
- Sjöberg, Orjan and L. Michael. *Economic Change in the Balkan State*. London: Pinter Publishers, 1991.
- Szabo, Gabor. *Localities in Transition: Re-emergency of Self-government system*.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1.
- Szoboszalai, Gy. (ed.).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Hungary*. Budapest: Akademiai Kiado, 1985.
- Swianiewicz, Pawel. *Local Government in Poland: An Overview*. Bergen: Local Democracy and Innovation, 1992.
- Swianiewicz, Pawel and Mirosław Grochowski. *Local democracy in Poland: Experience and Challenges*. Tre Kroner: Roskilde University, 1992.
- Toth, I. Janos. Members and Factions in Parliament.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2.
- Vinhas de Souza, L. *A Different Country. Russia's Economic Resurgence*.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07.
- Webster, William H. *Russian organized crime/ 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New York: CSIS, 1997.
- Welsh, A William (ed.). *Survey Research and Public Attitud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 Pergamon Press, 1981.
- Webster, William H. *Russian organized crime/ 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New York: CSIS, 1997.
- Williams, Phil (ed.).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FRANK CASS & CO LTD, 1997.
- Woodruff, David M. *Money Unmade: Barter and the Fate of Russian Capit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Авраамова Е. М. *Средние классы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Москва: Гендальф, 2003.
- Андрюонов В. Д. *Рос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Москва: Экономика, 1999.
- Барулин В. С. *Российский человек в XX веке.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е себя*. СПб.: Алетейя, 2000.
- Беляева Л. А.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и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Academia, 2001.
- Горшков М. К., Тихонова Н. Е., Чепуренко А. Ю.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осква: РНИСиНЦ, РОССПЭН, 1999.
- Горшков М. К., Тихонова Н. Е. *Россия – 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Богатые. Бедные. Средний класс*. Москва: Наука, 2004.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 2005*. Москва: Стат.сб., 2005.
- _____.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01.

- _____.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крат. стат. сб.*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1999.
- Дилигенский Г. Г. *Люди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фон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2002.
- Заславская Т. И. *Социет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оссийско го общества.* Москва: Дело, 2002.
- _____. *Современное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оциаль ный механизм трансформации.* Москва: Дело, 2004.
- Измозик В. С., Рудник С. Н.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Вентана -Граф, 2008.
- Климанов, В. В.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УР, 2003.
- Косалс Л. Я., 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перехода к рынку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 Львов Д. С.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тия.* Москва: Экзамен, 2002.
- Мартынов В. А., Автономов В. С., Осадчая И. М. (Ответ. ред.) *Перех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ос сийские проблемы, мировой опыт.* Москва: Экономика, 2004.
- Мирово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в России: на пороге структурных перемен: Доклад Мирового банк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а, 1993.
- Петраков, Н. Я. *Русская рулет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ценою 150 миллионов жизни.* М.: Экономика, 1998.
-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9.

- _____.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1.
- _____.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5.
- _____.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2009.
- _____.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2.
- _____.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5.
- _____.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07.
- _____.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9: Стат. сб.* Москва: Росста, 2009.
- _____.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Москва, 2010.
- _____.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хота и лесоводство в России 2009.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9.
- Рывкина Р. В. *Соци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форм*.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2004.
- Рязанцев С. В. *Турдовая миграц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и Балтии: тенденции, последствия, регулирование*. Москва: Формула права, 2007.
- Сенчагов, В. К. (Под ред.) *Эконом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о-Финансы-Банки*. Москва: Финстатинформ, 1998.
- Сидорович, А. В. (Под ред.) *Кур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Общие осно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Микроэкономика. Макроэкономика. Осно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Дело и Сервис>, 2007.

- Суринов А. Е.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1992-2002*. Москва: Статистика России, 2003.
- Тощенко Ж. Т.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ЮНИТИ-ДАНА, 2005.
- Троицкий Е. С.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и в обстановке кризиса с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ая группа <Граница>, 2009.
- Шафранов-Куцев Г. Ф. *Социология*. Москв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книга, 2008.
- Шестаков, А. В.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Дашков и К.», 2000.
- Шкаратан О. И. *Российский порядок: вектор перемен*. Москва: Вита-Пресс, 2004.
- Шкарин В. В., Величковский Б. Т., Позднякова М. А. Социальный стресс и мед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России.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2006.
- Ясин, Е. Г.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ки и панорама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Курс лекций*. 2-е изд. Москва: ГУ ВШЭ, 2003.

2. 논문

- 김우승 외. “러시아 중간계급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모스크바 지역의 소규모 기업가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2호(한국슬라브학회), 2006.
- 김우승 외. “극동 연해주의 소규모 기업가와 의식구조.” 『아시아학보』. 제10권 1호(한국아시아학회), 2007.

- 김창진. “평온한 사회, 분열되는 국가.” 『경제와 사회』. 제42호(한울), 1999.
- 박정원.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동구 민주이행의 특성.” 『국제정치논총』. 제35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 성원용. “러시아 농업개혁의 패러독스: 개인부업농과 상품·화폐관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비교경제연구』. 제18권 1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11.
- _____. “러시아의 대외교역 구조변화와 세계경제로의 편입.” 『비교경제연구』. 제7권 2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00.
- _____.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신자유주의와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러시아연구』. 제9권 2호(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9.
- _____. “현대 러시아의 농업개혁과 농업구조의 변화.” 『슬라브학보』. 제14권 1호(한국슬라브학회), 1999.
- 유진숙. “이행기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우파정당의 발전: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윤덕희.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 _____. “중유럽의 정당정치와 유럽통합: 정파적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 이규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현실사회주의체제 변혁과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한국정치학회), 1994.
- _____. “현실사회주의 체제전환론: 정치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4호(통일연구원), 1995.

- 이은구. “동구 신지배체제의 역동적 변화과정 연구: 헝가리 Antall체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통일연구원), 1993.
- _____. “탈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있어서 지방자치의 정치경제적 갈등 구조: 탈사회주의화의 재개념과 일시각.” 『한국행정학보』. 제28권 3호(한국행정학회), 1994.
- _____. “동구 정치·경제개혁과 좌파정당의 재집권.” 『한국행정학보』. 제29권 4호(한국행정학회), 1995.
- _____. “민주화 이후 동유럽 소수민족문제와 민족정치: 트란실바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4호(한국정치학회), 1999.
- 이은구 외. “체제전환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1호(한국정치학회), 1997.
- 이충묵. “후기공산주의 동유럽 정당체계의 형성: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의 사례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이현출. “동유럽의 민주화와 정당체계의 안정성: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조한승. “동유럽의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비민주적 체제 선호: 민주화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동아시아 연구』. 제9호(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4.
- 최우익. “현대 러시아의 사회 계급계층 변화.” 『슬라브학보』. 제15권 1호(한국슬라브학회), 2000.
- _____.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한국슬라브학회), 2008.
- _____.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

- 『러시아연구』. 제15권 2호(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 _____. “러시아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18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_____. “러시아의 인구감소와 국제이주민의 유입 - 인적자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 Agh, A. “The Parliamentary Way to Democracy.” *The Case of Hungary*. Budapest: Papers on Democratic Transition. No. 2, 1991.
- _____. “A strukturálispatthelyzet eve.”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2.
- Andrew, Barnes. “What’s the Difference? Industrial Privatisation and Agricultural Land Reform in Russia, 1990-1996.”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5, 1998.
- Bozoki, Andras. “Democracy Across the Negotiating Table.” *The New Hungarian Quarterly*. Vol. 125, 1992.
- Bugaric, Bojan. “Populism,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1, 2008.
- Ericson, R. E. and B. W. Ickes. “A Model of Russia’s ‘Virtual Economy’.” *BOFIT Discussion papers*. No. 10, 2000.
- Erik Mathijs and Johan F. M. Swinnen.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and the

-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1, October 1998.
- Gaddy, C. and B. Ickes “Russia’s virtual Economy.” *Foreign Affairs*. Vol. 77, No. 5, 1998.
- _____. “An Accounting Model of the virtual Economy in Russia.”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Vol. 40, No. 2, 1999.
- Horvath, M. Tamas. “A tuleles kockazata.” *Ter es Tarsadalom*. No. 4, 1989.
- _____. “The Reformed Hungarian Self-Government.” *Yearbook*.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2.
- Hubacek, Ondrej. “The Parliamentary and The Municipal Elections seem from the Local Level: A Comparison.”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Hunga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rliamentary Parties in Hungary.” *Fact Sheet on Hungary*. No. 7, 1994.
- Illonski, Gabriella.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Hungar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5, 1994.
- Illner, Michal.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in the Czech Republic (Past, Present and Future).”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 Budapest: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1.
- _____. “First Steps Toward Local Democracy - The Election

- Year 1990 in a Czech Municipality.”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1.
- _____. “Reconstruction of Local Democracy in the Czech Republic.” *Working paper*. Prague: Institute of Sociology. Czechoslovakia Academy of Sciences, 1992.
- Istvan, Kukorell. “We changed it like this.” in the text book of Law School in ELLE. Budapest, 1988.
- Jerez-Mir, Miguel, Jose Real-Dato, Rafael Vazquez-Garcia. “Ident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Perceptions of Political Elites and Public Opinion: A Comparison between Southern and Post-Communist Central-Eastern Europe.”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6, 2009.
- Keri, L. “A Kormany also onallo eve, 1991.”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2.
- Kolodko, Grzegorz W.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sustained growth. Implications for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2, 1999.
- Korkut, Um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Invigoration of Civil Society: The Case of Hungary and Poland.” *East European Quarterly*. Vol. XXXIX, No. 2, 2005.
- Korosenyi, A. “Revival of the Past or New Beginning?: The Nature of Post-Communist Politics. in György Szoboszlai (ed.).” *Democracy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Budapest:

-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1.
- Kowalczyk, Andrzej. "Local Elections in Poland, 1990." in Gabor Peteri (ed.). *Events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Bruszt, Laszlo and Janos Simon. "A választások éve."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1991.
- Markus, G. Gyorgy. "Parties, Camps and Cleavages in Post-Communist Hungary. Is the Weakness of Social Democratic Forces System?" in György Szoboszlai (ed.). *Flying Blind: Emerging Democracies in East-Central Europe*.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Yearbook, 1992.
- Mathijs, Erik and Johan F. M. Swinnen.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7, No. 1, 1998.
- Palonen, Emilia. "Political Polarisation and Populism in Contemporary Hungary." *Parliamentary Affairs*. Vol. 62, No. 2, 2009.
- Rose, Richard. "Escaping From Absolute Dissatisfaction: A Trial and Error Model of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4, No. 4, 1992.
- Schopflin, G. "The Condition of Post-Communism." *The New Hungarian Quarterly*. Vol. 32, No. 122, 1991.
- Szente, Zoltan. "Understanding Hungarian Central Government System." *Working Paper*.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3.

- Swianiewicz, Pawel. "Local Government in Poland: Towards its own economic strategies." in Ingemar Elander & Mattias Gustafsson (ed.). *The Re-Emergence of Local Self-government in Central Europe: the First Experience*. Orebo: Center for Housing and Urban Research, 1991.
- _____. "Local Government Reforms in Central European Countries: Some Differences and Common Issues." in I. Elander & Gustafsson (ed.). *The Re-Emergence of Local Government in Central Europe: the First Experience*. Orebo: Centre for Housing and Urban Research, 1991.
- _____. "Local Government in Poland in Transition: The Case of Wesola Town." in Gabor Peteri (ed.). *Event and Changes*. Budapest: Hungar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1.
- _____. "The Polish Experience of Local Democracy: Is progress being made?" *Policy and Politics*. Vol. 20, No. 2, 1992.
- Toepler, Stefan & L. M. Salamon. "NGO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Empirical Overview." *Eastern European Quarterly*. Vol. 37, No. 3, 2003.
- Tompson, William.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Unravelling the workings of Russia's 'virtual economy'." *Economy and Society*. Vol. 28, No. 2, 1999.
- Toth, Janos Istvan. "Members and Factions in Parliament." in Magyarország politikai evkonyve, 1992.
- Urbán, László. "Why was the Hungarian transition exceptionally peaceful?" in György Szoboszlai (ed.). *Democracy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Budapest: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1.

William, Tompson.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Unravelling the workings of Russia's 'virtual economy'." *Economy and Society*. Vol. 28, No. 2, 1999.

Авраамова Е. М. Овчарова Л. Н.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год после августа." *ОНС*. No. 1, 2000.

Авраамова Е. М. "Средний класс эпохи Путина." *ОНС*. No. 1, 2008.

Акош Силади. "Беда и катастрофа в России." *ВКН: Конец Ельцинщины*. Будапешт: Венгерский институт русистики, 1999.

Александр Анисим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вобода - не причина богатства, а его следствие." *Эксперт*. 13 января 1997.

Аукуционек С. "Бартер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2, 1998.

Беляева Л. А.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а обрет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ОЦИС*. No. 10, 1993.

_____. "Материальное неравенство в России. Реальность и тенденции." *СОЦИС*. No. 11, 2007.

Исправников, В. О.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No. 6, 1998.

Кордонский С. Г.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

ранство. Трансформац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рынка.” *Иное: Россия как предмет*. Москва: Русский институт, 1995.

Косалс Л.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как особ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0, 1998.

Макаров В. Клейнер Г. “Бартер в Росс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4, 1999.

Найшуль В. “Высшая и последняя стадия социализма.” *Погружение в трясину*. Москва: Дело, 1991.

Росстат. Бюллетень “Численность и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9 году(выпуск 2010 г.)” Москва, 2010.

Сабуров Е. Шохин А. “Принципы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5 марта, 2000.

Симонян Р. Х.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иф или реальность?” *ОНС*. No. 1, 2008.

Тихонова Н. Е., Давыдова Н. М., Попова И.П. “Метод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ОЦИС*. No. 6, 2004.

Тихонова Н. Е. “‘Новые капиталисты’: кто они?” *ОНС*. No. 2, 2005.

_____. “Модель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вр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подходов.” Россия реформирующаяся. Ежегодник. Выпуск 6.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7.

Умов В. И.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ость и политический фантом.” *ПОЛИС*. No. 4, 1993.
Четвернина, Т. и Лакунина Л.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труда и механизмы ее преодолени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2, 1998.

Яковлев, А. “О причинах бартер неплатежей и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4, 1999.

3. 기타자료

The Economist.

Hungarian Observer.

Magyar Nemzet.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10, <<http://www.transparency.com>>.

Радикальна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траны и ее издержки, <<http://bookishman.com/395.html>>.

Водолагин А. В. “Социальны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 России,” <http://www.ni-journal.ru/archive/2006/n4_06/hron306/001a390a>.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기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외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외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외교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2,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희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근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	---------------------	-------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외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출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11-02

체제전환 비용 ·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 박형중 · 성원용
이은구 · 최우익

www.kinu.or.kr

